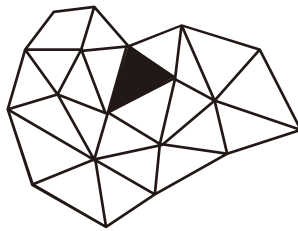


# 인권단체연석회의를 기억하다



**2004-2017 인권운동의 도전**

지은이 | 미류 랑희 안병주 이은정

역은이 | 대용 미류 이은정

디자인 | 언제나봄그대곁에

펴낸이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이메일 | hrcomm2017@gmail.com

펴낸날 | 2018년 2월 28일

---

##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록을 엮어 내며

---

10년의 역사를 정리해두자고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13년입니다. 10년 치 기록을 여기저기 수소문해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놓았는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모아준 기록들에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짐은 무거워지는데 잠시 멈추고 나니 다시 손덜 엄두가 안 났습니다.

어느새 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한국사회는 크게 한 번 들썩였습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도 2017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의 이름이 점점 기억에서 지워질까 두려워서는 아닙니다. 기록으로 묶어서 부여잡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름이라면 굳이 드러내려 애 쓰지도 않았고, 기록이라면 잘 보관만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변화와 함께 인권운동이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어디로 가려는가.

인권회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당연하게도, 잘한 것만큼 못한 것들이 있고, 아끼는 만큼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급한 현안을 다루기에는 너무 무거웠고 차분히 무언가 함께하기에는 늘 현안에 쫓겼습니다.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걱정을 10년 넘도록 반복했으니 ‘인권회의’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인권회의는 희미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기억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 질문에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소속단체들이 서로를 통해 각자의 운동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소속단체들에게 인권회의는 가까웠던 때보다 멀리 있던 시간이 훨씬 오랜 연대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함보다는 애뜻함, 아쉬움보다는 미안함이 우리를 엮어 세웠습니다. 떠들썩한 자리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외로운 자리라면 기꺼이 찾아올 동료들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일에 치여 달려가고 싶은 현장에 발길이 닿지 않을 때 우리 중 누군가는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갈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권운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들로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어디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운동의 실마리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킨 광장의 촛불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어지며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요? 인권운동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며 세상을 바꿔야 할까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인권운동이 어떤 시간을 보내와 지금 어디쯤 있는지 함께 살피고 싶었습니다. 처음의 기획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을 인권아카이브에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역사와 연표를 중심으로 간추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14년의 역사를 압축하느라 소속단체들 하나 하나의 소중한 기여와 발걸음을 섬세하게 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책이 인권회의에 관한 기록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권회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이자 인권운동에 관한 질문이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운동이 맺어온 인연들과도 기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까칠하다며 타박을 하고, 때로는 말이 너무 많다고, 때로는 말이 너무 없다고 하면서도 인권회의를 깊이 아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인권운동이 틀에 갇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러내준 목소리들에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싶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 자화자찬 일

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우리 잘 걸어가고 있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어디 어떻게 가나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든, ‘지금껏 잘 왔듯 앞으로도 잘 갈 거야’ 응원하는 마음으로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5년 전 모아둔 기록만으로는 책을 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록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인권연구소 ‘창’이 시작한 인권아카이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008년 초 한시적으로 가동된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저지 및 독립성 쟁취를 위한 공대위’의 남은 재정이 마침 인권운동더하기로 전해졌고, 덕분에 책을 내고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운동은 ‘인권’으로 다시 어떤 역사를 써나갈까요? 인권회의에서 인권운동더하기로 이어지는 시간을 기억해줄 당신과 함께 쓰고 싶습니다.

2018년 2월 28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록을 엮어 내며 2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걸어온 길

2003년	6
2004년	7
2005년	14
2006년	18
2007년	26
2008년	35
2009년	42
2010년	47
2011년	53
2012년	59
2013년	62
2014년	66
2015년	69
2016년	73
2017년	78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80

국가폭력에 맞서 집단적 저항의 힘을 지키다	82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를 촉구하다	83
인권 의제가 싹트고 어울리며 퍼져나가는 자리가 되다	84
인권운동의 전략을 세우려는 도전을 멈추지 않다	86
수평적 연대구조를 위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다	87
다시, 인권운동의 길을 내다	89

인권단체연석회의에 함께 한 단체들 92

부록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 관련 주요 문서	94
인권단체연석회의 연표	98

---

#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걸어온 길

2003~2017

## ‘인권단체들’의 공동행동

2003년 10월 인권단체 비상시국 성명(노동기본권 탄압을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안 철회하라) 발표 이후, 인권단체들의 집중적인 공동행동이 이뤄졌다. 공동행동은 “독자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전체 운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을 내걸고 11월 주간 행동을 벌였다. 이후 “인권운동진영을 각인”시켰지만 “운동진영에서 지원세력으로 인식되는 한계”는 바꾸지 못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정세에 행위자로 인식되도록 하여야 할 과제”를 남기며 ‘인권단체들’이라는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12월에는 4대 인권사안(이라크 추가 파병, 테러방지법, 집시법 개악, 한-칠레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며 매일 저녁 국회 앞 촛불집회(2차 인권 살리기 주간)를 가졌다. 인권단체가 불씨가 되자, 물꼬를 트자는 등의 목표가 있었으나 “현재의 인권운동 활동가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12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인권활동가 4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였고 이후 ‘인권단체들’의 방향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편, 현안대응과 동시에 노동인권실태조사팀(6개 단체)을 구성하여 증언대회 등을 열고, 경찰 폭력조사팀(4개 단체)을 구성하여 노동자대회(11.9.)에 대한 경찰 폭력진압 진상조사와 증언대회 등을 연다. 경찰폭력조사팀은 이후 부안에서의 경찰폭력 조사 보고 활동을 이어갔다.

“독자적인 행동은  
함께해서  
전체운동에 기여”



사진\_참세상

1월 ‘인권단체들’(27~29개 단체)은 공동행동을 평가한 후 해소를 결정했다. “인권운동단체간의, 인권활동가 내의 연대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공동행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토론되었다. “평소의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 “새로운 상상력”, “대 국회 투쟁에서 교섭력”, “인권단체들이 동원하고 조직할 수 있는 대중적인 역량” 등이 부족한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때 토론된 한계들이 연대체 구성 논의에서 ‘극복되어야 할 무엇’으로 다루어지는데, 그 중 인권운동의 전략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다. hrnet(인권활동가대회에서 만들어진 메일링리스트)을 통한 소통이 신속하지만 체계적이고 정례적인 공유 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권단체들’은 공동행동 과정에서 쌓은 신뢰와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바탕으로 2월부터 ‘새 연대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인권단체들의 연대 틀 마련을 위해 그 필요성이나 구성, 내용 등을 여러 단체들과 함께 나누며 만들어가기 위해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갔고 세 차례의 간담회를 열게 된다.

3.19. 첫 번째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1년 인권 과제 중간 점검 및 평가>가 제출되었고 인권운동진영의 과제로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1) 인권운동진영의 연대 강화 ; 인권운동진영의 총체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현실이므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 (2) 민중들의 저항을 옹호하자 ; 민중운동은 격렬하게 분

출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기만적인 개혁정책으로 고립된 속에서 진행될 여지가 매우 크므로 인권운동은 국가폭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와 감시를 통해 민중 저항을 압살하려는 정부의 기도를 막아내야 함. (3) 인권운동의 전략적 방침을 확정하자 ; 김대중 정부에 이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완성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권 상황에서 인권운동이 진보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방침을 확정하는 것이 시급. (4) 인권 의제를 확장하자 ; 차별, 정보인권,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평화, 북한 인권, 과거청산, 집시법, 국가보안법,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제 개혁, 국가인권위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체제 구축, 기타 개별 단체들이 관심 갖고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소통과 과제의 공유. 또한 <인권단체 열린회의를 제안합니다>는 새로운 연대체 구성이 제기된 배경을 밝히며 인권단체들의 공동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직되는 “회의-과정”의 위상으로 ‘열린 회의’를 제안했다. 상설적 연대기구에 대한 제안이기보다는 연대의 조건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본활동으로 연간 인권보고서 작성, 월별 인권동향 발간 등이 제안되었다. 당시 간담회에는 24개 단체가 참여했고 “인권단체라는 이름으로 가끔이라도 묶이는 것에 동의”하는지(사안별, 분야별 대응을 넘는다는 의미) 단체별로 의견을 들어보았다. 논의에서는 정세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인권 상황(소

수자인권 관련 의제나 전문 영역 등)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우려, 다양한 연대체가 옥상옥 형태를 띠게 되는 문제, 인권운동을 모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역 인권단체의 경우 인권단체의 연대 틀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연대체에 내용이 축적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의 논점이 제기되었고 연대질서의 위상과 운영방식을 안건으로 하는 2차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4.6. 2차 간담회에서는 ‘새 연대체 구성에 합의할 수 있는 원칙’으로 △ 다양성과 민주적 과정, △ 낮은 수위에서 점차 높은 수위로, 닫힌 구조보다는 열린 구조로, △ 신뢰와 협동의 규율, 소수자, 특수 영역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긴장된 감수성, △ 참여하는 어느 단위나 개인도 전체회의의 동의 없이 연대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매월 정기회의와 임기 1년의 운영진 선임 등도 모색되었다. 4.29. 3차 간담회에서는 운영원칙 일반과 공동행동 조직방식, 인권단체 연석회의 참여 기준이 마련되었다.

2004년 5월 27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1차 정기회의가 열린다.

인권회의 구성을 위한 간담회는 인권단체들의 공동 활동으로 17대 국회 입법투쟁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정했고 인권회의 1차 정기회의가 열리기 전 두 차례의 워크숍이 열렸다. 인권회의 1차 정기회의에서 의견서 초안을 검토했는데 특정 인권법안들에 대해 시기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인권법안의 경중을 가릴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도 있었으나, △ 입법과제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피해보자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들에 명시된 법안의 경우 시기적 중요성이 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6월로 활동이 중단될 위기)는 점을 들어 구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에 추가하기로 했다. 2차 정기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못한 점, 국책사업에 의한 지역주민의 인권침해가 누락된 점이 지적되어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6.10.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회의 의견서를 발표했다지만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협업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입법과제 대응 방안은 별로 논의되지 못했다. 후속활동으로 정당, 청와대, 법무부 등에 의견서 발송, 법무부장관과 민주노동당 면담 등이 이루어졌으며 의견서를 책자로 제작해 모든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6월 10일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발족을 공식적으로 알린 날이다.

## 국회 개혁입법 논의 개입과 촉구

당시 개혁입법으로 주요현안이 되었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전면폐지를 권고하자 국회에 완전 수용을 촉구(8.24.)하였다. 과거청산법에 관해서는 과거청산과 인권운동을 주제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9.18)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법안 대응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며 과거청산에 인권적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두 법안에 대해 인권활동가 개인연명 형식으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 - 이제 그만,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 상황을 끝장내자>를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의 공동선언으로 발표(11.3)하였다.

## 2기 국가인권위원회 인선대응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회의는 국가인권위와 긴장과 협력적 견제 관계를 유지했다.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법안 등 현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필요에 따라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2004년에는 2기 인선절차가 진행되었다. 인권회의는 1기 인선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권단체 공동의 인선기준을 논의하여 ‘국가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10.21)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김호준 상임위원이 정치적 인선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명되었고, 1기 위원들의 임기가 11.24로 만료되었음에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추천하지 않아 3주 이상 전임자들이 계속 업무를 하는 파행사태가 이어져 규탄성명(12.17)을 발표했다.

## KT(전 한국통신)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대응

1차 정기회의에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정책진정 등을 제안했다. KT가 직원 중 일부에 대해 ‘명예퇴직 거부’, ‘114 분사 시 분사 거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상품판매 전담부서로 일괄 인사조치한 후 지속적인 차별과 감시를 자행했던 것이다. 판매지역 미배정, 판촉물 미지급 등의 기업 내 왕따, 시간별 6하 원칙으로 활동 내용 보고하라는 지시, 개개인에 대한 추척과 채증자료 집적 등의 상황을 공유하고 인권회의 차원에서 대응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에 항의서한 발송,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피해자 증언대회를 집행했고 7.7. 증언대회에는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노동감시’의 문제를 공유했고 이후 전국 규모의 집담회도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백서로 인쇄하였고 노동자들의 다면성 인성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진행 후 법적 대응을 위한 대책위 구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2005년 국가인권위가 진정을 기각,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자 항의방문, 항의 집회 등을 진행했다.

## 평화권 모임과 전범민중재판

2003년 ‘인권단체들’의 공동행동에서도 이라크 파병 반대는 주요한 요구였다. 그러나 파병 반대국민행동의 계획을 지켜보는 정도 외의 활동은 없었다. 6월 고 김선일 피살사건 전후로 인권단체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주요 논의는 평화권모임에서 이루어졌고 전범민중재판이 제안되었다. 전범민중재판에 인권회의 차원으로 결합하였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기소인 모집 등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았다. 전범민중재판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라크 전쟁을 되새기고 풀뿌리 평화운동단체들이 네트워킹되는 성과가 남았다고 평가되었다. 2006년 평택 투쟁을 거치며 평화적 생존권을 제기한 인권회의는 2007년에 주제별 사업팀으로 반전평화팀을 구성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모색하면서 평화놀이터,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중단되었다.

## 정립회관 농성 대응

2차 정기회의에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정립회관의 비민주적 운영에 항의하며 시작된 농성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를 제안했으나 인권회의 차원으로 진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3차 정기회의에서는 안산노동인권센터가 정립회관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및 항의서한 발송을 제안했고 인권회의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인권회의 소속단체인 한국DPI의 의견을 먼저 확인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노조 정립회관 지부, 공대위, 정립회관 사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항의서한을 작성했는데 그 직후 곰두리봉사회가 농성장을 침탈했다. 항의서한 전달에 대해 한국소아마비협회는 반박성명을 발표했고 4차 정기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공동진상조사와 공개토론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9월 정립회관 폭력 사태에 대해 인권회의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1차 정기회의에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는 보고와 제안이 있었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8.10. 재발족하면서 참여가 제안되었으나 인권회의 차원으로 결합하지는 않았다. 2004년 말 사상 초유의 집단 노상단식과 대규모 촛불집회 등의 투쟁이 있었으나 인권단체들의 결합은 몇몇 단체에 국한돼있었다. 2007년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가입을 결정했으나 역시 인권회의 차원의 적극적 활동은 없었다.

## 12월 인권주간 집중행동

7차 정기회의(11월 말)에서 인권주간 집중행동을 계획했으나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이 없어 논의와 집행이 확인되지 않으나, 소수의 단체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무모하게 계획만 크게 잡았던 비현실성을 반성하는 운영진회의 기록은 남아있다.

시심민주화

사진\_참세상



## 2004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연간 인권보고서는 인권단체들의 연대 틀을 모색하면서 기본활동으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인권(운동) 상황을 조망하면서 인권운동의 중장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구상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인권회의의 6차 정기회의에서 연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고 8차 정기회의에서 기획안을 검토한 후 목차별 집필단체를 정했다. 9차 정기회의에서 인권보고서 집필방향과 기획안이 제출되었으나 원고 취합이 계속 늦어졌다. 2004년 말부터 편집위원회가 논의를 하면서 원고를 검토했고 5월 11일 <2004 인권운동보고서>가 출간됐다. 한국의 인권운동을 인권활동가들의 시각으로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다는 취지에 충실한 책이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전체 운동을 관통하는 운동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분야별 집필을 담당할 활동가들의 평가에 내용을 그대로 맡기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출간 비용은 다산인권재단이 지원한 300만 원으로 충당되었다.

2005년 인권운동보고서 발간을 위해 2006년 4월 정기회의에서 기획안을 정하고 집필자를 선정하기도 했으나 원고가 모이지 않아 9월 정기회의에서는 약식 발간을 고민하다가 결국 출간되지 못했다. <2004 인권운동보고서>가 인권회의의 유일한 연간보고서로 남은 셈이다.

## 인권단체 경찰 대응팀 구성

6.9.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증인 대회를 개최했다. 사업의 목표와 대상이 불분명했다고 평가하면서 집회 시위에서 경찰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안되었고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이 구성됐다. 10.4. 남영동 옛 보안분실 앞에서 인권경찰 비전선 포식이 열리는 데 맞서 <인권 없는 인권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1.24. APEC 투쟁에서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활동, 전용철 농민 사망 사건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 12.22. 기동단 해체, 허준영 총장 사퇴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 등의 활동을 인권회의 차원으로 이어갔다. 이에 대해 긴박한 정세 속에서 인권단체 공동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점, 진상조사활동이라는 인권단체 고유의 역할과 과제를 가지고 범대위에 결합해 활동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APEC 정상회의 대응과 관련해서 “반전 반신자유주의가 인권단체들이 지금껏 해 온 활동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니만큼 APEC 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하자”는 제안이 17차 정기회의 때 있었고 인권회의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공유되었지만 경찰폭력 대응 활동 이외 다른 활동은 진행되지 못했다.

## 국가인권위 1차 NAP 권고안 대응

NAP 권고안은 한국사회의 인권전략과 관련한 국가부문의 계획이 망라되는 것이라, 2004년부터 인권회의 차원에서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4차 정기회의에서 인권회의를 중심으로 각 단체가 가진 전문성을 총화하여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각 단체들이 영역별로 문제를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정리하기로 했다. 2005년 6월 국가인권위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권단체와 협의 일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8월 국가인권위가 권고안 초안을 보냈고 9월 인권회의 차원의 검토 회의를 가졌다. 의견서 제출과 압박으로 권고안에 인권회의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국가인권위에 대한 인권회의 위상이 높아진 점, 의견서 작성 과정에 여러 인권단체들과 의제별 연대모임들이 참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NAP 이행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대응 방향에 대한 공동의 입장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 기본권 세미나

2006년 하반기 개헌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재검토하고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을 정리하자는 문제의식이 제출되었다. 14차 정기회의에서 ‘기본권 연구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확정(11~13차 회의록이 없어서 논의 배경이나 첫 제안은 확인되지 않음)되었고 15차 정기회의에서 목표를 인권회의 기본권 내용 확정으로 정하고 활동 단위 명칭은 ‘기본권 대응팀’으로 수정했다. 민주법연이 세미나를 책임지기로 했고, 1강 국순옥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10회의 기본권 조항 세미나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렸다. 세미나 주제는 1\_헌법과 기본권(국순옥), 2\_법 앞의 평등(김승환), 3\_인신의 자유 및 관련 기본권, 4\_정보기본권(한상희), 5\_정신적 자유권(김종서), 6\_청구권적 기본권(김도균), 7\_사회권과 환경권(서경석), 8\_평화권 평화적 생존권(이경주), 9\_민주주의와 법치주의(정태욱), 10\_인권운동과 개헌(강경선)이었고, 자료는 인권회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기본권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양의 자리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으나 그 내용을 확산시키고 정리하는 일이 진행되지 못했다.



## 반차별 공동행동 - 이주노동자 인권

12차 정기회의(4월, 회의록 없음)에서 인권회의 사업으로 반차별 공동캠페인이 결정됐다.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제를 '이주노동자 인권'으로 확정했다. 캠페인의 취지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부각시키고 여론화하자, 단속 추방 과정의 반인권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추진팀이 구성되었고(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추모연대) 7.26. 출입국관리법 중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침해 조항 및 사례 발표회가 열려 70여명이 참석했다. 10.26.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과 차별로 숨겨진 이주노동자 합동 추모식이 여러 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진행되었고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뒤표지 안쪽에 '인권회의 반차별공동행동' 연속 광고가 게재되었다. 추진팀은 매월 정기회의를 하고 인권회의 차원으로 충실히 소통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실물적인 결과를 산출해냈다. 관련 행사에 인권회의 소속 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반성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인권회의 사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2006년에도 반차별 공동행동을 계속 하게 된다.

##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 행사

18차 정기회의에서 논의되었으나 회의록은 남아 있지 않다. 12.1. 세계인권선언 제57주년 기념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12.10. 세계인권선언 기념대회 및 인권난장을 인권회의에서 추진하고, 그 외 여러 단체들의 행사가 주간에 진행되었다. 인권단체 주도로 인권주간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이 평가로 남았다.

## 사회권전략팀과 사회권운동

2003년부터 활동했던 '경제자유구역 대응 인권단체 모임'과 '노동기본권 탄압 실태조사팀'이 2004년 3월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으로 통합되었다.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에서 인권운동의 공동의 전략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04년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5년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 발표 대응(4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노동기본권 탄압실태보고회(4.15), 최저임금투쟁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6.22),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불법파견 실태와 인권 침해사례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10.14.) 등을 진행하며 활동을 벌여나갔다. 사회권전략팀은 인권단체 연석회의 기본팀처럼 구성되었으나, 정기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점검되기보다는 인권회의와 별도의 영역별 네트워크처럼 운영되었다. 2006년 2월 인권회의 평가 자리에서 공유한 사회권운동에 대한 평가는 △ 인권운동진영의 사회권에 대한 감수성과 개입이 여전히 부족 △ 사회권, 권리의식과 실질적 내용 담기 △ 경계를 넘어서기 △ 사회권운동의 현실은 특정 운동으로 집중되는 경향에서 당사자와 접촉할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야 함 △ 인권운동이 사회권 영역에서 의제를 선점하지 못함, △ 인권단체의 역할은 각 운동들과의 연계 및 믿음의 운동,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구체적인 기획행동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경찰 폭력 대응\_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1월 ‘평화로운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만들어졌다. 농민 사망사건의 책임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있었음에도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을 시위대에 전가하고 집회시위를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묶어서 감시하겠다는 의도에 대해 민관합동위원회의 안에 반대하며 집회 시위 자유 관련 흐름에 대응할 단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경찰대응팀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결합하여 대응 단위를 구성하고 기존의 집시법 연석회의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확보 연석회의>로 확대 개편되면서 인권회의가 여기에 결합하기로 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과정에서 경찰 감시활동을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경찰감시단 조끼를 제작했고, 6월에는 인권 경찰 장례식 퍼포먼스, 집회시위 자유를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8월 포항건설노조 파업 투쟁 과정에서 하중근 열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여 ‘폭력살인 경찰 책임자 처벌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진행하고 하중근 열사 폭력살인 대응팀을 구성했다. 인권회의 차원의 일인시위를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포항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살인 폭력과公安 탄압을 정리하고 인권단체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했다. 8.30. 증언대회 개최, 9.21. 인권활동가 하루 행동의 날 등이 이어졌다. 9월 정기회의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경찰폭력 대응팀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대응팀을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의 2005년 활동 평가 토론회

2.8. 인권단체연석회의의 2005년 활동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2005년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을 평가하는 총괄 발제와 자유권/사회권/차별영역별 발제 및 지정토론이 진행된 1부, 2005년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토론하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총괄 발제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매우 복잡함.” “중심의제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함.” “가장 심각하고 보편적인 현상이 민중의 생존권이 탄압받는 것임.” “인권행위자들이 다변화한 것, 인권의 세속화 현상에 영향을 받는 바도 큼.” “국가가 인권행위자로 나서는 현상에 가장 앞서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임.” 등을 인권상황으로 짚었다. 인권운동 평가로 제시된 것은 △ 인권운동론이 없다, 운동이념과 이론의 급진화 요구됨 △ 인권운동의 전략 전술이 없다, 즉자적인 대응과 자족적인 형식의 운동 △ 운동의 파편화 현상 △ 대중적 기반이 없다, 대중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 속에서 운동 주체들을 어떻게 발굴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고민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전; 하위 파트너 경향 등이었다.

이어서 2006년 인권운동의 과제로 11가지가 제시되었다. 악화되는 민중생존권과 이에 대한 국가 탄압에 대한 대응, 개헌 국면에서의 기본권 수호, 반차별의식의 대중화, 인권교육의 전면화,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를 막기 위한 대응, 사법개혁의 최대화 건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각종 정보인권 침

해 사안에 대한 대응, 국가인권위 견제와 견인, 국가기관의 인권개혁에 대한 견인, 과거청산의 지속적인 추진, 수구집단에 의한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한 대응. 인권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과제로는 전략과제의 설정, 의제별 네트워크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인권회의의 조직형태 변화(느슨한 네트워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등이 제시되었다. 각론 발제는 인권운동의 거의 모든 사안을 종합하여 영역별로 이루어졌다.

이 평가 토론회에 대한 토론 내용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현안을 중심으로 기본사업 설정

2월 정기회의에서는 2006년 인권회의의 활동 기초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 인권회의 조직 발전의 토대를 형성, △ 사업별 추진팀을 구성해 실행주체와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대활동의 시스템을 실질화, △ 인권회의의 재편 전망에 대한 토론을 상설화하고 의제별, 지역별 네트워크 및 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 이에 따라 200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16개 단체가 응답했다. 인권회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많았으며 그를 위한 방안으로 실질적인 연대 사업팀을 만드는 것에 다수의 응답이 있었다. 인권회의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정치권 대응, 반차별 집중행동,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순서로 답변이 있었으며, 2006년 기획하여 대응해야 할 주제로, 민중생존권; 빈곤, 평화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이 다수 응답이었다.

2005년에 이어 계속 진행하는 기본사업으로 반차별 공동행동,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인권주간, 인권활동가대회를 정했다. 이후 정기회의에 제안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기본사업이 정해졌고, △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대응팀(동인련, kscrc, 천주교인권위, 전쟁없는세상), △ 시효배제운동팀(새사회연대, 추모연대, 천주교인권위, 불교인권위), △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으로 시작), △ 경찰 폭력 대응팀(민관공동위원회 대응을 위해 집회 시위의 자유 대응팀으로 제안되었으나 경

찰폭력 대응팀으로 재구성,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민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모연대, 평화인권연대), △ 차별금지법 대응팀(동인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미 FTA 대응(사회권전략팀), △ 용역 폭력 대응팀(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등)이 구성되었다. 인권회의가 2년간의 활동을 통해 인권운동진영의 대표적인 연대체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연대활동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한 해인데, 이 중 많은 팀들이 실제로 거의 운영되지 못했다.

###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대응활동

2월 00군 사건을 계기로 군대내 동성애자인권침해 대응활동을 진행했다. 인권회의는 군대내 동성애자인권침해 진상조사단에 참여해 당사자 전역, 인권침해 피해보상, 군대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관련 법조항 삭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후 당사자 전역과 당사자 인권침해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해소하였으며, 인권침해 관련 법령 조항의 삭제와 개정 활동을 과제로 확인했다.

## 반차별 공동행동 - HIV/AIDS 감염인 인권

3월 정기회의 전 취합한 설문 답변과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단체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차별공동행동의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고 4월 정기회의에서 HIV 감염인 인권을 주제로 정했다. 5월 정기회의에서 추진팀이 구성되었고 추진팀은 ‘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에도 결합하면서 인권회의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권회의 반차별공동행동으로, 차별 없는 별을 꿈꾸는 A's People 연중 캠페인 <HIV/AIDS 감염인, 차별 없는 별을 꿈꾸다>가 연중 진행되었다. 7.30. <약은 누구를 위해 팔리나>, 9.2. <직장 문을 열어라>, 9.23.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10.28. <빈곤, AIDS의 다른 이름>, 11월 <가장 가기 어려운 곳, 병원>, 12월 <AIDS 25년, 이제는 다르게>. 그리고 9.17. HIV/AIDS 감염인 인권 증언 “말할 게 있 수다!”가 감염인 3명의 공개 증언과 2명의 영상 증언, 질의 응답으로 100분간 진행되었고. 80여명이 참석했다. 감염인들이 최초로 공개 증언에 나선 자리로 의의가 큰 행사였다. 한편,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지지하는 선언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였고(<http://esaram.org/cam/cam.php>) 11월 초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1.28.~12.9. 에이즈의 날을 감염인 인권의 날로!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AIDS 25년, 이제는 다르게>, 감염인인권주간 선포 기

자회견을 시작으로 점심시간 길거리콘서트와 캠페인, 인권포럼 <한국의 에이즈,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감염인인권 문화제(11.30.), 감염인인권의 날 기자회견 및 항의행동(12.1.)이 진행되었다.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에이즈인권운동이 자리를 잡는 데에 기여했으나 인권회의가 이 의제를 얼마나 스스로 자기 의제화했는지 의문도 제기되었다. 2006년에는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에 결합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갔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불복종행동

3.6.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인권활동가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7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선언에 참여했고 이후 대추리의 빈집 하나를 정해 인권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기로 했다. 3.15. 경찰병력과 용역이 대대적으로 농지를 파괴하며 다수 부상자 및 연행자가 발생했는데 이때 다수의 인권활동가들이 연행되었고 3.18. 박래군, 조백기 활동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되었다. 3.20.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을 결성하면서 평화적 생존권을 '인권'으로 제기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연대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주 금요일을 인권단체가 평택에 결집하는 날로 정하였고 평택의 투쟁을 서울로 확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모색했으며 4월 정기회의에서 인권단체들이 현장팀과 서울팀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팀은 범대위 지침과 현장 상황 등을 기초로 인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 서울팀은 서울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항의행동을 조직하기로 했다. 5.4. 군대까지 동원한 대추분교 침탈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5.6. 인권회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과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다. 5.10.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5.17.부터 상시적인 감시단을 파견하여 대

추리 도두리 현장 인권감시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5.25. 군경에 의한 대추리 도두리 주민 인권유린 상황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에는 인권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결합하기로 했고, 매주 금요일 교보빌딩 앞 선전전과 동아일보 앞 촛불집회에도 적극적으로 기획, 참가했다.

6.13. 하반기 평택 투쟁과 관련하여 인권단체 활동 전략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진행했고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7.5.~7.9.)를 추진해 연인원 천 여 명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평화행진이 대추리로 들어가는 과정(7.8~9.)에서 벌어진 상인 폭력과 경찰의 대규모 폭력 연행에 대해 법적 대응도 진행했다. 7.19. 평화행진을 할퀴고 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 폭력 고발대회를 열었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대추리에서 여름나기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여 8.17~20. 연인원 45명이 참여해 마을잔치,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했고 여름나기 참가자들과 평화전망대를 지어 대형 바람개비, 현수막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인권회의는 평화적 생존권을 쟁점화하고 서울대책회의의 결성과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평택투쟁의 내용과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인권회의가 사회운동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었다.

##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 행사와 공동투쟁

2005년 주간행사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9월 정기회의에서부터 사업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민중총궐기에 맞춰 공동투쟁을 시도해보자는 문제의식이 제출되고 인권주간 공동투쟁을 위한 인권단체 긴급회의가 열려 3대 인권과제 및 20대 인권요구안을 확정했다. 12.6.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진행 및 민중총궐기 참여, 12.7. 3대 인권과제 및 20대 인권요구안 발표, 12.8. 평택 통행제한 규탄 및 국가인권위 결정 이행 촉구 경기도경 앞 기자회견, 12.11. 한국인권보고대회로 인권주간 행사가 진행되었다.

※ 3대 인권과제. △민중생존권과 한반도 평화 위협 노무현 정권 퇴진,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가로막는 반민주악법 개폐,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 20대 인권요구안. △민중생존권 파괴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중단 및 김지태 이장 석방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폐기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주거 의료 교육 무상 실시 △하중근 열사 폭력살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생존권적 저항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중단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반민주악법으로 구속된 양심수 석방 △민주적 사법개혁 연내 실시 △반인도적 국가폭력범죄 시효배제 입법 △억울한 죽음을 근절할 검시관법 제정 △사형제도 폐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익집단 개입 중단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정 △사회복지시설의 공동성과 민주적 운영,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확산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 인권활동가대회 공동주최

2002년 12월 제1회 인권활동가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인권활동가대회가 열렸다. 인권활동가대회는 1년에 한 번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인권운동의 연대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일부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준비에 참여했다. 2004년에 추진되었던 3회 인권활동가대회(2005.1.6~8.)에서는 “인권운동 연대, 어디쯤 왔나?”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열었다. 2005년 16차 정기회의에서 4회 인권활동가대회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주관’으로 준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당시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과 의견을 나누었으나 별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굳이 주최, 주관을 새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듣고 예년처럼 진행했다.

이 논의는 2006년으로 이어졌다. 인권활동가대회가 인권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들에게 유의미한 연대 공간이었다는 점, 대회의 기조가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준비모임과 인권단체들간의 소통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을 모아, 4회 준비모임과 인권회의가 공동 명의로 제5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인권회의가 준비모임에 참여하는 형태로 5회 인권활동가대회(2007.1.18~20.)를 진행했다. 이후로도 인권활동가대회의 주요 토론 프로그램을 인권회의가 기획, 집행하는 방식으로 준비에 참여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변화

NAP 추진과정을 거치면서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들과의 협력을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후 9월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중도사퇴하고 10월 안경환 신임 인권위원장이 취임했다. 인권회의는 조 위원장 사퇴와 관련된 쟁점, 안 위원장 취임사에서 드러난 인권현실에 대한 안이한 이해 각각에 관해 논평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_참세상

평화를  
택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운영개편을 위한 워크숍(2007.2.22.)을 통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출범이후 3년간 진행했던 연대운동의 평가로부터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인권운동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평가와 계획을 논의함에 있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역사성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와 기존의 연대운동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대운동의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보려 노력했다는 것을 중요한 지점으로 보았다. 특히 새로운 연대방식과 관련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사무국에 의한 대리주의를 경계하고, 소속단체와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연대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정기회의를 통해 연대활동을 촉진하는 회의체적 성격의 네트워크로 시작했다. 즉,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몇몇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연대운동의 새로운 실험을 지속한다는 관점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인권회의의 과제로 제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대의 기본적 조건으로서 상호이해와 공동의 인식을 위한 소통과 토론의 기획과 실행을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운영구조 안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지향하는 연대운동을 위해 각각의 현안별로 기본사업을 설정하는 것에서 탈피해 정세를 조망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활동을 형성시켜가기 위한 영역(인권운동의 중장기 과제)이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고, 그것의 기반을 형성해가는 작업 △ 운영진의 사무국

화와 대리주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정기회의라는 하나의 골간만 가지고 운영되는 체계가 아니라 기획-논의-결정-집행단위가 다층적으로 구성되는 다골간 네트워크로 질적 전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권회의 운영구조의 변화를 위해 주제별 사업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안 중심의 기본사업팀이 아니라 주제와 영역을 중심으로 주제별 사업팀을 구성해 해당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을 점검하고 공유하면서 사업들의 집행까지를 책임지는 팀이었다. 각 팀의 담당자는 인권회의 촉진자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성원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인권단체 간 소통 및 분야별 연대 강화를 위해 월례토론을 진행하기로 했고(3회 진행), 지역단체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권역별 모임을 구성하기로 했다. (울산, 부산, 대구 인권단체 간담회 1회 진행)

한편, 이때 워크숍에서 회의 구조의 혁신을 위해 인권회의 내 연대를 촉진하고, 사업을 점검하고, 코디할 전담 활동가 1인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활동가의 활동비는 인권회의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상근촉진자로 손상열 활동가 지원하여 활동했다. 운영위원회는 촉진자와 촉진단위(기존의 운영진)에 주제별 사업팀의 코디네이터까지로 구성해 정기회의 안건 정리, 시급한 사항에 대한 1차 논의 등 인권회의 운영을 조력하는 단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안정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4시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2월 26일 사망),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주노동자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여수화재참사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이번 참사로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다.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이러한 공동의 문제의식과 자발적 투쟁의 의지가 모여져 만들어진 투쟁조직으로 인권회의도 여기에 결합했다.

인권회의는 보호시설 및 단속실태조사, 개선안 마련작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인권실태 조사 보고 기자회견,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를 통해 바라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후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전환하고 인권회의도 결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월례토론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강제합동단속정책의 문제점>을 진행했다. 그러나 하반기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이주노동자 간부 표적단속,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대한 대응에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인권회의는 상반기 집중사업으로 6·10 항쟁 20주년 기념사업을 정했다. 87년 헌법과 여러 기본권의 현실을 조망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복원과 기본권의 확장을 위해 인권운동이 추구하는 담론과 과제를 모색·제시하고, 5·6월에 진행되는 여러 생존권 투쟁(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등) 및 FTA 반대투쟁 등과 연대해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생존권·평등·평화의 가치를 한국사회에 화두로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주제별 사업팀과 인권회의 소속단체들의 활동들을 모아내고,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 사이의 공동행동의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

민주주의 대토론회, 주간 상설전시(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 시효배제 등), FTA 협정체결 및 비정규약법 반대 인권활동가 선언, 국가인권위원회에 FTA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및 압박, 촛불문화제 "밥, 평화, 민주주의" 등 다양한 사업기획이 논의되었으나 '주간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결국 6·10항쟁 관련 민간조직위원회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끝났다. 다만, 87년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인권회의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대응팀이 제안한 <민주화 20년 누구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획연재를 <프레시안>에 게재했다.

## 한미 FTA 대응

2006년 FTA 반대투쟁과 관련해 4월 정기회의에서 대응팀이 제안되었고 인권단체 간담회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5.25. 간담회에서 ‘자유무역과 인권’, ‘FTA와 민주주의’ 등을 활동기조로, 토론회나 소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오갔고, 인권회의가 FTA 범국본에 가입하고 사회권전략팀을 중심으로 대응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나 이후 진행상황은 없었다.

2007년 다시 대응팀이 제안되었다. 민주주의 및 기본권을 기조로 인권적 비판 내용을 마련하고 인권단체간의 내용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범국본에도 안정적으로 결합하자는 제안이었다. 대응팀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눈으로 본 FTA> 보고서 발간,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기획했으나 보고서가 발간되었는지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FTA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 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등이 진행되었다.

## 생체여권대응팀 구성

한국 정부가 생체여권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제안되었다. 이에 앞서 6월 월례토론으로 ‘정보인권 현황과 과제’가 토론되기도 했다. 대응팀을 구성한 후 생체정보의 전자화와 인권침해에 대한 세미나, 국정감사 대응, 자료집 제작 등이 진행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모색했다.

생체여권팀은 2008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되기 전, 여권을 재발급받자는 행동을 제안하고 실행했다.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 청구, OECD장관회의 시민사회포럼 통해 외국활동가들과 연대 모색, 신분증명 세미나 등의 활동도 벌였다.

## 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법무부 NAP 대응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안이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인권단체를 둘러리 세우고 국가인권위조차 배제하는 법무부의 독단적인 추진이 문제로 드러났다. 인권회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무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인권관련 법안(검시관법, 시효배제, 로스쿨법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 에이즈예방법, 사회복지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여권법, 의료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인권회의 의견서를 작성해 6월 중순경(상임위가 시작되는 때)에 발표하고, 의원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에 각 단체별로 다루고 있는 법안에 대해 공유하고(FTA 비준안,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여권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연금관련법, 사법개혁 관련법안, 사형폐지특별법안, 국가보안법 등) 정기국회 개원일에 맞춰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인권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개최하는 것을 논의했다.

인권회의는 출범 당시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17대 국회의 입법관련 활동에 대해 인권단체의 총괄적인 입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후 진행된 결과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집시법 불복종, 인권의 이름으로 저항한다

한미 FTA, 평택 전쟁기지화, RSOI, 노사정로드맵 등 신자유주의 군사패권주의 세계화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가 확대되고 이에 맞서는 민중들의 자발적 집회 시위가 증가했다. 그러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제도적 탄압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도 심화되었다. 경찰폭력대응팀은 집회시위 자유 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제안하게 됐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마련하고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 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한 집시법 전면개정안 작업과 아울러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저항한다’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기획했다.

집시법 불복종 활동으로 ‘한미 FTA 반대 인권활동가 선언’을 발표했고 경찰폭력 불복종 선포식(3.28.), 집시법 불복종 집회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4.19.), 비신고집회(6.29.) 등이 진행됐다. 집시법 개악에 맞서 집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고 월례토론과 인권회의의 주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집시법연대회의에 경찰폭력대응팀이 참여하여 공동활동을 벌였다.

한편,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에까지 경찰의 통제가 확장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안녕하니?’ 전시회(7.17.)를 열었다. 민중들의 외침이 억압되는 현실을 문화적으로 비판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발언하는 민중의 것이라는 담론을 문화적으로 형상화하고 전시했다.

2006년 3월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의 쟁점에 대해 각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열고 이때 10여 개 단체가 참석하면서 차별금지법 대응 논의가 시작되었다. 인권회의 내부 입장 마련과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갖기로 했고 차별금지법 대응팀 구성이 제안됐으나 이후 활동이나 진행상황은 거의 없었다.

2007년 차별금지법 논의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법무부안이 발표되고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이 활동을 벌이면서 인권회의 차원의 논의도 시작되었다. 11월 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반차별운동을 사회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소수자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획이 모색되었다. 내용과 관련해 ‘합리적 기준 없이 어떠한 차별 사유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 금지의 법적 실효성; 최대 원칙을 우리의 안으로 삼고 가야 한다’는 쟁점이 정리되었다.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을 구성하기로 하고 이후 활동이 이어졌다. 반차별공동행동(준) 참가는 각 단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고, 인권회의는 공동행동(준)의 요청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인권회의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다가 성소수자 단체들의 즉

각적인 대응과 힘의 응집을 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도 인권회의 차원에서 힘을 싣거나 공동대응을 모색하지는 못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단체들의 인권주간 행사를 공유하고 그 중 인권보고대회와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2007 한국 인권보고대회(민변, 인권회의 공동 주최) 분야별 보고섹션에 경찰폭력, 성소수자 분야 발표를 맡았고 종합토론에서는 한국 인권상황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3월 호에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담은 글(“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이 게재되었다. 4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질의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소통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했고 6월에는 기사 삭제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범민련 남측 본부는 이주노동자 관련 부분에 대해 해명과 기사 수정을 했으나 성소수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인권회의는 36차(7월) 정기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범민련의 태도와 입장을 사실상 인권회의와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다. 2) 공식적인 입장(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운동사회 내외로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 3) 입장 표명과 공론화 이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범민련과 직접적인 연대활동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미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공대위의 경우 공대위의 입장을 요구하고 앞으로 제안되는 공대위에는 범민련과 공동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 공대위에 결합하지 않는다. 4) 소속단체들별로 이 사태에 대한 자기 입장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 정기회의에서 재론이 요구되어 결정사항이 조금 수정되었다. 공대위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에 주력하자는 것을 ‘우리의 문제의식을 알려나가고 연대기구 내에서 비판적인 토론을 조직’하자고, 앞으로 제안될 공대위의 경우 인권회의의 문제의식을 알리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공대위 활동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수정 결정하였다.

2008년 1월, 1.26 세계행동의 날 조직위원회와 관련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진보연대가 재론을 제안했다. 연대운동의 과정에서 연대체를 통해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구체적인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고 운동진영 전반의 성찰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오히려 한국의 운동에 존재하는 민족주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가 가진 위험성과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노선 논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동인련은, 민족주의/가족주의/인종주의까지 넓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고, 운동진영 전체를 상대로 싸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걱정이 된다는 등의 의견을 전했고, 두 단체가 의견을 조율하여 수정 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진보연대 측에서도 성소수자 단체와 범민련 간의 대화를 이끌어 보려고 비공식 제안을 했다. 2009년 1월 동성애자인권연대와 범민련 남측본부가 만났으나 며칠 후 “공개로 풀기는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왔고 이후 논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2009년 5월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인권회의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네트워크 회의에서 ‘범민련이 과거 지면상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황과, 그에 대한 유

감, 조속한 해결 바람’의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글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남사회는 갈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문제, 국제결혼, 영어만능적사고의 팽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유학과 이민자의 급증, 극단적 이기주의 만연, 종교의 포화상태, 외래자본의 예측성 심화, 서구문화의 침투 등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9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사회에 신자유주의 개방화, 세계의 일체화 구호가 밀고 들어오던 시점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은 달라도 결국은 이남사회가 민족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민족문화전통을 홀대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외래적으로 침습해 오고 그것이 또한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 속에서 이 문제들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과 노동권사업팀 준비모임

이랜드-뉴코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대규모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인권회의는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하고, 경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교육, 농성자 연행 과정에서의 경찰 폭력 대응, 인권침해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 규탄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후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을 열고 파업권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12월에는 노동권사업팀 준비모임으로 인권회의의 노동권 관련 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2007년에는 구속노동자후원회를 중심으로 구속노동자 사면촉구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_프레시안

비정규직 헌법권  
농민농부 중산하라!

2008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자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인권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는 농성 투쟁(1.24.~2.1.)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인권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비판과 견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인권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건인 활동은 약화되고 있었다는 평가를 하며 국가인권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의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대통령 직속기구화는 막아냈으나 정권은 국가인권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최윤희, 김양원 임명을 시도했고 인권회의는 이에 항의하는 성명 발표, 기자회견, 전원위원회 방청 및 피켓팅 등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김양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무산시키기도 했으며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을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진행했다. 이때 국가인권위가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며 엘리베이터 운영을 제한하기도 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이 건물을 점거해 ‘촛불집회 인권침해 10문 10답’ 결정이 늦어졌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요구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국가인권위원장의 사과를 전제로 한 비공개 면담도 진행됐다.

## 공권력 감시 및 대응팀 구성

인권회의는 특히 자유권 분야에서 가해지는 인권의 후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주의 반대’(국가폭력과 전면적인 민주주의 후퇴 저지)를 중심의제로 결정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국가보안법제를 활용한 사상의 탄압 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첨단 전자장비의 동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국가 형벌 강화론이 득세하는 등의 상황을 감시하고 대응할 집중팀이 필요했다. 이 팀은 경찰 폭력대응팀의 연장선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공권력 감시와 대응팀’으로 하여 ① 집회·시위 현장 공권력 감시 ② 자유권 법제의 후퇴에 대한 대응 ③ 경찰, 국정원, 검찰 등의 공안기관의 감시 ④ 구금·수용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⑤ 기타 자유권 영역에서 일어나는 국가폭력과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활동으로 하기로 했다.

6회 인권활동가대회의 인권운동 토론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마무리하는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에 기초하여 인권회의 2008년 사업 방향이 제안되었다. △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총체적 공격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 범인권운동진영의 연대와 발전을 위해 노력, △ 인권회의 공동의제 설정과 그에 따른 역할을 해냄으로써 인권운동진영 강화, △ 인권운동의 대중적 기반 마련, △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적극 활용.

당시 공통의제로 제출된 것은 다섯 가지였다. ①국가주의 반대(국가폭력과 전면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저지), ②개발주의 반대와 공공성 강화 ③차별반대 ④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 기능 강화 ⑤평화적 생존권의 확보. 이 중 인권회의는 국가주의 반대 의제에 활동을 집중하고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외의 진영들과도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폭력대응팀을 ‘공권력 감시 및 대응팀’으로 확대 재편했다.

또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 기능 강화 역시 인권회의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운영위원회가 맡아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인권운동진영의 네트워크가 새롭게 구성될 필요성을 예상하면서 단체들의 공동 사업을 기획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인권캠프와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사업이 공동의 사업으로 선정

되었다. 범인권운동진영의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 인권운동토론회를 열려고 했으나 진행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의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문제의식에서 노동절 거리 선전전이 제안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명박 정권 취임 후 발생한 노동 탄압 사례를 내용으로 하는 선전전이 진행되었고 이후 노동권팀 구성이 추진되었다.

노동권 관련 사안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인권적 입장으로 접근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사안 해결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이 서로 운동적 상승을 도모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회의 소속단체가 아니더라도 노동권팀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라면 참가를 열어두기로 했고 모든 논의 및 사업 내용은 인권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당시 인권회의에 제안되었던 서울메트로 부당인사발령 관련 인권침해 진상조사, 공무원 퇴출제 관련 대응 등이 노동권팀을 통해 진행되었다. 노동권과 인권 관련 주제에 대한 내부 세미나를 계획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노동권팀은 인권운동 내부에 노동권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팀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사업이 집중력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권팀 사업은 아니었으나 청구성심병원 인권실태조사에 인권회의가 결합하여 인권위 진정까지 진행했다.

인권캠프는 인권운동진영 내의 연대활동을 통해 인권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처음에는 인권단체와 대학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대학 내 인권동아리 구성의 촉발 등 인권활동가 재생산을 목표로 하며 ‘대학생인권캠프’를 열자고 했으나 명칭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인권캠프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인권회의 내부논의 이후 전체 인권단체로 확대 제안하여 준비했고, 사전준비를 위해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가자 조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생과 회사원, 취업 준비생 등 20대를 중심으로 제한 없이 참가를 조직하게 됐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촛불의 흐름이 5월 들어 매일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개별적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하던 인권단체들은 5.28. 모임을 열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집회시위를 지지 엄호하기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소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시민·정치적 권리 확보 투쟁에 나서고 있으므로 지지활동과 더불어 적극적인 인권적 기획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촛불인권지킴이기획단(촛불기획단)을 만들어 기획 논의와 집행을 이어갔다. 기획단은 경찰폭력에 맞서기 위해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감시카드를 배포하고 시민감시단을 모집, 교육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획 활동을 벌였다. 인권활동가들의 성명 배포, 대시민 호소문 제작 배포, 경찰폭력 사례 발표 및 어청수 경찰청장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경찰폭력인권침해 신고 카페 운영 및 사례 수집활동, 공안대책회의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등의 활동이 이어졌다.

한편, 6.10. 토론을 진행하면서 ‘민주주의는 차벽을 넘는다’ 직접민주주의 행동에 대해 고민을 이어갔고 당일 명박산성 앞에 스티로폼을 쌓는 데에도 참여했다. 이후 집시법 개정 운동, 경찰폭력에 대한 대응, 헌법1조 길거리 특강, ‘비폭력’에 대한 광장토론회, 비혼 행진 등을 진행했다. 점차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집시법 개정, 경찰감시 대응은 공감대가 맡아서 기획하고 집행하기로 하고 촛불기획팀은 촛

불집회로 촉발된 시민들의 직접행동과 직접민주주의를 이어가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인권선언 <헌법1조에 인권의 댓글을 달자>를 제안했다. 인권회의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사업을 이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회의는 8월 소속단체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단체들과 개인에게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을 제안했다. 10월 추진위를 구성하고 불씨 모으기를 시작했다. 각 분야별 릴레이 인권선언을 조직하고, 2008 인권선언 밑불때기 워크숍(11.8.), 2008 인권선언 포럼(11.19.)을 거쳐 12월 10일 2008 인권선언 선포 기자회견, 인권한마당 및 문화제를 진행했다. 2008년에 이어진 릴레이 인권선언(환자 인권 선언(5.26.), 주거권 선언(10.6.),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10.17.), 빛 없는 세상을 향한 금융피해자 인권 선언(11.21.), 이주노동자의 인권선언(11.30.),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12.1.), 성소수자 인권선언(12.1.), 장애인 인권선언(12.3.), 비정규직 인권선언(12.6.), 표현의 자유 선언(12.9.), 청소년인권선언(12.10.))은 2008 인권선언과 함께 2009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인권선언 사업에 대해서는 인권의식을 확장하고 연대하는 장으로서 긍정적이었으나 여러 주체들이 연대의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못하고 선언의 나열에 그쳤다는 아쉬움 등이 평가로 남았다.



헌법1조에  
인권의 댓글을  
달자

## 공안탄압 대응을 위해 모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이 시작된 이후 공안정국이 조성되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공안탄압 중단 캠페인 기획팀’을 꾸려 어청수 파면 촉구 서명 등을 진행했고 이후 공안탄압 대책기구로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을 제안했다. 공권력감시및대응팀이 여기에 결합했다. 인권회의는 ‘공안탄압대응을 위한 인권활동가 집담회’(8.19)를 열었고 8월 15일 집회 과잉대응을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경찰폭력 피해자들이 발언하면서 사회에 알리고 공감할 수 있는 보고대회, 공안탄압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법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획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공안탄압 대응 관련한 후속모임을 진행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인권침해 양상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인권침해 피해자가 침해 내용을 고발하고, 개인 삶에 끼친 영향을 증언하는 인권침해 고발대회를 기획했다. 2008년 촛불집회를 경험하면서 국가폭력에 저항하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과 함께 ‘내면의 촛불 빛나기’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권침해로서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드러냈다.

## 벌금 불복종 논의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강경 대응이 계속되었다. 전담체포조 현장 배치, 불법시위자에 대한 불관용 원칙, 전원즉심, 민사소송 방침 등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인권운동진영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실제로 부과된 벌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금 불복종 투쟁이 제안되었다. 2007년에 이미 ‘차라리 노역장을 살겠다’ 벌금 불복종 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과도한 벌금 형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하자는 제안이었으나 진행되지 못했고 2008년 노역과 수배 결의 선언 등의 기획논의 역시 실제로 집행되지 못했다.

## 18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18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각 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정 또는 개정 추진 법안들에 대한 진행상황, 제안이유, 의의, 필요성 등을 취합하여 인권회의 명의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인권회의는 2006년 김포사랑의 집 대책위, 성람 공투단에 참여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주요단체로 활동을 이어갔고, 인권회의 차원의 논의나 활동은 별로 없었다. 2008년에는 이 연대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탈시설 공투단에 참여했다. 종로구청 앞 농성에 인권회의 차원으로 결합하고 사이버시위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강제퇴거 금지

2009년 첫 회의 이틀 전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전날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인권회의는 민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와 함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의 중립성을 위해 범대위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진상조사가 완료되어 조사단이 해소된 뒤 범대위에 가입하고자 의견을 모았다.(이후 가입했는지 확인 못함) 2.23.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가 열렸다. 진상조사 내용에는 경찰의 살인진압뿐만 아니라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도 포함되었다. 진상조사단은 해산하지 않고 특검 청원, 국정조사 압박 등 활동을계속하기로 4.2.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용산참사 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편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이 용산범대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하면서 인권회의에서도 용산범대위 논의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4월 범국민청원·고발운동이 제안되어 인권회의 소속 각 단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기로 했고, 이후 범대위 논의나 활동 계획이 인권회의에서 공유되었다. 하반기 용산국민법정에도 강제퇴거 문제를 포함한 기소 내용을 준비하는 등 인권단체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성명 발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활동은 소속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범대위에 결합하면서 이루어졌다.

2010년 장례 이후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도 관련 활동은 단체별로 이루어졌고, 인권회의 차원의 활동은 2011년 8월 정기회의(79차)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운동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 후 제정 촉구 1만인 선언 등에 참여하기로 한 것, 매년 용산참사 추모주간에 일부 결합 정도로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인권운동이 맡은 역할이나 비중이 적지 않았으나, 인권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함께 지키다

5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권팀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전반을 다루는 인권침해 진상조사 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나날이 현장에서의 폭력이 심각해졌다. 용역과 경찰은 물과 의약품 반입조차 거부하며 최루액 투하, 테이저건 사용 등 폭력을 자행하고 있었다. 노동권팀은 현장 코디를 담당하면서 국내외 여론화, 문화행동, 법적 대응, 물 의약품 반입 직접행동,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결정 대응 등을 추진했다. 당시 현장 코디를 담당하던 활동가가 경찰감시활동 중 용역들에게 구타를 당해 인대를 크게 다쳤고 치료비 절반의 금액을 인권회의가 지불하기로 했다. 8월 이후 파업 당시 인권침해와 수사과정의 문제점 등을 정리한 백서 발간 작업을 함께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 자녀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도 인권회의가 함께하기로 했으나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다.

그 외 GM대우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무급순환휴직 규탄 성명 발표, 농협 CS 추진 규탄 기자회견 참가, HIV/AIDS감염인 노동권 확보와 ILO 대응을 위한 준비모임 참가, 발전노조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대회 등이 있었다. 연초 노동권팀 계획이었던 세미나, (가칭)노동과 인권 보고서(웹소식지), 7월 비정규직법 전면 확대 시행에 대응하는 ‘파견법 폐지를 위한 민중의회(가)’ 사업 등은 진행되지 못했다.

## 자유를 짓밟는 공권력에 맞서

촛불 1주년(5.2.) 집회 등에 대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이어갔다. 5.16 노동자대회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단 참여, 6.10 대회 인권침해감시 활동 및 고소고발, 경찰폭력 인권침해 사례 보고서 발간(6.12.), 경찰폭력 규탄 촛불문화제 “국민들 때리지 마!”(6.13.),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보고활동 등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 등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률 대응을 진행했다. 민주주의 수호와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했고 서울시내 100군데 집회신고 내기, 이명박 정권 집시법 적용 실태 보고회(5.28.)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표현의 자유를 위한 특급 파티 <굳 나잇 앤 굳 릭>을 공동주최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갔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를 공동 주최 하고 공감대가 집회시위의 자유 부문 발제를 맡았다.

## 국가인권위 축소 철회 투쟁에서 인권위공동행동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 흔들기가 지속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를 21% 축소(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이고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직제개정안이 통과했다. (3.27.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 통과)

인권회의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간담회를 제안해 ‘국가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 구성을 요청했다. 공투단(3.2.구성)은 이후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3.17.), 행안부 앞 농성(3.24~26.), 인권위 사무소가 있는 지역 인권단체들과 함께하는 시민 선전전과 서명 운동 등을 진행했다. 2009년에 진행된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과 축소 철회 투쟁은 지역인권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장애인권단체들의 집중된 투쟁이 힘을 발휘한 투쟁이었다. 지역사무소 폐쇄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인력의 축소가 예상되는 현안이었던 이유가 있다.

이후 수도권 지역 인권단체들이 3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인권위 독립성 보장 투쟁을 포함해 이명박 정권의 인권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단위를 꾸리기로 했다. 인권위 제자리 찾기 운동 워크숍과 간담회에서는 대응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세 가지 팀(담론대응팀, 기획팀, 현안대응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후 “인권”을 둘러싼 싸움을 위한 공동기구 제안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지키기 운동’

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둘러싼 싸움’(국가인권위 사안 포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인권회의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별 단체들에서 논의한 뒤 결합할 것을 요청했다. 7.17. 현병철 내정자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계속 이어졌는데 2009년에는 주로 인권위공동행동이 대응을 이어나갔다.

## 인권주간사업, 인권 10대뉴스 시작

인권선언 주간 연속 토론회 등을 기획했으나 진행되지 못했다. 민변과 인권보고대회를 공동 주최했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인권추락상 발표 및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8회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이 기획, 진행한 인권10대뉴스를 발표했고 이후 매년 인권회의가 인권10대뉴스를 선정, 발표하게 됐다.



사진\_오마이뉴스

2010

## 인권운동 연속간담회

2010년 한국의 인권상황을 가늠하면서 해당 분야의 주요 의제와 방향을 전망하고 공유하는 연속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내부 간담회로 ▲아프간 파병과 평화권(파병반대운동, 병역거부운동 등) ▲경찰 등 공안기구와 자유권(정보인권,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비정규투쟁과 노동권(불안정노동,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인권(이주민 인권,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청소년인권)을 진행하고 이후 인권운동의 현재와 나아갈 길(이명박 정부 출범, 경제위기, 촛불시위 등 달라진 지형에서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왔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려는 기획이었다. 내부간담회는 소수자 분야 간담회 2회, 평화권 분야 간담회 1회, 노동권 분야 간담회 2회가 3~4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나 종합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 야간집회금지 위헌 판결 후속 대응

야간집회금지에 대한 현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한나라당의 야간집회 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 시도에 대응활동을 했다. 국회의원들과 면담, 엽서보내기 등으로 압박하고 야간집회 시간제한에 대한 반대의견(10조 삭제)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다. 법률가들의 의견을 조직하면서 기자회견, 성명, 의견서 등을 발표했다. 동시에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하면서 후속활동(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 토론회, 재심청구모집)으로 중복집회금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장세환 의원실 용역보고서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관리 지침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발표했다.

오심나치사,  
당신의 책임인가



## G20을 내세운 인권 탄압에 맞서다

G20을 이유로 경호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야간집회 금지,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 공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인권회의는 특히 경직법 개정 내용 중 불심검문, 소지품 검사, 경찰장비 사용 등의 내용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경직법 개악 저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안적인 개정안 마련) 및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의 경우 시민들에게 제안하면서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조승수 의원실과 함께 대안입법으로 경직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은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한편 물포, 최루액 등 2009년부터 논의해온 경찰장비의 문제를 계속 이어가며 음향대포 도입 등 경찰장비규정을 바꾸려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 활동을 벌였다. 9.30.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에 이어 10.8. 긴급 토론회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 발사기), 왜 문제인가?>를 열었다. G20 대응에 관해서는 집회현장에서의 인권 침해감시활동을 진행하기로 하고 노동자대회(11.7), 코엑스 주변 현장답사(11.10), 국제민중공동행동(11.11)에서 감시 활동을 진행했고 이후 경찰의 대응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G20을 계기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를 준비하기로 하고 ‘G20과 인권 보고회’ 관련 임시팀을 꾸렸다. 이후 인권

단체 공동대응회의를 진행하고 인권단체들의 공동 행동으로,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협해지는 인권!>(11.5)를 NGA지구지역행동 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공동주최했다. 경제발전의 허상에 가려진 노동자의 삶, 안전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낙인찍으며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등 G20 정상회의를 통해 드러난 풍경들을 인권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이후 11.11. 국제민중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했다. 2011년 2월 G20과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보고서를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

##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프랭크 라 튀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외에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널리 알리고 공론화하기 위해 대응을 모색했다. 인권사회단체 전체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었다.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이 전달한 표현의 자유 실태는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문에 적절히 반영되었으며 국내에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슈가 많이 보도되고 거론되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조사기간 중 3명의 활동가가 연행되었다. 광화문 1인 시위는 2인 이상이 모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집시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였고 이후 2011년 미신고 집회 관련 활동으로 이어졌다.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해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가자는 취지의 ‘다과회’를 매주 일요일 오후에 진행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 수호 모임(이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로 명칭 변경)은 소환장 남발 등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대활동이었다. 공감대가 여기에 결합하면서 공권력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민주적 권리 탄압 등에 대해 공동대응을 진행했다. 특히 집시법 10조 삭제운동을 제안해 공권력감시대응팀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갔다.

## 지역단체들이 만나다

울산인권운동연대 10주년 기념 토론회(6.18~19)를 계기로 지역단체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어가자는 의견들이 오갔다. 한두 달에 한 번 모여 지역 인권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기로 했으나 이후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가 주는 상은 받지 않겠다

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의견서와 질의서를 전달했다. 인권위 활동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독재적인 인권위 운영에 반대하는 위원장 불신임운동을 조직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외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10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국가인권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당사자 능력 없음’ 등의 이유로 각하하고, 그 후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동반사퇴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11.4)을 시작으로 인권회의 소속단체를 포함하여 223개 단체(11.15 기준)가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를 구성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 7층에서 농성에 돌입(11.4)했고 현병철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션 언 및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영혜, 홍진표 등 더욱 보수적인 상임위원 인선이 이루어지고 이후 전문위원, 상담위원, 자문위원 64명이 사퇴했다(11.15). 대책회의는 농성과 함께 국가인권위 앞 거리 캠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서명운동, 국가인권위 9주년 맞이 촛불문화제와 출근저지투쟁을 벌였고 12월 3일에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무자격 가짜인권위원장 현병철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7층부터 11층까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중 발병한 폐렴이 악화된 우동민 활동가(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11년 1월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도 맞게 되었다.

한편, 인권논문·에세이·영상 공모전 수상 거부 선언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이 글들을 모아 발간하는 것을 후속사업으로 진행했다. 2011년 초 자료집을 100권 제작하여 인권회의 단체들과 수상 거부자 당사자들에게 나누었고, 인권영상과 글을 모아 인권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인권활동가들에게 쏟아지는 벌금 공동대응 모색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으로 진행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에 대해 벌금이 잇따라 부과되는 상황에서 공동대응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67차 정기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 각 단체에서 책임지고 인권회의 메일링 등으로 공유하면서 자발적 모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소속단체들의 상황과 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체로 활동가들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나 개인이 벌금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는 점, 정당한 인권활동에 대한 과잉처벌과 기소 남발이 인권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맥락에서 이뤄지는 공익적 문제이므로 운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확인되었다. 이에 운영진회의에서 지난 결정을 좀 더 구체화하는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8차 정기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모색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연행자들의 재판 상황들을 회의 때마다 공유하기로 했다. 이후 2011년 운영원칙 개정 논의를 거치며 운영원칙에 벌금, 재판, 부상 등에 대한 공동책임의 원칙을 명기하게 되었다.

## 2010 인권주간사업

민변과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공동주최하고 인권선언 62주년 기자회견에서 인권10대뉴스를 발표했다.

## 노동권 관련 다양한 연대 제안

노동권팀은 참여 단체가 줄어 활동 계획을 세우지 못했으나 노동권 관련 연대 요청이 점차 많아져 관련 대응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했다. 한양대학교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33명 해고 관련 집회 참여,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 유도과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참여(2.9. 보고대회), 동희오토 대책위 결합,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결합, C&M 노동조합 탄압 대응 회의 참여, GM 비정규직 인권위 진정, 공무원교사공대위 참관 등이 이루어졌고 연말부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관련 활동을 모색했다.

# 평생인권운동 아름답게

## 인권회의를 통한 소통의 안정화를 꾀한 정기회의 간담회

2011년 사업방향으로 △ 인권회의 안정화, △ 인권 현안에 입장 표명과 실천, △ 인권운동의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제안되었다. 논의 결과 우선 인권회의 안정화를 위해 내부 소통과 결속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전략 마련과 대중화 등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가자고 결정했다. 정기회의에서는 서로의 활동에 접점을 만들고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며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4월 차별금지법, 5월 사법개혁, 6월 국가인권위 대응 전략, 8월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하반기부터 인권운동 점검 및 기획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집행되지 못했다.

## 운영원칙을 다시 논의하다

변화된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운영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운영 원칙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4년 제정되고 2007년 33차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후로 별도의 논의나 확정된 운영원칙이 없었다. 2011년 73차, 74차 정기회의에서 검토한 후 75차(3월) 정기회의에서 운영원칙(안)을 논의했다. 이때 논의하고 수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권회의 이름으로 활동한 경우 체포, 벌금, 부상 등의 상황에 대한 공동책임 명시, △ 소속단체 가입 희망의 경우 '4개' 단체의 추천서 받는 것으로 가입 절차 강화, △ 월회비 1만원 '이상'으로 하여 재정여건이 나은 단체가 더 내기로 함, △ 후원사업의 재정후원 액수는 사안에 따라 판단, △ 소속단체 중 담당자가 없거나 운영이 안 되는 경우 의사 확인 및 조정과정을 거쳐 인권회의 소속단체 재확인, △ 수 회 이상 회의 참석을 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회의 참석은 못하지만 활동에 동의하고 회비를 내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의 위상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기로 했다.

## 현대차 비정규직 대량 징계, 노조 탈퇴 강요 진상조사

2010년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직접고용관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회는 파업 투쟁(2010.11.15~12.9.)을 벌였다. 점거농성을 해제한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가 2011년 3월 정기회의(75차)에서 제안됐고 참여하기로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대량 징계, 노조 탈퇴 강요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 평가 문서가 별지 처리되어 있어 기록 확인 못함.)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회의는 인권활동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고 각 단체들의 경험과 자료를 소통하고 참고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평가서로 정리했고(5.13.) 비정규직 지회에 직접 사과문을 전달했다(5.21.).

5월 정기회의(77차)에서 ‘인권옹호활동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기준 마련’ 계획이 논의되었고 6월 정기회의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내용 마련을 위한 논의 준비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맡아서 진행했다. 11월 정기회의(82차)에서 ‘인권옹호활동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검토했고, 2012년 1월(84차) 정기회의에서 확정했다.

## 노동권팀의 다양한 활동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시민추모제 준비위 참여가 제안됐고, 산업재해가 누구나 관련 있는 일상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참여하기로 했다. 노동권팀은 불교인권위와 위령제를 준비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도 참여하여 노동 관련 표현의 자유 영역(3팀 특수권력관계와 표현의 자유, 4팀 업무방해와 표현의 자유) 내용 마련에 함께했다. 그 외, KT 반기룡 씨 양심선언 기자회견, 재능 손배가압류 등 대응, 콜트콜텍 공동행동 등과 투기자본 대응 토론회, 노동감시 대응(9.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활동(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 구성) 결합, 반응역프로젝트(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 활동) 결합 등의 활동이 있었다. 5월경부터 노동권팀은 참여단체들의 회의가 사실상 중단돼 팀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재정비, 재구성을 포함한 진로 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팀 운영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희망의 버스’를 제안했다. 희망버스는 이후 폭넓은 흐름으로 이어지며 5차까지 진행되었고 인권활동가들이 무지개버스를 조직하는 등 힘을 모았으나 공감대의 경찰감시활동을 제외하면 인권회의 차원에서 논의나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강정마을과 연대를 시작하다

5월 정기회의(77차)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전국 시민행동의 날’이 제안되었다. 전쟁없는세상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인권회의 소속단체들이 재정 후원, 현수막 보내기, 마을 방문 등 힘을 보태기로 했고 이후 강정마을 관련 활동이 이어졌다. 9.3. 평화야 걷자, 구럼비평화축제 등을 준비하며 평화의 비행기가 제안되고 인권회의가 최대한 조직하기로 결정했으며 날라리 평화유랑단에 운영진이 결합하기로 했다. 이후 제주해군기지반대 전국대책회의에 인권회의가 결합하기로 결정했다.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구성

2010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조사활동을 벌인 이후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NGO 대표단 파견, 표현의 자유 한국 보고서 발표와 간담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권고사항 이행촉구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0년 하반기에 네티즌들과 소통하면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 제도적 문제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나누고 공감대에서는 더욱 확장된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확산을 기획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체 구성을 위해 관련 인권사회 단체에 제안했다. 3차례 간담회 결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① 표현의 자유를 침해·제한하는 각종 제도, 규제에 대해 연구 및 사례 정리 ②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연구 및 대안적인 정책생산 ③ 정책제안의 내용들을 법제화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수호운동 기획, 집행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했다. 6월 출범과 함께 연속포럼을 진행하면서 의제별 팀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집회시위 자유 침해의 수단이 된 미신고집회 처벌 대응

2010년부터 미신고집회라는 명목의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기자회견,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추모제, 문화제 등 다양한 표현의 방식에 대해 기준도 불명확한 미신고집회로 간주하여 처벌(기소, 벌금, 소환 등)하는 경찰의 행태에 문제제기하고,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들을 사회적 문제로 환기하면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법학자 및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학술대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를 통해 집회 신고제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냈고 이 활동은 2012년에도 이어진다.

## 현병철 사퇴 촉구 긴급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 10주년 토론회

현병철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평가회의 결과, 대책회의는 해소하되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연대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제안으로 <국가인권위 10주년 토론회> 공동주최를 결정했고, 학술토론회로 풀리지 않으면서 인권운동의 인권위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함께 준비하여 참여하기로 했다. 인권회의는 인권위 설립 투쟁부터 10년간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전도 열었다.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 인권행동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12.5~10)을 공표하고 집중행동을 하기로 했다.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를 민변과 공동주최하고 인권회의는 인권이슈 총괄기획으로 참여했다. 이때 인권활동가들의 공동행동으로 우리사회 인권현실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변화, 시정을 촉구하는 기조로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00인 1인 시위’(12.8.)를 진행했다. 하루 동안 전국 인권이슈가 있는 현장 곳곳(100곳 이상)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가 벌어졌고 사진을 취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2012년 인권단체 달력으로 제작, 배포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차별 없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만들기

반차별공동행동은 2010년 11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모임을 제안하는 간담회를 열었고 인권회의는 12월 회의에서 참여를 결정했다. 차별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 조장 세력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 법무부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

2011년 1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족했고 4월 정기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제외하고 인권회의 차원의 활동은 없었다. 12월 ‘차별 없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1인시위’에서 인권회의가 일주일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후 교육청 농성 지지 활동 등으로 이어졌다.



사진\_천주교인권위원회

2012년 사업계획의 논의 결과 기획과 현안을 결합해 인권회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에 대한 대응, 현병철 임기 만료와 관련한 국가인권위 대응 등이 결정되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동의 논의와 집행이 가능하도록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진이 구성되지 않아 매월 정기회의 안전 준비 및 회의 진행 등을 소속단체들이 돌아가면서하기로 했다. 이후 인권회의의 역사성과 의의 등을 이어가면서 전망과 역할을 논의하고 조직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인권회의 발전전략 TFT’를 구성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1월 정기회의에서 2012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며 총선 시기 인권운동진영의 활동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2월 정기회의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풍부히 하는 의견을 나눴다. 인권운동진영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과거에 없던 활동을 새롭게 만드는 만큼 함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슈 파이팅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고 인권외제의 나열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권운동, 선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2.29)에서는 인권운동 차원의 선거 대응의 의미와 방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선거 대응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공동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를 발표(6.14)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대선 시기에는 인권단체 정책제안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공감대는 2011년부터 논의해온 경찰개혁과제를 공감넷의 국정원개혁과제와 함께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공안기구 개혁과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각 후보 답변서에 대한 평가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활동  
이어져

총선 시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4월 정책 제안 발표회 이후 자료집을 배포하면서 후속활동을 이어갔다. <프레시안>과 함께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를 진행했다.

미신고집회 해산명령에 썩기를  
박다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5.6)가 나온 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알리는 기획을 논의했다. 공감대는 미신고집회 해산명령뿐만 아니라 차벽과 이동제한에 대한 판례도 포함하여 집회시위관리에 대한 경찰의 변화를 촉구하고, 집회시위자들이 판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판례들을 적극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부문의 활동가나 집회 주최단위(노조, 각 단체, 투쟁사업장 등)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열어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투쟁단위, 농성장 등을 직접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다.

## 현병철 연임 반대

현병철 임기종료 후 후임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있었다. 그런데 후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 연임 내정이 발표됐다. 인권회의와 인권위공동행동은 긴급회의(6.12)를 갖고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임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하여 6.21. 전국 3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현병철 연임 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긴급행동’을 출범시켰다. 긴급행동은 그간 현병철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행동을 부각시키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수차례의 기자회견, 각 정당 면담 및 국회 인사청문회 대응, 시민 등 1600명 반대선언, 각 정당 대선후보자 입장표명 촉구, 각계 및 해외 입장 조직, 국가인권위 앞 집중농성, 청와대 앞 릴레이 면담촉구 및 트윗행동 등을 벌였다. 국민 83%가 현병철 연임에 반대하는 여론 조사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되었다. 그러나 현병철은 결국 연임되었고 ‘긴급행동’은 이명박 정권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길이 남을 것(8.13)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후 10월 해소했다.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발표 및 함께 살자 농성촌 연대

구럼비 발파 이후 강정에서 공권력의 횡포가 더욱 심각해졌다. 2011년부터 간헐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했던 인권회의는 3월 정기회의(86차)에서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강정마을에 돌아가면서 인권활동가들이 내려가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하기 시작했다. 광화문 집회, 기자회견, 후원주점 등의 활동에도 결합했다. 이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강정 인권침해 조사보고서(2011.9.1.~2012.6.30.)’를 인권위공동행동과 함께 작성했으며, 10.4. 강정 인권침해조사 보고서 발표회가 열렸다.

한편,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열린 후 11.12. 대한문 앞에서 <함께 살자! 농성촌>이 시작되었다. 인권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농성촌 결합을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참여하였다. 11.27. 농성 하루 당번, 12.10. 세계인권선언 64주년 기자회견 <뭉치는 자들의 목소리> 등이 진행되었다.

인권회의가 그동안 겪었던 운영의 어려움은 2012년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운영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정기회의가 성사되지 않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2013년에는 임시운영진을 구성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권회의 임시운영진(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은 인권회의 10년의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과 함께 조직 전망 논의가 깊이 있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3.29. 인권활동가대회 둘째날 <인권회의, 설렘과 아쉬움을 만들어온 10년> 이야기마당이 그 첫 자리로 열렸다. 인권운동의 연대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갖게 된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98차 정기회의(4.24.)에서는 인권회의 조직 전망 논의 계획을 정하였다. 인권회의 운영을 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권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논의해나갈 필요를 확인하였고 집담회, 토론회 등의 과정을 밟아가기로 했다.

99차 정기회의(6.4.)에는 인권회의 약사(略史)와 연표가 제출되었고, <인권회의 10년을 통해 보는 인권운동의 흐름 2003~2012년> 바탕으로 평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료는 △국가폭력에 맞서 집단적 저항의 힘을 지켜 △인권 의제가 싹트고 서로 키우며 다양하게 연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한국사회의 변화를 보며 인권운동의 전략

을 마련하려고 시도 △2003~2012 인권단체 연석회의 운영관련 흐름 짚어보기로 구성되었다. 이후 임시운영진은 소속단체들에 인권회의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평가 및 백서 추진 위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요청했다.

7.2. <인권회의 10년, 인권운동의 연대를 돌아보다> 워크숍이 열렸고 17개 단체 29명의 활동가가 참여하여 토론이 펼쳐졌다.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이 발제를 맡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둠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여러 단체 및 개인이 사전에 제출한 평가 의견까지 포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속단체들이 인권회의에 기대하는 역할이 매우 다양한 동시에 인권회의에 결합하는 데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으나, 인권회의의 역할이나 목표를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기는 어려우며 각 단체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향의 운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임시운영진은 “가능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연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면서 실질화시키는 방향”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두 번의 간담회(8.13, 8.27)를 열었다. 10.8. 100차 회의에서 운영개편안이 토론되었다. 매달 두 번째 화요일 오후 촉진모임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벌이며, 인권회의 소속 단체 여부와 무관하게 열어놓기로 했다. 중요

한 논의가 필요할 때에 의사정족수 1/4 이상 단체의 제안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로 하고 참가자 전원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합의로 결정하는 원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권회의 이름으로 요청되거나 제안되는 활동은 의사정족수 1/4 이상의 단체가 동의하면 제안단체가 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정관리 등 운영의 최소책임은 지는 ‘이음단체’를 2개 단체 이상으로 두고 인권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이음단체를 맡아 모임을 이어갔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에 힘을 모으기 위해 ‘밀양인권침해조사단’ 구성이 제안되었다. 6.3. 첫 회의 이후 현장 조사 등이 진행되었고, 7.3.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 보고회>가 열렸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7.11. 국회,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에 전달하였다. 10월 공사 재개를 앞두고 인권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밀양으로 갔다. 인권활동가들은 매일 주요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약식보고서를 냈으며, 이후 <밀양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10.23.),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10.28.),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 결과 발표 및 국정감사 요구 기자회견>(10.30) 등 대응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밀양 주민들의 생애구술 작업이 제안되면서 별도의 프로젝트 <꽃보다 할매>가 꾸려졌고, 『밀양을 살다』(2014, 오월의봄) 출간으로 이어지게 됐다. 인권운동이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지만, 이때 인권회의는 정기회의 성사가 어려워 의사결정과 집행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인권회의는 99차 정기회의(6.4.)에서 밀양인권침해조사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후원 등의 역할을 찾아보기로 하고 일부 지원하는 역할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이후 국정원 중심 공안정국이 형성되는 것을 비판하는 활동들이 있었다. 8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9월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비밀정보기관에 의해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인권단체들은 긴급 대응 모임에 이어, 인권회의 첫 촉진모임(9.12.)에서 공안정국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인권단체 릴레이 성명과 함께, 9.30.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내란음모사건 조작 관련 피해자 심층면접 등을 바탕으로 2014.2.12. 인권침해보고회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가 진행되었다.

11.12. 촉진모임에서는 공안정국 대응, 인권주간 사업, 인권활동가대회 준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2013년 한해 동안 기억해야 할 인권의 기록들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프로젝트 <그날들>이 구체화되었다. 인권10대뉴스는 큰 사건들만 뽑히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여러 운동들이 함께 기억하기를 바라는 날들을 모아서 기록으로 남기자는 제안이었다. 참여 단체 및 개인이 한 해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싶은 인권의 장면을 짧은 글과 사진으로 정리해 보내주면 한편의 책과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12년 12월 1일~2013년 11월 30일까지 기억해야 할 89개의 인권의 날이 모여 소책자가 만들어졌고, 12.10. 세계인권선언 제정 65주년 맞이 기자회견 <2013년 인권의 그날들, 그네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을 통해 발표되었다. 한편, 12.19.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찰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를 열었다.



사진\_민중의소리

나의 기억이  
나의 희망이다

1월 촉진모임(1.14.)에서 <2014년 인권의 그 날들을 예감하는 숨고르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자유권, 차별, 비정규직, 한반도로 나누어 예상되는 정세를 살펴보고 함께 토론했다. 2월 촉진모임(2.11.)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 종북, 혐오, 공권력이라는 공통의 화두를 짚아보았다. 인권활동가대회에서 더욱 많은 활동가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각 주제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각 주제 관련 운동이 기존의 틀을 넘어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3월 촉진모임(3.11.)에서는 밀양과 탈핵에 대한 이야기, 4월 촉진모임(4.8.)에서는 밀양송 전탑반대투쟁 지킴이 제안 및 서울인권영화제 인권단체 부스 참여 논의가 이루어졌고,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 교육이 진행되어 인권단체 외에도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가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인권단체들은 어떤 활동이 필요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4.23. 인권단체들은 <햇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5.4.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애도를 받거나 애도를 하는 데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권리와 책임의 구조를 밝혀 모두가 평등한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활동을 벌여보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과 존엄에 관한 선언을 만들어가자는 제안도 나왔다.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5.10. 안산국민촛불 참여 및 약식 간담회, 5.12. <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서둘러 추진하였고, 5월 촉진모임이 예정되어 있던 5.13. <존엄과 안전을 위한 범인권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50명 가까운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존엄과 안전 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 모이고 말할 권리, 모든 이들을 애도할 권리, 안전할 권리 관련 제안도 발제되었고, 존엄과안전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도 토론되었다. 위원회는 범국민대책기구(‘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이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구성에 함께 하며 힘을 결집시키되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참여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위원회 구성원들이 위임받아 체계를 만들어갔다. 이후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자유팀, 평등팀, 안전대안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을 벌여내며 세월호 참사 대응을 이어갔다. 2015년에는 4.16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7.15.)를 열었고, 1천여 명이 참여한 풀뿌리토론을 벌이며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제정하는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인권운동에는 ‘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응해가는 흐름도 있었다.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이 능동적이고 헌신적으로 세월호 참사 대응에 나섰으나 이와 같은 활동이 인권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더 기록을 붙이지는 않는다.

세월호 참사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2014년 촉진모임은 다소 불안정하게 진행되었다. 9월 촉진모임(9.16.)에서는 존엄과안전위원회 활동을 보고하고 인권선언운동의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10월 촉진모임(10.14.)은 인권선언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10월 촉진모임에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훼손하려는 반인권 혐오세력에 맞선 행동도 논의되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 참여 등이 제안되었다. 11월 촉진모임(11.11.)에서는 두 번째 프로젝트 <그날들>이 논의되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던 해이기도 하여 인권의 장면을 짚어보고 진실, 안전, 연대의 키워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헤아려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14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기록, 기억의 사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12월 촉진모임(12.10.)은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로 대체되었다. 한편, 12.11. ‘2014 인권콘서트’에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나 권력에 맞서  
 가져진 것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중

2015

인권운동장

2013년 말부터 2014년까지 약 1년여 간 인권회의 촉진모임으로 진행해 오던 정례모임의 이름을 바꾸었다. 2015년부터는 인권회의가 주최하는 월례모임 ‘인권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며, 형식에서도 다양함을 추구하며 더 너른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권활동가들의 온라인 채팅방도 ‘인권운동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여러 단체 및 활동가들의 다양한 고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의미와 인권운동의 과제>

2013년 시작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은 2014년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12.19.)으로 이어지며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퇴행 신호를 보냈다. 인권회의는 12.21. 성명 발표 후 12.30.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토론했다. 2015.1.13. 인권운동장에서는 긴급토론회 <통진당 강제해산의 의미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열어 통진당 해산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 후 ‘압수수색 대응 요령’ 교육도 진행했다.

인권운동장으로 진행한 월별프로그램은 <>로 표시했다.

<세월호참사를 마주한  
인권운동이 틈을 썩>

2월 인권운동장은 존엄과 안전위원회 자유팀, 평등팀, 안전대안팀과 작가기록단의 활동을 돌아보았다.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평가를 나누며 인권운동이 할 수 있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아쉬웠던 것들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활동을 북돋고 토닥토닥하는 자리였다. 인권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날 발표한 내용들은 <인권오름>의 연재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에 게재되었다.

## &lt;장그래, 그린라이트를 켜줘!&gt;

3월 인권운동장은 인권활동가대회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입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던 '장그래' 모임이, 한발 더 나아가 인권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준비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양산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준)' 참여가 제안되었다.

<상 주고 상 받기, 상상 그 이상\_  
인권활동가 힐링파티>

7월 인권운동장(7.21.)은 2015년 상반기를 결산하며 평소 잘 만나지 못했거나 인권활동 외에 다른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었던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 힘을 북돋는 자리를 마련했다. 6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했고,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앞서 4월 인권운동장(4.14.)은 '4.16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로 대체되었고, 5월 인권운동장(5.12.)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문제와 해법,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흐름과 인권운동의 역할,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공동행동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로 진행되었다. 6월 인권운동장(6.9.)은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 함께하기로 했으나, 메르스 사태로 개막식이 생중계로 대체되면서 취소되었다.

<인권운동과 풀뿌리운동  
고민 나누기>

9월 인권운동장(9.8.)은 풀뿌리운동에서 인권운동과의 만남이 필요한 이유, 4.16인권선언이 선택한 풀뿌리토론의 길에 대한 발제를 듣고, 고민을 나누었다.

## &lt;인권의 눈으로 본 노동계약&gt;

10월 인권운동장(10.13.)은 박근혜 정부 노동 계약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인권의 언어로 문제를 고발하기 위한 토론회로 준비되었다. 장애/알바/청소년/노동/성소수자의 관점에서 토론이 펼쳐졌으며 후속활동으로 <프레스리안>에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 연속 기고를 5회 분량으로 진행했다.

## &lt;인권의 그날들은 외친다, 못 살겠다 같아보자&gt;\_ 프로젝트 그날들 세 번째

11월 인권운동장(11.10.)은 예년과 비슷하게 인권활동가대회 준비, 프로젝트 <그날들> 기획으로 진행되었다. 12월 인권운동장(12.10.)은 인권현실 성토대회 <2015 인권의 그날들은 외친다! “못살겠다, 같아보자!”>로 진행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2015 프로젝트 <그날들>을 발표하며 한 해의 인권현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혐오/자유/노동 분야의 활동가들의 성토를 들어보고 새로운 인권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했다.

한편, 11.14.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공권력감시대응팀을 중심으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구성이 추진되었다. 12.3.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 -경찰, 평화로운 집회보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열었고, 2016.2.18. 국가폭력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6.28~29.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이 2016년에도 이어졌다.

## &lt;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gt;

2016년 첫 인권운동장은 정세토론으로 시작했다. 1부는 <섬세하고 담대하게 “반차별의 시선으로 인권을 보다”>로 장애/성소수자/청소년인권운동의 고민을 나눴고, 2부는 <굵고 부드럽게 “변혁의 시선으로 인권을 보다”>로 국가폭력, 노동 등의 측면에서 전체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선 대응에 관한 의견들이 제기되었고 공동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모임이 꾸려졌다.

2월 인권운동장(2.12.)에서는 2016 총선을 맞이하며 구체적인 대응을 제안하는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레인보우보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당,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등의 총선 대응 계획도 함께 들으며 공동대응의 방향을 정해갔다. 인권을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인권올리고가이드>를 제작하기로 하고 3월 인권운동장(3.8.)은 가이드 내용 검토를 위한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3.22.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 발표 기자회견 “인권 올리고, 차별 내리고”>를 열어 가이드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인권올리고가이드> 취지를 바탕으로 ‘레인보우보트/청소년참정권/폐지당/병역거부/노란리본을 단 당신에게 이런 투표를 권하고 싶다’는 주제의 연속기고를 <프레스리안>에 게재했다. 각 단위의 선거대응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차별내리고 인권올리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성과 연대하기  
'사람과 사람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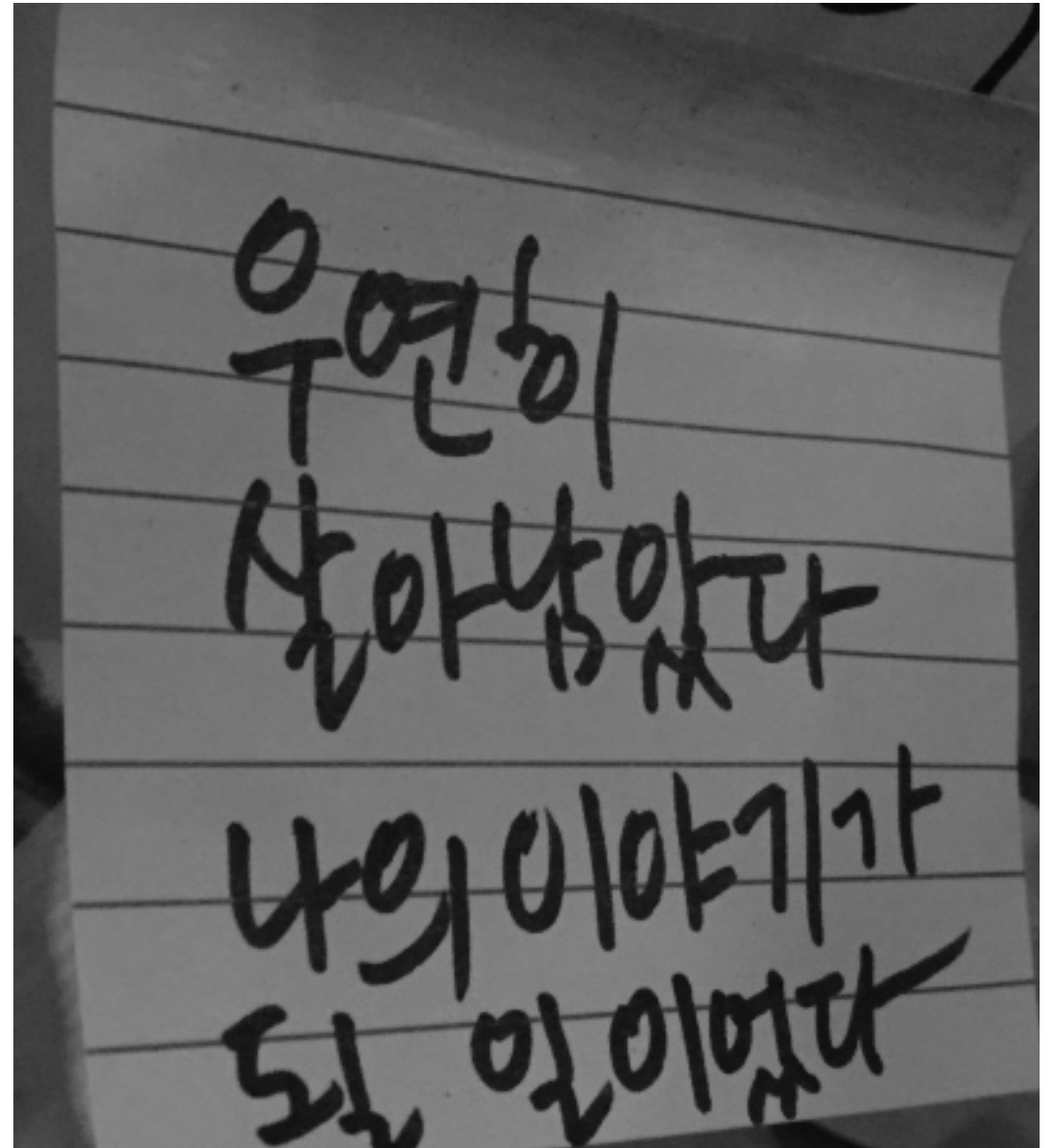
故 한광호 열사의 죽음 이후 열린 5월 인권운동장(5.10.)에서는 인권운동의 연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맞서는 인권의 연대기 '사람과 사람을 잇다'를 추진하기로 하고 반올림/성소수자/장애/철거민/밀양/강정 등의 활동가들이 유성 노동자들을 만나는 컨셉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프레스리안>에 [여기, 유성 잇다]라는 제목으로 연속기고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인권운동장 참여가 점점 적어지고 운영구조가 불안정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 &lt;평등해야 안전하다&gt;

2016년 5월 17일 벌어진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 이후 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인권활동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여성폭력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책을 반복하고 심지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로 여성혐오를 삭제하려는 모습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양한 대응을 시도했다. 6월 인권운동장(6.14.)은 이와 같은 고민을 모아내는 토론회 <평등해야 안전하다-중첩된 혐오를 넘어 안전할 권리를 말하기>로 준비했다. 1부에서는 ‘여성혐오살인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안전을 권리로 말하기 위한 접근을 다루었고, 2부는 ‘살기 위해, 평등을 향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장애/여성/이주민/성소수자 등의 입장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60여 명이 넘는 참여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 뭐해영~  
으샤으샤 힘내보자 파티

전년도에 이어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활동가들을 불러내서 힘을 북돋는 자리를 가졌다. 8.9. 열린 파티에는 전년보다 다양한 단체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사진\_경향신문

<두고볼 순 없다,  
박근혜가 임기 마치는 꼴을>

2016년 하반기는 숨가쁜 날들이 이어졌다. 인권회의는 사드 배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성명 발표, 기자회견, 하루단식 등의 활동을 벌였고,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부검 시도에 맞서며 장례식장을 지키고 기자간담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故 노수석, 故 전용철 사례를 통해 본 백남기 국가폭력 사건의 현재>를 여는 등 다방면의 대응을 시도했다. 이즈음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이 폭발하였고 인권회의는 11.1. 인권운동장 긴급토론 <두고볼 순 없다, 박근혜가 임기 마치는 꼴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정유라의 부정 입학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터져 나온 대중들의 분노를 살피며 인권운동은 이러한 분노가 한국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넘어서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상황 전개가 가파르다 보니 인권운동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후속활동으로 한겨레 신문광고 <광장행 버스를 타겠다>를 단체/개인 모금을 통해 추진했다.

2016 한국 인권현실을 말하다  
“기억하는 우리, 멈추지 않는 인권” \_  
프로젝트 그날들 네 번째

2016년에도 어김없이 프로젝트 <그날들>을 준비했는데 예년의 기획에 온라인 대중투표를 추가하였다. 박근혜 퇴진 정국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높아진 조건을 고려하여, 한국사회에서 단절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고, 우리의 고단한 삶과 권력의 추악함을 인권의 시선으로 살피고,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이 모은 인권의 기록들을 후보로 ‘인권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를 뽑는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었다. 인권의 기록들은 타임라인으로 제작했고 온라인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 글을 실었다.

12.15. <2016 한국 인권현실을 말하다 -기억하는 우리, 멈추지 않는 인권> 보고대회를 열어 인권 10대 뉴스 및 숨겨진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 10대 뉴스>에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협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강남역 10번 출구 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안방의 세월호’ 가슴기 살균제 사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계약 이어져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

상군 위원장이 뽑혔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아 궁금한 <숨겨진 인권 뉴스>에는 △의료민영화 △세월호참사 이후 청소년 인권현실,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현재 이야기 △용산참사의 진실이 뽑혔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온라인 투표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투쟁의 당사자들이 함께 자리해 서로 위로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에 관한 논의 재개와 마무리

2013년 인권회의 평가 및 전망 논의 후 인권 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이음단체’의 역할을 맡아 인권회의 촉진모임 및 인권운동장 등 인권운동의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와 같은 운영구조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8월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으나 긴급한 대응들에 밀려 진행하지 못했다. 2017년 들어 3년의 경험을 되짚어보며 인권운동의 연대는 현재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의견을 모아하기로 했다.

2.7. 인권회의 소속단체 간담회를 열어 인권회의에 가지는 기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재구성에 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인권운동 연대의 방향으로 교류와 교차를 제안하고 이를 활성화하며 운동들의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연대체의 재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영에 관해서는 기획과 실행을 맡는 권한을 가진 운영단위를 구성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2.21. 전체회의 논의안건 준비모임이 진행되었다.

3.3. 인권활동가대회 시간을 빌어 인권회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15개 단체의 참석과 12개 단체의 위임을 확인한 후 시작한 전체회의에서는 인권회의 전환/재구성을 결정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성원 가입을 개인에게 개방하는 것 등에 관한 우려와 쟁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관한 세부안을 마련하여 다시 한 번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

전체회의에 앞서 소속단체 재가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3.16.과 3.29., 4.11. 세부안 마련을 위한 후속모임이 열려 전체회의 논의안건을 준비하였다.

4.26. 전체회의에서는, 36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참석하고 18개 단체가 위임하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이름의 무게는 벗어던지고 인권운동의 연대로 힘을 기울이자, △인권을 운동의 주요한 가치로 삼는 활동가들이 교류와 연결을 촉진하자, △인권운동의 재생산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협력하자는 방향으로 연대 틀의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연대체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운영단위로 ‘운영회의’를 두어 자율성을 가지고 기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1년에 한 번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명칭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로 정하고 2017년 기본사업으로 신입활동가 공동교육 등을 정하였다. 이후 인권운동의 연대는 ‘인권운동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 촛불 이후 인권운동은 어떤 도전을

2016년부터 이어진 촛불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권운동은 어떤 도전을 해야 할지 고민을 이어나갔다. 2.14. 인권운동장은 <촛불과 인권운동>을 주제로 열렸다. 촛불의 흐름에서 인권운동들의 자리는 어디쯤 있는지 살펴보고, 박근혜 퇴진운동의 현재와 퇴진 이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촛불을 경과하며 제기된 인권운동의 질문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소수자운동과 촛불의 만남이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촛불이 일상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비폭력이나 폭력이나는 질문을 넘어서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후 인권활동가대회에서 인권운동의 도전에 대한 심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의 결과 모인 문제의식들은 ‘인권운동더하기’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

##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걸어온길을 돌아보다

---

인권운동이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1970년대 중반 ‘인권운동협의회’가 잠시 존재했으나 80년대까지도 인권운동은 독자적 사회운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민주화운동 또는 변혁운동의 하위부문으로 이해될 뿐이었다.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사회운동 지형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권운동도 그러한 흐름에서 자리를 만들어가려고 했다. 80년대까지의 민중운동과도 다르지만 새롭게 형성되는 시민운동과도 다른 ‘인권운동’의 지평을 열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펼쳤다. 인권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려던 그때에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2000년대를 맞게 되었다.

인권운동의 연대체 구성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투쟁은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다. 인권운동은 독립성을 가진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싸웠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그것과 구분되는 인권운동의 자리를 밝혀야 했다. ‘인권’의 체제내화를 경계하며 인권운동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한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2003년 인권

단체들의 공동행동 경험은 연대체 구성 논의를 촉진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제기된 인권운동의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1) 인권운동진영의 연대 강화. (2) 민중들의 저항을 옹호하자. (3) 인권운동의 전략적 방침을 확정하자. (4) 인권 의제를 확장하자.

인권운동은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에 이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완성으로 귀결될 것”을 예측하며, 민중운동이 “정부의 기만적인 개혁정책으로 고립”될 여지가 매우 크므로 “저항을 압살하려는 정부의 기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를 위해 “인권운동진영의 총체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공동으로 대응할 체계”가 시급한 동시에, 차별, 정보인권, 북한인권 등 여러 개별단체들의 사업을 소통하고 과제를 공유하며 인권 의제를 확장할 자리가 필요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이러한 인권운동의 장(場)을 자임하며 한 시대를 열어왔다.

인권회의가 2000년대 인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온 구심이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흐름이 이뤄낸 성취만큼 한계도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된 과제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혹은 적절한 과제였는지 평가할 지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회의의 역사를 엄밀하

게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이 글의 목표가 아니다. 사후적 해석일지라도, 인권회의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삼으려는 인권운동이 무엇에 주목하는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를 바란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시선과 속 깊은 질문들을 기다리며 14년의 역사를 돌아본다.

국가폭력에 맞서 집단적 저항의 힘을 지키다

김대중 정권 이후 ‘평화적 집회 시위’ 담론이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주요 담론으로 부상했다. 노무현 정권이 만든 ‘평화로운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와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투쟁하는 민중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집중되는 국가폭력에 맞설 필요가 있었다. 인권운동의 입장을 밝히고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경찰(폭력)대응팀이 구성되었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조사하는 활동과 경찰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활동이 주요 흐름이었다. 전용철, 홍덕표, 하중근 열사 사망 사건 등 노동자농민 집회 폭력 진압에 대한 진상 조사와 후속 대응에 인권운동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았다. 동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응이 꾸준히 이어졌다.

경찰의 집회 시위 자유 침해에 맞서기 위한

인권침해 감시활동은 점차 확대되었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서 감시단 조끼를 만든 후 2008년 촛불에서는 감시단 조끼가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크고 작은 투쟁의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권 이후 국가주의 반대를 주요 활동 방향으로 정한 인권회의는 이전까지의 경찰폭력대응팀을 확대·강화하는 공권력 감시및대응팀을 구성했다. 공권력감시및대응팀은 현장 활동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고제에 대한 대응 및 집시법 개정/폐지 논의를 주도해갔다.

인권침해 감시 및 진상조사 활동은 조직된 대중운동을 엄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새롭게 등장하는 대중의 힘을 지키고 확산시키는 데에도 발 빠르게 나섰다.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The Demonstrator’s Guide for Human Rights)’는 2008년 촛불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2011년 희망버스에 대한 인권침해 감시활동은 사법탄압에 맞선 공동 대응의 경험을 만들며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으로 이어졌다. 집회 시위 주최 및 참여자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누구나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인

권옹호자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공권력감시및대응팀은 관성화된 집회 문화를 넘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 행동들을 모색해나갔다.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자 국가폭력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규명의 동력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정권 들어 거리에서 직접 모이는 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나 의견제시,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연대가 전방위적으로 탄압받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표현의 자유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공권력감시및대응팀은 대응을 모색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제도 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 함께 했다.

자유를 옥죄는 이데올로기에 맞서기 위한 담론 활동도 이어졌다. ‘안전’을 내세워 국가형벌권을 강화하고 분할통치를 심화시키려는 시도, 반공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 ‘종북혐오’ 등에 주목하며 대응하려고 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인권회의가 실질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사건 조작 및 통합진

보당 강제해산에 관해서도 활동을 벌여오기는 했으나, 분단현실과 전쟁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할 때 인권회의의 활동은 미약한 편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를 촉구하다

김대중 정권 시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그에 맞설 인권운동 ‘진영’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만들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인권회의가 만들어진 노무현 정권 시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협력하기도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입법 등에 관해 유의미한 권고를 내기도 했다. 그럴수록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투쟁 당시 인권운동이 우려했던 한계가 확인되었다. 행정부와 국회의 비협조, ‘권고’ 기능의 한계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새도 없이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화를 시도했다.

인권회의는 2008년 농성투쟁을 벌이며 강력하게 반대 움직임을 만들어갔고 대통령 직속 기구화 시도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

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감축 등 축소 방침을 강행하고 보수 성향의 인권위원들을 임명해나갔다. 본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가 시작됐다. 2009년 인권회의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단’을 구성하여 축소방침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을 구성했다. 2012년 현병철 연임이 시도되자 ‘현병철 연임 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정권의 시도에 맞섰다. 인권회의 중후반기를 거치며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 점차 국가인권위원회 대응을 이끌어갔다.

인권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인권운동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주장하고 투쟁을 벌여온 산파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위치성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인권운동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다른 인권운동의 자리를 만들어가려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까지 찾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욱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확인될수록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권운동은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의 증진을 위한 행위주체로 나서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제도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야를 가두지 않으며, 알리바이 기구로 전락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의 현장과 접속시키려고 노력했다.

인권 의제가 싹트고 어울리며 뻗어나가는 자리가 되다

인권회의 초기에는 반차별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긴장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발족 당시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단체가 함께하는 것을 각별히 소중하다 여기기도 했다. 홈페이지에 인권의 분류체계를 어떻게 둘지 논의하며, “소수자 항목을 두면 소수자들만의 문제처럼 여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차별’이라고 항목을 정하는 토론을 하기도 했다.

인권회의는 활동 전반에 소수자인권운동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반차별 공동행동’ 사업이 시

작되었다. 해마다 주제 하나를 정하고 인권회의 소속단체들이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2005년 이주노동자 인권, 2006년 HIV/AIDS 감염인 인권을 주제로 기획 사업을 추진했다. 2005년에는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과 차별로 숨겨진 이주노동자 합동 추모식’,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열었다. 2006년에는 ‘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캠페인’을 다달이 열면서 감염인 인권 증언 <말할 게 있 수다!>, 감염인 인권주간 <Positive Rights>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도 벌였다. 반차별 공동행동 사업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지만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인권단체들 대부분이 작은 규모로 고유한 의제들을 책임지는 상황이다 보니 소속단체들이 특정 주제로 여력을 내서 모인다는 게 쉽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에도 힘을 집중하지는 못했다. 2006년 기본사업의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두 차례 간담회 이후 추진되지 못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집중하면서 흐지부지된 측면도 있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를

거치며 대응에 나서게 됐지만 인권회의 차원에서 입장이 토론된 적은 없었다. 반차별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운동에 새기려 했던 것에 비하면 관련 활동이 왕성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권회의는 어떤 운동이 싹을 틔울 때 기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왔다. 반차별감수성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변화하려고 노력한 덕분일 것이다. 적어도 어떤 의제를 하찮게 여기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서로 신뢰할 수 있었다.

인권회의는 인권의제를 띄우고 확장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모든 의제를 쥐고 조직 자체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인권회의 초기부터 활동을 벌인 ‘인권단체 평화권팀’은 2004년 전범민중재판운동을 거치며 평화운동 및 풀뿌리운동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어갔다. 평화권팀의 도전은 2006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서 평화적 생존권을 제기하는 인권회의의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인권회의 밖으로도 뻗어나갔다. 인권회의 안에 구성되었던 다양한 주제팀들이 그러했다. 인권회의는 늘 주제팀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기를 바랐으나 대부분의 팀들이 수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러나 운동이 사라진 것

은 아니었다. 정보인권과 같이 새롭게 대두하는 인권 의제들에 대응하면서 운동을 만들어 나갈 때, 사회권이나 노동권 등 기존의 영역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며 틈새를 내고 길을 틔울 때, 인권회의는 든든한 언덕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운동들을 연결하며 널리 번져갈 수 있었다.

인권운동의 전략을 세우려는 도전을 멈추지 않다

인권회의는 구성 논의를 할 때부터 ‘전략’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과거사 문제 등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는 반면 신자유주의 체제가 전면화되면서 눈에 보이는 인권침해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운동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회의는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인권회의 구성을 위한 논의에서 <노무현 정부 1년 인권 과제 중간 점검 및 평가> 토론을 진행했고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를 여러 단체들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었다. 『2004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2005년의 10회 연속 기본

권 세미나, 반차별공동행동 기획사업 등도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었다. 매년 연초의 정기회의나 인권활동가대회에서 정세를 전망하며 인권운동의 전략을 토론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되어왔다. 일회적인 토론에 그치고 여러 인권 과제를 나열하는 데 머물게 된다는 평가를 고려하면서 인권운동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인권활동가대회 전후로 토론을 심화시키려는 기획도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도들을 장기적인 구상 속에서 이어가지는 못했다.

전략 논의가 한두 번의 과제 토론으로 완결될 수는 없다. 소속단체들이 각자의 운동에서 마주하게 되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인권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점검하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략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인권운동은 90년대 스스로 주창했던 전문성을 갖추며 점차 분화하고 확장해갔다. 전문성이 심화되다 보니 여러 의제나 영역 간 연결고리를 찾고 인권운동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각 단체가 주목하거나 집중하는 사안들이 인권회의 틀 안으로 모이기보다는 해당 사안에 유효적절한 네트워크로 뻗어가는 원심력을 만들고 있었다. 게다가 인권회의가 현안 대응과 실천보다 ‘논의’

에 우선순위를 두고 역량을 배분하기는 어려웠다. 어찌 보면 인권회의와 ‘전략’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권회의의 움직임에는 뚜렷한 경향성이 확인된다. 인권회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한국사회에 흔적을 남겨왔을까? 2006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서 평화적 생존권을 제기하고 불복종행동을 벌이던 모습, 2008년 촛불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던 모습, 2009년 용산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찰폭력뿐만 아니라 강제퇴거를 의제로 제기하며 운동을 확장시킴으로써 기억될 것이다. 2011년 희망버스에 결합하여 연대를 확장하고, 2011년부터 강정 마을 해군기지 저지 투쟁, 2013년부터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에 함께 하며 주민들의 저항권을 지키는 노력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제도의 경계에 갇히기 쉬운 협의의 인권을 넘어서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인권회의는 전략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만은 버리지 않았다. 인권의 실현을 위해 체제 전반을 살피며 구조적 변혁을 꾀하는 것이 인권운동의 과제임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전략’을 세우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지

만 불가능성에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모순의 한가운데를 비껴나지 않고 ‘인권’을 지킬 수 있었다.

수평적 연대구조를 위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다

2004년 26개 단체의 참가를 확인하며 1차 정기회의를 열었던 인권회의는 그 해 말 34개 단체로 확대되었고, 전환 논의를 한 2017년에는 43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가입절차가 따로 없었다.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을 때 정기회의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성원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다가 점차 가입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소속단체로 함께 하기 위해 서로를 충분히 알 필요가 있다 보니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여러 단체가 이름만 걸고 세를 과시하는 방식을 지양한 기풍도 작용했다. 소속단체 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인권회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인권회의 운영에서 주요 관심사는 소속단체들 간의 수평성이었다. 인권회의 소속단체들은 단체의 성격이나 형식, 주요 의제가 천차만별이었다. 당시 모인 단체들이 오래 교류하거나 접촉해온 단체들만도 아니었다. 의사결

정과 집행 구조에 동등하게 참여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인권회의는 수평적 연대구조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이어왔다. 구성 초기 논의에서부터 ‘인권운동다운 연대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두드러졌다. 규모가 크고 자원이 많은 단체일수록 영향력을 가지고 대표로 나서기 쉬운 운동사회의 풍토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운영과 활동 전반에 걸쳐 소수자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배치”한다는 운영원칙도 비슷한 맥락에서 마련되었다. 활동을 벌일 때 지역단체들이나 여러 공대위 등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연대체가 비대해지거나 과도하게 권한 집중되어 사안별 연대체나 다른 연대의 흐름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

권한의 집중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는데 얼마간은 불가피했고 얼마간은 고집스러웠던 때문이다. 일반적인 연대체의 운영구조와 다른 인권회의의 특징 중 하나는, 대표를 두지 않는 것이다. 직위로서 대표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계도 높았다. “참여하는 어느 단위나 개인도 전체회의의 동의 없이 연대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 인권회의 구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배경이

어떠했던 ‘대표’에 대한 긴장은 연대체의 성과를 일부 단체나 개인이 독점하지 않고 인권운동 전체의 것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촉진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구조 없는 구조’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인권회의의 의사결정과 집행구조는 사실상 정기회의 하나로 단순했다. 소속단체 모두가 정기회의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상호이해를 높이고, 각 단체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기획사업이나 현안대응 등을 주제별로 추진하는 것이 인권회의 운영의 상이었다. 저절로 될 턱이 없으니 수 개의 단체가 ‘운영진’을 맡아 정기회의를 준비하고 일상적인 점검을 하거나, 조금 더 인권회의에 집중하는 활동가로서 ‘촉진자’를 두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단체나 개인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의 위계를 지극히 경계하다 보니 운영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낳았다. 운영이 순탄했을 리 없고,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진영’을 만들자는 구상과는 더더욱 어울릴 수 없었다. 정기회의 참여가 저조하고 운영이 어렵다는 평가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개편 논의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촉진자’가 있는 동안 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활동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불안정해지는 한계도 드러났다.

구조로서의 안정성은 달성해보지 못한 셈이다. 결국 2013년 운영 개편 논의에서는 정기회의를 월례모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성사되지 않는 정기회의를 운영의 기본구조로 둔 채 정기회의 준비와 조직 자체에 역량을 쏟는 것을 멈추자는 결정이었다. 대신 인권회의 소속단체들에, 그리고 더욱 넓어진 인권운동에 필요한 논의나 실행을 위한 모임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보기로 했다. 이때의 운영 개편 논의는 앞선 논의들과 달리, 인권운동을 둘러싼 현실의 변화를 가늠하며 새로운 전망을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었다. 촉진모임은 인권운동의 연대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교류를 확장했고 다시금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만들어졌다. 돌아보면 어려움을 자초하며 걸어온 길이다. 하고 싶은 일은 많았으나 그걸 해내려고 자원을 아득바득 끌어 모아 쌓는 일은 경계했으며, 가야 할 곳에 발 빠르게 가면서도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긍정적으로만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위계를 지양하는 것이 기계적 수평성을 유지하는 데 그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관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기도 쉽다. 인권회의의 운영구조를 다른 연대체의 운

영구조와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른 운동들에서 이와 같은 운영구조를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인권회의는 운동들이 더 수평적으로, 더 전면적으로 교류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상상력을 틔워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다시, 인권운동의 길을 내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인권운동에도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2013년 운영개편 논의를 거치면서 인권회의 촉진모임이 달마다 열리던 중 인권운동도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게 되었다.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전형적인 접근이나 제도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거대한 사건이었고 누구에게나 미답의 길이었다. 2014년 5월의 촉진모임은 ‘존엄과안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범인권단체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정기회의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그러나 비슷한 질문을 품은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함께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자유팀, 평등팀, 안전대안팀을 구성해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단절하고 이후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문제의식의 일부는 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의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간 존엄에 대한 인권운동의 감각에 의지하며, 때로는 거침없이, 때로는 더듬거리며 길을 열어왔다. 그리고 다시, 광장에 모였다.

인권회의가 대표했던 인권운동의 한 시기는 인권의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각 지자체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과 함께 신자유주의도 확산되고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인권의 의제들을 제기하고 권력을 압박하는 전략은 이어진 이 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지속되기 어려웠다. 이 시기 인권회의는 인권의 종잇장을 들고 항의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모순의 현장에서 인권의 몸으로 부딪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집단적 저항의 힘을 지키고 숨통을 틔워왔다. 어딘가로 달려 나갈 때 뒷전으로 밀리기 쉬운 의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의 감수성을 북돋고 지지하는 관계를 이어왔다. 이렇게 쌓아온 역량 덕분에 인권운동은 생명과 존엄, 평등과 안전 등의 가치를 현실에 기입하며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인권운동은 자신의 역사도 넘어서왔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87년 민주화항쟁이 열어젖힌 시대 인권운동은 '인권운동'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민주화세력의 집권이라는 기대보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선부른 타협은 하지 않았다. 민중들의 저항을 집요하게 탄압하는 국가폭력에 인권으로 맞서는 동시에 인권을 심화시켜왔다. 운동들을 연결하며 세상을 바꾸는 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빠 움직였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온 힘들과 광장에서 만난 지금, 인권운동은 다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까.

인권운동이 '인권회의'의 이름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87년 체제를 넘어서려는 변화의 시기에 다시 인권운동의 길을 물으며 모인 곳도 인권회의였다. 촛불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되 냉소로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며, 근원적인 변화의 힘이 어디로 모이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탐문하며 나아갈 때였다. 2017년 인권회의는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로 전환을 결정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어디로 가려는가. 인권운동더하기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만들어갈까? 인권운동은 '인권'으로 다시 어떤 역사를 써나갈까? 인권운동이 인간의 존엄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당신과 함께.

# 인권단체연석회의를 기억하다

2004-2017 인권운동의 도전

# 인권단체 연석회의에 함께한 단체들

## 2004년 1차 정기회의 당시,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 (27개)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외국인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연맹,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신규가입

2004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항지구화행동, 광주인권운동센터, 전쟁없는 세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거창 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2005년 | 구속노동자후원회

2006년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문화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2007년 |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아시아평화인권연대

2008년 | 민주노동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 KANOS

2009년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0년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2011년 | 청주노동인권센터

2014년 | 서울인권영화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2016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2017년 전환 결정 당시,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 (43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KANOS

## 2018년 2월 현재,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 (45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운영관련 주요문서

2004.4.29.

운영원칙 일반

1.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매월 넷째주 목요일 4시에 진행되는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정기회의>에서는 여러 인권현안에 대한 소통과 공유, 공동활동에 대한 제안, 공동활동 진행과정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연간인권보고서 사업조직 등을 진행한다.
2.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운영과정에서 국가기구로부터 활동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을 건지한다.
3.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여러 인권그룹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걸쳐 소수자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배치한다.
4.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활동을 벌임에 있어 지역단체들과의 관계, 여러 공대위 및 분야별 모임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행동 조직방식

5. <정기회의>에 제안된 활동을 중심으로 회의 참가자 전원의 공감대에 바탕해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공동행동 과제를 설정한다.
6. 공동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팀을 필요한 경우에 따라 구성하며, 사업팀의 활동을 홈페이지, 메일링리스트, 정기회의 등을 통해 소통·보고·점검·평가한다.
7. <정기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사안 및 공동행동이 급박하게 제기되었을 경우에도,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참가 단체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진행한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참여 기준

8. 참여단체들간의 상호신뢰를 진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성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첫째, 정기회의의 참여, 둘째,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와 활동 소통 셋째, 일정액수의 월정기회비 납부

2011.3.23.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운영원칙>

1. 소속단체 자격 및 의무

- 소속단체는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소속단체는 인권회의 활동으로 발생한 상황(벌금, 부상, 법률문제 등)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
- 인권회의의 소속단체가 되려면 인권회의내 4개단체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

2. 회의 및 의사결정

- 정기회의는 최고의사결정단위이다.
- 정기회의의 안건은 소속단체의 1/4개 이상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

3. 재정운영

- 월회비는 10,000원 이상으로 한다.
- 회비수입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동이체로 한다.
- 예산은 사업비(내부, 연대) 및 운영비(통신비, 교통비, 복사비, 기타 경비)로 구성한다.
- 예산은 정기회의에 사전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4. 운영진

- 운영진은 결의하는 단체로 구성하며 소속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한다.
- 운영진은 인권회의의 운영을 조력하는 단위로 월 1회 이상 운영진 회의를 개최한다.
- 운영진은 소속단체간 소통 및 연대를 촉진하며 정기회의의 안건 정리, 인권 사안에 대한 점검, 긴급현안에 대한 인권회의 의견 수렴 및 입장 발표 등을 할 수 있다.

5. 연대사업

인권회의 차원의 성명발표 처리방식

- ① 긴급한 사안으로 인권회의의 성명을 발표할 경우 : 운영진에서 그 필요성을 1차 점검한 후 소속단체들에 제안 및 회람을 거쳐 발표한다.
- ② 소속단체들의 인권회의의 성명발표 제안의 경우 : 회람하여 큰 이견이 없으면 발표하되 이 과정에서 제안단체가 자율적으로 소속단체들에게 연락하여 사안을 설명하도록 한다.
- ③ 외부단체들의 인권회의의 성명발표 제안의 경우 : 운영진에서 인권회의의 차원의 성명 발표가 적절한지 검토한 후 적절하면 인권회의의 성명 발표 건으로 소속단체들에 제안하여 큰 이견이 없으면 발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회람하여 소속단체들이 개별 판단하여 연명하도록 한다.

외부단체의 연대 사업 제안 처리방식

- 정기회의에 제안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정기회의가 없는 시기, 혹은 정기회의에서의 안건 논의의 효율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방식을 보충한다.

- ① 인권회의 내 관련 사업팀이 있다면, 팀에서 논의하여 인권회의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다.
- ② 인권회의 내 관련 사업팀이 없다면, 관련단체나 관심 있는 단체들이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을 회람하거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진행이 가능하면 인권회의 사업으로 제안해 추진한다.

□ 후원과 명의후원

- 후원은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 명의후원은 소속단체가 적극참여하고 홍보를 지원하며 운영진에서 참석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2013.10.8.

<인권단체연석회의, 다시 설레는 연대를 꿈꾸는 운영의 약속>

0. 2003.4.29. 인권회의 구성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한 17개 단체들이 마련한 운영규칙과 2011.3.23. 제정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원칙의 바탕에서, 2013년 진행된 논의들을 반영하여 운영 개편의 방향을 모았습니다.

1. 서로 만나기 어려워진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인권운동의 연대가 더욱 넓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국가기구로부터 활동의 독립성과 재정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여러 인권그룹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다시 설레는 연대를 꿈꾸기 위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우리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른 현안과 씨름하며 바쁜 동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를 무리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의 방식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은 조건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권’이 분할될 수 없듯,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세계에 맞서는 인권운동들이 서로 구분될 수 없는 ‘인권운동’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찾아갈 실마리는 인권운동들의 자리를 만들어온 동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3. 우리는 매달 두 번째 화요일 오후 4시에 시간을 내어 만나기로 합니다. 우리들의 연대를 촉진하는 수다, 인권운동들의 고민을 나누는 워크숍, 정세를 살피며 대응을 모색하는 간담회, 공동사업을 기획하는 브레인스토밍, 마음이 맞으면 내일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결행, 이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촉진모임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것들을 인권회의의 동료들에게 정성껏 제안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권회의 소속단체 여부를 묻지 않고, 동료들의 손을 잡고 찾아온 이들을 반갑게 환대하고, 동료들이 나누고 싶은 질문들을 귀 기울여 들으며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4.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운영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가 필요할 때, 우리는 전체회의를 열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1/4 이상의 단체 제안으로 소속단체들을 소집합니다. 제안단체들은, 제안한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을 준비하고,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도록 참여를 조직할 것입니다. 다소 무거운 결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스스로 과반수의 의결정족수를 두려고 합니다. 참가자 전원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합의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이어갑니다. 전체회의는 필요할 때에만 소집되므로, 1년에 한 번 인권활동가대회를 열

어 전국의 인권활동가와 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5. 인권회의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권회의에 소속된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소속단체들 중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활동이 중지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단체들도 있습니다. 단체를 통해 인권운동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여러 동료들의 마음을 잊지 않되, 인권회의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입니다. 인권회의의 의사 결정을 위한 의사정족수는, 소속단체 중 1년 이상 인권회의와 함께 하는 활동이 있거나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단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결권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기 어려운 단체들은 소속을 유지하되 의결권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활동가들이 인권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큼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권회의 형식에서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회의나 활동에서 개인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민과 제안들이 있습니다. 성명/논평 발표, 기자회견/집회 주최, 연대사업, 연대체 결합, 활동 후원 등 요청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내용도 많습니다. 여러 요청이나 제안들 중 인권회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한해 인권회의 메일링리스트를 활용합니다. 의사정족수 1/4 이상의 단체가 동의하면 제안단체가 집행을 책임지고 진행시킵니다. 인권회의 소속단체들과 긴히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제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연락을 위해 소속단체와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유합니다. 그 외 널리널리 알리고 제안하고 싶은 공지, 참여 요청 등 모든 것들은 hnet으로도 충분하므로 인권회의 메일링리스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7.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있는 권한과 책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인권회의의 운영을 위해 나눠맡기 어려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재정관리 등의 최소책임을 지는 ‘이음 단체’를 두고, 역할을 요청합니다. ‘이음 단체’는 1~2년을 단위로 돌아가면서 2개 단체 이상이 자원해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책임을 나눠맡을수록 우리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8. 우리는 인권운동의 연대를 복돋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더욱 풍성하고 힘 있는 연대가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다음 약속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인권단체 연석회의 연표

아래의 기록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을 모아놓은 것으로, 인권회의의 역사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로 여기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2013년에 모았던 것으로, 운영진이나 촉진자 등 주요 활동가와 단체들이 보유한 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메일 및 메일링리스트에 공유된 파일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 2003

- 10.26. [운영]2회 인권활동가대회 마지막 날 평가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분신 상황 등에 대한 인권단체시국성명 제안됨.
- 10.27. [입장]노동기본권 탄압을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_인권단체 비상 시국성명.
- 11.5. [기획]노동탄압증언대회\_인권단체 노동인권실태조사팀.
- 11.7. [운영]인권단체 공동행동을 위한 긴급회의.
- 11.10. [운영]인권단체 공동행동을 위한 긴급회의. 노동인권탄압,이라크파병,테러방지법 제정등 3개 사안에 대한 공동행동을 2주간(11.11~11.22) 진행하기로 결정.
- 11.11. [입장]'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인권단체들' 명의로 공동행동 주간 선포
- 11.14. [기획]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 본청 앞 시위\_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 11.12. [입장]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발표\_인권단체 노동인권실태조사팀
- 11.13. [기획]테러방지법 반대 여의도 각 당사 앞 피켓 시위
- 11.20. [입장]11월 9일 노동자대회 경찰폭력고발대회
- 11.21. [운영]'인권단체들' 이라는 회의틀을 유지하면서 매주 정기회의를 통해 정세대응활동을 벌이기로 함.
- 11.28. [운영]'인권단체들' 정기회의.
- 12.5. [운영]'인권단체들' 정기회의.
- 12.9. [입장]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에 대한 경찰폭력 고발 기자회견\_경찰폭력조사팀
- 12.10. [기획]세계인권선언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축사에 맞춰 '근조인권' 향의시위.
- 12.12. [운영]'인권단체들' 정기회의. 인권 살리기 행동주간(12.15~12.19) 진행하기로 함.
- 12.15. [기획]4대 인권사안(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집시법 개악반대,한-칠레 FTA 비준안) 국회 처리 반대하며 매일 저녁 국회 앞 촛불집회. 12월 19일까지.
- 12.17. [기획]국제인권조약 국회 전달식
- 12.19. [운영]'인권단체들' 정기회의.
- 12.24. [기획]인권단체 총집중행동. 국회 본관 앞에서 인권활동가 40명 4대 인권사안 반대 기습시위 전개, 30명 연행되어 8명 불구속 입건 처리, 전원 지문날인 거부하고 풀려남.
- 12.30. [기획]인권활동가 공동 송년회.

## 2004

- 1.9. [운영]'인권단체들' 정기회의. 2003년 공동행동 평가계획과 '인권단체들'을 해소이후 새 연대체에 대한 논의계획을 확정함.
- 1.9. [운영]2003년 공동행동 평가 및 새 연대체의 필요성과 상에 대해 '인권단체들' 참여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1월 27일까지.
- 1.29. [운영]'인권단체들' 정기회의. 설문조사 취합 및 정리.
- 2.12. [운영]새 연대체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새 연대체의 상을 인권진영의 정책마련과 공동실천을 위한 느슨한 네트워크로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
- 2.26. [운영]새 연대체 구성을 위한 2차 회의. 새 연대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3.19) 제안서 검토 및 '노무현 정부의 인권정책과제 제안서' 작성을 위한 역할분담.
- 3.4. [운영]인권단체들의 새로운 연대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에게 제안.
- 3.12. [운영]새 연대체 구성을 위한 3차 회의. 간담회(3.19) 준비.
- 3.19. [운영]인권단체들의 새로운 연대 모색을 위한 1차 간담회. 25개 인권단체 참여. 인권운동의 과제와 새 연대체 건설을 제안하고 참석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 4.6. [운영]인권단체들의 새로운 연대 모색을 위한 2차 간담회. 12개 인권단체 참여. 새 연대체 구성의 원칙, 위상, 구조와 운영방식을 결정.
- 4.29. [운영]인권단체들의 새로운 연대 모색을 위한 3차 간담회. 17개 단체 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운영원칙 일반, 공동행동 조직방식, 인권단체 연석회의 참여 기준을 정리한 운영규칙 마련.
- 5.14. [기획]17대국회 인권입법과제 1차 워크샵. 11개 단체 참여.
- 5.21. [기획]17대국회 인권입법과제 2차 워크샵.
- 5.27. [운영]1차 정기회의. 17개 단체 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결성. 5월 25일 기준 27개 인권단체 참가.
- 6.10. [입장]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 6.16. [운영]운영진회의.
- 6.24. [운영]2차 정기회의. 20개 단체 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 및 연대활동 방식에 대한 논의
- 6.26. [기획]김선일씨 피살관련 이라크 파병철회 인권단체 집회 개최.
- 6.28. [입장]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 7.7. [기획]KT인권침해 피해자 증언대회\_KT인권침해대응팀
- 7.9. [운영]운영진 회의.
- 7.13. [기획]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법무부 전달 및 법무부장관 면담.
- 7.16. [운영]운영진 회의.
- 7.22. [운영]3차 정기회의. 13개 단체 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연대 사업 원칙(소수자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는 다 등) 공유
- 8.10. [운영]운영진회의.
- 8.10. [입장]정립회관 농성 50일 성명.
- 8.12. [기획]정립회관 향의 방문.
- 8.19. [운영]운영진회의.
- 8.19. [기획]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각 정당에 전달.
- 8.24. [입장]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권고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논평-제17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권고를 완전히 수용하라
- 8.31. [운영]4차 정기회의. 16개 단체 참여.과거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중심으로 하반기 정세와 과제에 대해 집중토론.
- 9.6. [입장]노무현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논평
- 9.17. [입장]정립회관 농성장 폭력침탈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
- 9.18. [기획]과거청산과 인권운동\_과거청산 워크샵 준비팀.
- 9.21. [운영]5차 정기회의.

- 10.8. [운영]운영진회의.
- 10.8. [입장]부안주민에 대한 경찰폭력 규탄 성명.
- 10.9. [입장]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10.16. [운영]운영진회의.
- 10.18. [입장]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과거청산 관련 당론 결정에 관한 논평
- 10.21. [입장]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0.22. [운영]운영진회의.
- 10.26. [운영]6차 정기회의.16개 단체 참여. 인권운동보고서 기획.
- 10.26. [입장]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11.3. [입장]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발표 기자회견-'이제 그만,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 상황을 끝장내자'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공동선언문 발표.
- 11.5. [기획]국가보안법폐지 인권단체 집중행동.
- 11.11. [입장]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상정에 즈음하여 논평.
- 11.23. [입장]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 11.25. [운영]7차 정기회의. 9개 단체 참여. 국가보안법,과거청산,파병연장반대를 이슈로 인권선언 기념일 주간 집중행동 (12.1~12.10)진행하기로 결정.
- 11.25. [입장]비정규직 관련 법안 철회요구 인권활동가 선언.
- 11.26. [입장]인권의식 없는 국회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을 규탄한다 논평.
- 12.26. [기획]국가보안법 고문피해자 증언대회
- 12.1. [기획]국가보안법 폐지 인권단체 기자회견 개최.세계 에이즈의 날 추모제와 평화수감자의 날 행사에 결합
- 12.10. [기획]오늘의 인권전\_새사회연대 주최,인권단체연석회의 후원으로 12.10~12.20 진행.
- 12.14. [입장]KT상판팀 인권침해 백서 발표 기자회견.  
[입장]색깔공세, 사상전향 강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_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상공세에 대해 항의
- 12.15. [기획]국가보안법 폐지 인권단체 하루농성.
- 12.17. [입장]국가인권위원회 파행사태 조속히 해결하라.  
[입장]노동부 신노사문화대상에 KT선정 항의.
- 12.28. [운영]8차 정기회의.

## 2005

- 1.27. [운영]9차 정기회의. 14개 단체 참가.
- 2.6. [입장]경찰청장 후보자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_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인준청문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 2.24. [운영]10차 정기회의. 9개 단체 참가.
- 3.24. [기획]2기 국가인권위 어떻게 볼 것인가\_내부 토론회로 진행.
- 3.24. [운영]11차 정기회의. 16개 단체 참가.
- 4.15. [입장]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수용하라!
- 4.21. [입장]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만이 우리 사회 구조적 인권침해의 뿌리를 해체할 수 있다-여야 합의안은 유엔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졸속 법안이다\_정치권 과거청산법 4월 처리 합의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 4.28. [운영]12차 정기회의.
- 4.30. [기획]2004 인권운동보고서
- 5.26. [운영]13차 정기회의.
- 6.9. [기획]경찰폭력 증언대회

- 6.15. [운영]13-2차 운영진 회의.
- 6.22. [운영]13-3차 운영진 회의.
- 6.21. [입장]사회보호법 폐지, 6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
- 6.21. [입장]국가인권위원회 NAP 권고안 추진과정 문제 있다
- 6.27. [운영]2005 반차별 캠페인 “이주노동자 인권”\_반차별추진팀 1차 회의.
- 6.30. [운영]14차 정기회의. 14개 단체 참가.
- 7.7. [입장]'인권보호체계 도입으로 군 인권침해사건 근절책을 마련하라!'
- 7.21. [운영]14-1차 운영진 회의.
- 7.22. [운영]2005 반차별 캠페인 “이주노동자 인권”\_반차별추진팀 2차 회의
- 7.26. [기획]출입국관리법 중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침해 조항 및 사례 발표회\_반차별추진팀 기획 토론회.
- 7.26. [운영]15차 정기회의. 13개 단체 참가.
- 8.23. [기획]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 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 8.25. [운영]16차 정기회의. 15개 단체 참가.
- 8.26. [입장]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탄압 좌시하지 않겠다!\_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탄압 규탄 긴급성명.
- 8.29. [연대활동]정립공대위 농성에 대한 광진구청 폭력 해산 규탄 기자회견
- 9.4. [운영]2005 반차별 캠페인 “이주노동자 인권”\_반차별추진팀 3차 회의.
- 9.8. [입장]경찰 보안분실 폐지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보안 경찰 혁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9.8. [기획]기본권세미나1 인권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_국순옥 교수 초청강연.
- 9.8. [운영]16-1차 운영진 회의.
- 9.24. [기획]기본권세미나2 법 앞의 평등\_김승환 교수 초청강연.
- 9.27. [운영]2005 반차별 캠페인 “이주노동자 인권”\_반차별추진팀 4차 회의.
- 9.29. [운영]17차 정기회의. 13개 단체 참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 대한 인권단체 초청 간담회 참석 및 의견서 발표.
- 10.1. [기획]기본권세미나3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3조)\_오동석 교수 초청강연.
- 10.4. [입장]빈 수레 개혁이 아닌 진정으로 거듭나는 인권경찰이 필요하다
- 10.6. [입장]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10.7. [운영]17-1차 운영진 회의
- 10.8. [기획]기본권세미나4 정보기본권\_한상희 교수 초청강연.
- 10.11. [운영]2005 반차별 캠페인 “이주노동자 인권”\_반차별추진팀 5차 회의.
- 10.14. [입장]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조직적 관권개입 규탄한다\_부안 방폐장 주민투표 부재자신고에 대한 관권 개입 규탄 성명.
- 10.15. [기획]기본권세미나5 정신적 자유권\_송석윤 교수 초청강연.
- 10.18. [입장]고동주, 오정록 병역거부 관련 연대성명 발표
- 10.18. [운영]2005 반차별 캠페인 “이주노동자 인권”\_반차별추진팀 6차 회의.
- 10.22. [기획]기본권세미나6 사회권과 환경권\_서경석 교수 초청강연.
- 10.26. [기획]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과 차별로 숨겨진 이주노동자 합동 추모식
- 10.29. [기획]기본권세미나7 청구권적 기본권\_김도균 교수 초청강연.
- 10.31. [입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11.4. [운영]18차 정기회의. 정기회의 의결로 인권회의 영문명칭 확정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
- 11.5. [기획]기본권세미나8 평화권, 평화적 생존권\_이경주 교수 초청강연.
- 11.9. [운영]2005 반차별 캠페인 “이주노동자 인권”\_반차별추진팀 7차 회의.
- 11.12. [기획]기본권세미나9 민주주의와 법치주의\_정태욱 교수 초청강연.
- 11.16. [입장]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반인권적인 경찰과 스스로 포기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11.16. [입장]테러를 이유로 APEC 기간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찰과 정부에 경고한다-APEC 기간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연석회의 성명서
- 11.19. [기획]기본권세미나10 인권운동과 개헌\_강경선 교수 초청강연.
- 11.23. [입장]11월 15일 농민대회의 경찰폭력에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 11.25. [입장]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_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발표.
- 11.25. [입장]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는가?
- 12.1. [입장]국민을 버린 정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 세계인권선언 제 57주년 기념 인권주간 선포에 부쳐
- 12.6. [기획]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_반차별추진팀 기획 토론회
- 12.9. [입장]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1차 진상조사결과 발표
- 12.16. [기획]2005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보고대회
- 12.22. [기획]12월 22일, '농민들을 살해한 경찰 기동단을 해체하라!' 기자회견 등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_농민들을 살해한 경찰 기동단을 해체하라/농민 살해 규탄 목요집회/인권단체 집단 조문/청와대 앞 촛불집회, 철야 노숙 농성 등을 진행
- 12.28. [입장]노무현 대통령은 허준영 경찰청장 파문하고, 농업을 살려내라
- 12.28. [운영]2005 반차별 캠페인 "이주노동자 인권"\_반차별추진팀 8차 회의.
- 12.29. [운영]20차 정기회의.

2006

- 1.6. [입장]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전의경 부모 폭력시위 추방 집회 관련 인권단체 호소문
- 1.12. [입장]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환영한다-정부는 NAP권고안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_국가인권위 NAP권고안 발표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성명 발표
- 1.25. [운영]21차 정기회의.
- 2.6. [입장]경찰청장 청문회 대응 민중연대와 공동으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회견
- 2.8. [운영]2005년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활동 평가 토론회
- 2.14. [입장]법원의 故 최종길 교수 유족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2.15. [입장]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2.17. [입장]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경찰의 호송과정에서 노숙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2.22. [운영]운영진 회의
- 2.23. [운영]22차 정기회의. 17개 단체 참가.
- 3.4. [기획]성전환자 성별변경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
- 3.6. [입장]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인권활동가 선언문-인권과 평화를 말살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하라!\_평택 토지수용 저지를 위한 인권활동가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이후 대추리의 빈집 인권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기로 함.
- 3.7. [입장]인권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 후 강금하는 등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는 자칭 '인권경찰'에 경고한다
- 3.10. [입장]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3.13. [입장]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픈 각성과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선포식에 즈음하여
- 3.15. [입장]평화의 땅, 황새울을 유린한 경찰과 국방부를 규탄한다!
- 3.17. 폭력적인 토지 강제수용 중단과 미군기지 확장계획 원점 재검토 촉구 긴급 기자회견
- 3.18. [입장]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인권활동가 박래군·조백기 등 불구속 수사 촉구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기자회견
- 3.22. [입장]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3.22. [입장]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경과보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
- 3.23. [운영]23차 정기회의17개 단체 참여. 사형제 폐지 간담회. 이주노동자 간담회.
- 3.24. [입장]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있는가!\_평택 경찰폭력 진정과 인권활동가 구속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 3.27. [기획]국방부 앞 규탄집회. 투쟁결의문 발표.
- 3.30. [운영]23-1차 운영진회의
- 3.31. [기획]평택의 평화, 우리의 평화-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 촛불 문화제\_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시작.
- 4.10. [입장]경찰의 연행 남용 검찰의 구속 남용 규탄한다 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 반대한다/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_경찰 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4.20. [입장]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_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에 의견서 보냄.
- 4.21. [입장]평화,인권을 짓밟는 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하라!-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 4.21. [기획]국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는 무엇인가-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를 위한 연속토론회 1
- 4.24. [입장]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_덤프연대 파업에 대한 경찰폭력,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4.26. [입장]평택에 군부대 투입을 준비하는 국방부 규탄하는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 4.27. [운영]24차 정기회의. 13개 단체 참가.
- 5.3. [입장]평택 행정대집행 강행 입장 발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 5.6. [입장]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
- 5.9. [기획]금기와 침묵을 넘어, 동성애자 차별의 성역 '군대'를 말한다\_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토론회.
- 5.10. [기획]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5.16. [입장]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5.18. [입장]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 및 요청서\_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 5.18. [입장]대법원의 부당한 판결 지연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김석진 사건 국가 상대 소송 기자회견
- 5.19. [기획]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세미나 1차\_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 5.19. [입장]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_민관합동위원회 3차 회의 결정에 대해
- 5.20. [입장]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_고려대 보건대 재학생 총학생회 선거권 요구 관련 출교 조치 등 징계 철회 요구 성명
- 5.23. [기획]우리의 투쟁은 당신의 월드컵보다 아름답다 : 24차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 촛불 문화제
- 5.24. [입장]대형수용 비리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전 이사장을 구속하고, 엄중 수사하라!
- 5.25. [운영]25차 정기회의. 11개 단체 참가. FTA 대응 인권단체 간담회.
- 5.25. [입장]군경은 마을봉쇄, 주민감시 즉각 중단하고, 평택을 떠나라!\_군경 주둔으로 인한 대추리 도두리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 5.25. [기획]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_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 5.26. [기획]경찰 인권침해 감시 학교. 평택도두리회관. 인권단체경찰대응팀, 인권교육네트워크.
- 5.26. [기획]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세미나 2차\_이주노동자,비정규직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5.27. [기획]경찰인권침해 감시학교\_평택 도두리에서.
- 5.29. [기획]평택 불심검문 및 통행제한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및 실태조사 요구
- 5.30. [입장]보건복지부는 수용시설 확대정책에서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라!\_김포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 및 김포 「사랑의집」 사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
- 5.30. [입장]지방선거 인권의제 누락 비판 및 인권 선거 촉구 성명 발표
- 5.30. [기획]평택 투쟁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 전체회의

- 6.2. [입장]경찰은 인권을 말하지 말라-경찰의 「인권진단」 협조요청 거부 및 규탄 기자회견
- 6.7. [기획]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토론회
- 6.7. [기획]노동자 생존권투쟁 및 표현의 자유 관련 선거법적용 어떻게 볼 것인가?
- 6.9. [입장]대화하자며 주민대표구속 웬말이나! 김지태, 강상원 위원장 구속을 강력 규탄한다\_김지태 대추리 이장 석방 촉구 성명.
- 6.10. [연대활동]퀴어퍼레이드 참가.
- 6.13. [기획]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전략 인권단체 워크숍
- 6.15. [입장]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_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 전면 재협상, 김지태 위원장 석방 요구 문정현 신부 단식농성 지지 성명.
- 6.16. [기획]시효배제운동팀 간담회
- 6.17. [입장]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 6.19. [연대활동]평택 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을 위한 문정현 신부 단식농성
- 6.21. [기획]인권을 지키는 ‘착한’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제작
- 6.26. [기획]김포 사량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 6.27. [입장]세계일류기업 삼성에 여성은 없다-삼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차별을 규탄하는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 6.28. [기획]김포 “사랑의 집” 관련 김포시, 보건복지부 직무유기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 6.28. [입장]경찰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에 대해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혐의 씌워 인권활동가 기소한 검찰 규탄한다
- 6.29. [기획]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6.29. [기획]인권의 종말, 나프타 10년 한미 FTA의 미래를 보다\_이강택 PD와의 간담회
- 6.30. [운영]26차 정기회의. 12개 단체 참가.
- 7.3. [입장]평택으로 향하는 평화로운 걸음을 지지하는 285인 벚바리 선언
- 7.5. [기획]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_9일까지.
- 7.11. [입장]기자회견-평화행진이 죄라면 우리 모두를 구속하라!\_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FTA반대 평화행진 중 참가자 연행 및 구속영장 발부 긴급취재 요청서
- 7.12. [입장]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7.14. [입장]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강제징집·녹화사업, 실미도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7.19. [기획]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 폭력 고발대회
- 7.27. [운영]27차 정기회의. 9개 단체 참가. 간담회로 진행.
- 7.30. [기획]약은 누구를 위해 팔리나, 제약회사의 탐욕이 에이즈를 확산시킨다\_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캠페인.
- 8.10. [입장]하중근 열사 폭력살인 경찰책임자 처벌과 집회시위의 자유와 안전 보장촉구
- 8.11. [기획]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대응 반박보고서 초안에 대한 간담회
- 8.17. [기획]인권침해의 무법천지, 불법채권추심의 실상을 폭로한다
- 8.17. [입장]노무현 정권은 연행 구속한 포항건설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경찰청장 이택순을 구속하라!-건설노동자 탄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8.17. [기획]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강제철거 저지 및 평화촌 건설을 위한 ‘여름나기 프로젝트’\_20일까지.
- 8.21. [기획]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 8.26. [기획]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상황 간담회
- 9.2. [기획]직장 문을 열이라\_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캠페인.
- 9.4. [기획]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및 보고대회-한국의 성전환자, 그 실태와 전망,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의 가능성을 위하여
- 9.5. [기획]HIV/AIDS 감염인의 인권과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인권단체 간담회
- 9.7. [운영]운영진회의

- 9.10. [입장]평택 불법 검문과 통행 제한 규탄 성명 발표
- 9.13. [입장]민간인 학살 관련 성명 발표
- 9.17. [기획]말할 게 있 수다!\_HIV/AIDS 감염인 인권 증언
- 9.19. [입장]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학살자 유족들의 요구는 정당하다-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인력 충원을 포함하여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 9.20. [기획]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인권활동가 행동의 날\_경찰청 앞 기자회견, 거리행진, 국가인권위 방문
- 9.21. [기획]포항건설노조 공안탄압, 경찰폭력 규탄 인권활동가 행동의 날. 故 하중근씨 사망사건 및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인권단체 보고서
- 9.22. [입장]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촉구 성명 발표
- 9.23. [기획]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_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캠페인.
- 9.25. [입장]이직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현대판 노예제도를 강요하지 말라!
- 9.27. [기획]5회 인권활동가대회 1차 준비모임
- 9.28. [운영]28차 정기회의. 11개 단체 참가. 8월에 참석단체 미달로 순연.
- 9.29. [입장]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 국가인권위 신속한 입장규명 촉구!!-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인권단체 기자회견
- 10.2. [입장]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부정하는 반인권세력들의 발호를 경계하며
- 10.11. [운영]운영진회의
- 10.11. [입장]이억단체의 고용허가제 개입 저지 총력투쟁 기자회견\_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 문제 반발하며 농성 돌입.
- 10.17. [기획]5회 인권활동가대회 2차 준비모임.
- 10.17. [입장]평택 불법 통행 제한 소송 제기 기자회견
- 10.18. [입장]국가인권위원회는 故 하중근씨 사망사건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하루 속히 발표하라
- 10.20. [입장]국가인권위원회에 엄중히 항의한다\_고 하중근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 촉구
- 10.20. [입장]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61주년 경찰의 날에 즈음하여\_논평 발표
- 10.28. [기획]빈곤의 또다른 이름 에이즈\_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캠페인
- 10.30. [운영]29차 정기회의. 10개 단체 참가.
- 10.30. [입장]영등포구치소와 법무부는 재소자 인권을 보장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전해투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10.31. [입장]안경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대하여
- 11.13. [기획]인권단체 2006년 하반기 공동투쟁 기획회의-하반기 정세와 인권운동의 투쟁과제들,인권단체연석회의는 어떻게 연대투쟁 할 것인가?
- 11.19. [입장]국가인권위 대추리 통행제한 중단 권고! 경찰의 즉각적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11.28. [운영]30차 정기회의. 9개 단체 참가. 간담회로 진행.
- 11.28. [기획]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Positive Rights\_세계에이즈의 날을 감염인 인권의 날로!\_12월 1일까지.
- 12.1. [기획]인권주간 공동행동을 위한 인권단체 비상회의
- 12.4. [입장]인권주간 공동행동 선포 및 인권관련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 12.4. [입장]민중총궐기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사례 발표 및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12.4. [연대활동]인권활동가 광화문 하루농성
- 12.6. [입장]경찰폭력추방, 집회시위의 자유 쟁취 선포 기자회견(경찰청앞)
- 12.8. [입장]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주간 3대 인권과제 및 20대 인권요구안 발표
- 12.8. [입장]대추리의 검문소를 치워라-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12.11. [기획]2006 한국인권보고대회\_2006 인권보고대회 결의문 작성
- 12.28. [운영]31차 정기회의.

- 1.4. [입장]집회시위 자유 제한하는 복면금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성명
- 1.18. [기획]5회 인권활동가대회. 20일까지.
- 1.23. [입장]인혁당 재심 무죄판결은 곧 유신정권에 대한 유죄판결이다\_소위 인민혁명재건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재심 무죄판결 관련 성명 발표.
- 1.23. [기획]평택 주한미군기지확장에 따른 이주자 인권실태조사 진행
- 1.25. [입장]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_보건복지부에 제출.
- 1.25. [운영]인권단체연석회의 2006년 사업보고
- 1.30. [입장]과거청산은 현재의 인권 과제다-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공개 사과하고, 보수언론은 과거청산 역행하는 몰타기 보도를 당장 중단하라
- 2.9. [입장]인권후퇴 차별심화 의료급여개약 중단!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행동 촉구 의료급여개약안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2.22. [운영]13개 단체 25명 참석.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개편을 위한 워크숍 진행.
- 2.27. [입장]정부와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에이즈예방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켜라!\_에이즈예방법공동행동 공동성명
- 2.27. [입장]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_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위원회에 제출
- 3.6. [입장]17대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법개혁관련 법안을 2월회기중에 처리하라!
- 3.7. [입장]빈곤과 채무로 허덕이는 민중의 삶 외면하는 반민중적 기만적 이자제한법 제정을 규탄한다!
- 3.13. [입장]3월 10일 경찰폭력 책임자 경찰청장 퇴진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 3.14. [기획]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미국의 군사훈련 RSOI 對 평화적 생존권
- 3.15. [기획]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사건을 통해 바라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 3.17. [운영]운영진 간담회\_민주법연 참석.
- 3.25. [기획]한미FTA저지 집회 인권침해 감시활동과 집회장소에서의 경찰 인권침해 감시활동
- 3.26. [기획]경상권 인권단체 간담회\_울산, 부산, 대구 참석.
- 3.27. [기획]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유린 인권단체 간담회, 한미 FTA대응 인권단체 긴급회의
- 3.28. [기획]한미FTA 반대 인권활동가 313인 선언 및 경찰폭력 불복종 선포식
- 3.29. [운영]32차 정기회의. 18단체 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2007년 계획. 인권단체연석회의 반전평화팀 소개.
- 4.2. [입장]국정의 총체적 실패, 한국 사회를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끈 노무현 정권 즉각 퇴진하라!\_한미FTA협정 규탄 인권회의 기자회견.
- 4.3. [입장]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관법이다\_통신비밀보호법 규탄 인권회의 기자회견.
- 4.3. [기획]GM 대우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회의
- 4.4. [입장]자유와 권리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라\_FTA 반대집회 교통방해죄 적용 경찰 규탄 성명 발표.
- 4.4. [연대활동]여수 공대위 전체회의
- 4.6. [운영]인권단체 경찰폭력 대응팀 회의
- 4.7. [기획]대추리 매향제
- 4.9. [연대활동]인혁당재건위 사건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 인권단체연석회의 추모제 준비위원회 참여.
- 4.10. [입장]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 4.10. [기획]평택범대위 75차 집행위원회
- 4.11. [입장]국민의 건강과 인권 무시하는 보건복지위는 각성하라!\_보건복지위계류 인권관련 법안 상정촉구 기자회견
- 4.11. [입장]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 4.11. [기획]인권단체 FTA 대응 모색을 위한 간담회

- 4.12. [입장]GM대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 촉구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_GM대우 사내하청 노동자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 4.12. [운영]운영진 회의
- 4.13. [기획]여수공대위 평가토론회
- 4.13. [회의]5회 인권활동가대회 백서발간 준비모임
- 4.13. [회의]인권단체 경찰폭력 대응팀 회의
- 4.16. [기획]하중근 열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전국공동행동 참여
- 4.16. [회의]에이즈예방법대응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 4.17. [회의]인권단체 FTA대응사업 준비회의
- 4.17. [입장]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_휴대폰 통화 합법감청, 통신시설사실확인자료 보관의무 등 통비법 개정안 독소조항 삭제 요구 기자회견
- 4.19. [기획]평택범대위 76차 집행위원회
- 4.18. [기획]국가인권위 사무총장 간담회
- 4.19. [기획]집시법 불복종 집회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 4.23. [기획]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토론회
- 4.26. [운영]33차 정기회의. 13개단체 참가.
- 4.26. [입장]외국어대 당국은 조명훈 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소송을 취하하고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_보직교수들의 성희롱과 폭행, 노동조합 탄압실태를 알리고자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 했던 조명훈에 대한 징계 철회, 고소 취하 요구 성명
- 4.27. [기획]평택범대위 진로모색 토론회
- 4.27. [입장]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 4.28. [입장]스웨덴 다국적 회사 테트라팩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_테트라팩 항의 성명 발표.
- 5.3. [운영]인권회의 FTA 대응팀
- 5.4. [기획]평택 국가폭력 1주기 촛불문화제
- 5.7. [기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대위 법률간담회 자료
- 5.7. [회의]경찰폭력 대응팀
- 5.9. [운영]FTA 대응팀
- 5.10. [운영]인권회의 34-1차 운영위원회
- 5.10. [기획]민주주의주간사업 기획회의
- 5.10. [입장]영남대 의료원의 CCTV는 명백한 인권침해와 노동자 탄압이다!\_영남대 의료원 CCTV 인권침해 항의 성명 발표
- 5.11. [기획]테트라팩 공개질의서 발송
- 5.15. [기획]평화놀이터 진행
- 5.17. [입장]김태환 제주지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결정, 해군기지 유치 결정 철회 요구 성명\_제주 해군기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5.19. [입장]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에 대한 감치 판결은 부당하다\_구노회 이광렬 사무국장 감치에 대한 성명.
- 5.21. [기획]에이즈예방법공동행동 집행위원회
- 5.21. [운영]인권회의 경찰폭력대응팀
- 5.22. [입장]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무분별한 생체정보의 전자화,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한다
- 5.22. [입장]단식 중인 이시우 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5.22. [운영]인권회의 FTA대응팀
- 5.23. [입장]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_법무부 NAP 규탄 성명 발표.
- 5.25. [입장]‘포괄적인 에이즈 예방프로그램, 치료, 보호, 지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위한 약속을 지켜라!\_에이즈예방법공대위연대 성명 발표
- 5.29. [운영]34차 정기회의. 10개단체 참석. 친구사이 가입.

- 5.30. [기획]헌법21조를 지켜라-집회시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불복종 행동 정치검열에 저항하는 5가지 비책을 공  
모합니다
- 6.1. [입장]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개정하라!
- 6.4. [기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6.10. [입장]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중단 없는 투쟁을!-87년 6월 항쟁 20주년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논평
- 6.15. [입장]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민주열사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유족들 앞에 사과하라
- 6.29. [기획]경찰폭력 대응팀 비신고집회 및 한미 FTA 경찰폭력 감시 활동
- 6.28. [운영]35차 정기회의
- 6.29. [입장]국회는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법개혁 입법 완수하라
- 7.2. [입장]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 7.3.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공개 추천과 검증절차를 마련하라
- 7.5. [입장] 정립회관 감사 촉구 성명에 연명
- 7.6. [입장]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석방하고, 한미 FTA 반대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_FTA범국본 두 대  
표에 대한 구속결정 규탄 성명 발표.
- 7.11. [입장]이랜드 침탈기도에 대한 규탄성명
- 7.12. [입장]경찰의 공권력 투입 규탄\_뉴코아강남점 7월 11일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
- 7.16. [입장]입구 폐쇄와 용접 감금! 경찰과 사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멈춰라\_뉴코아 이랜드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및 현장조사활동.
- 7.18. [기획]뉴코아 현장조사 결과발표 및 국가인권위에 보고서 제출.
- 7.20. [입장]이랜드 경찰투입방침 규탄 성명 발표
- 7.21. [입장]7월 20일 파업 농성 중 연행된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강제알몸검신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에 대한 항의서한  
발표.
- 7.22. [입장]한국인 피랍사태에 대한 성명 발표.
- 7.25. [입장]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 검열 규탄 기자회견
- 7.25. [입장]삼성코레노 폐쇄 다음의 공식사과 촉구 기자회견
- 7.25. [입장]뉴코아-이랜드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영장재청구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 7.26. [입장]GM대우의 야만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규탄한다
- 7.26. [운영]36차 정기회의.10개단체 참석.
- 7.27. [입장]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노동권 침해하는 가처분 결정 거부한다!-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7.29. [입장]자료]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감금 및 단전조치 등 인권침해행위를 긴급 규탄한다
- 7.30. [기획]뉴코아 강남점(김스클럽) 점거 파업장 인권침해 긴급 보고서
- 7.31. [입장]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_7월 31일 새벽 강남 뉴코아 농성장 강제진입 후 노동  
자 폭행 및 연행 규탄 성명.
- 8.## [기획]FTA반대 백인백색 인권선언 행동\_온라인 활동.
- 8.1. [기획]비정규약법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점거행동
- 8.23. [운영]37차 정기회의. 8개단체 참석. 간담회로 진행.
- 8.28. [기획]'노동자의 단결이 범죄일 수 없다' 파업의 형사처벌, 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 11.08. [입장]故 정해진 이근재 열사 죽음과 민중생존권 파탄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발표\_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조합 인  
정, 교섭체결 요구 분신 건설노조 고 정해진 열사, 고양시 노점단속 이후 목매 숨진 고 이근재 열사 죽음에 관한 인권  
단체 보고서 및 기자회견.
- 11.28. [기획]차별금지법 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간담회
- 11.29. [운영]38차 정기회의.

- 11.29. [기획]인권주간. 12월12일까지.
- 12.3. [기획]2007한국인권보고대회

## 2008

- 1.17. [입장]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우려하며
- 1.21. [입장]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도구화하려는 속셈 드러냈다-한나라당 1.21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논평에  
부처
- 1.23 [입장]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 2.1. [입장]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 명동성당 노숙농성 1차 집중투쟁 해산식
- 2.1. [기획]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저지 및 독립성 쟁취를 위한 1차 집중투쟁 평가안
- 2.17. [기획]6회 인권활동가대회. 19일까지 인권운동토론회. 현 시기 인권운동 상황 진단과 방향 제언\_박래군 제출.
- 2.28. [운영]40차 정기회의. 8개단체 참석. 간담회로 진행. 2008년 인권회의 활동방향 및 계획 논의.
- 3.24. [입장]집회 시위 자유를 불법시하고, 진압경찰에 과감한 면책 보장을 하겠다는 망언을 거두라
- 3.25. [기획]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1차 모임
- 3.27. [운영]41차 정기회의. 14개 단체 참석.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조사단 활동 승인.
- 4.8. [입장]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구성 및 현장조사 등 이후 일정 보도자료 배포
- 4.17. [기획]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회
- 4.19. [기획]생체여권팀 청계광장 직접행동
- 4.22. [입장]생체여권팀 기자회견 및 여권재발급
- 4.24. [운영]42차 정기회의. 11개 단체 참석. 민주노동자연대 가입승인.
- 4.26. [입장]전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심검문 개악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 5.1. [기획]우리의 소리가 차벽을 넘어 May-Day 집회시위 퍼포먼스 참여
- 5.6. [입장]미쇠고기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에 대한 인권단체 규탄 기자회견
- 5.7. [입장]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 5.9. [입장]이주노조에 대한 표적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 5.14. [기획]이명박 정부 법치주의에 대한 토론회
- 5.15. [입장]경찰은 촛불 행사 청소년 탄압을 중단하라
- 5.16. [기획]사례를 통해 본 투쟁하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 인권 보고대회
- 5.19. [입장]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5.19. [입장]촛불문화제 탄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 5.22. [운영]43차 정기회의. 경찰폭력 감시단을 공권력 감시 및 대응팀으로 확대 재편.
- 5.29. [입장]누가 촛불-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 5.30. [입장]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_2008 촛불집회 관련한 호소문.
- 6.3. [입장]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이명박 정권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 6.10. [입장]컨테이너를 쌓아 시민의 발목을 잡고 야만적 진압을 명령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사법처리하라
- 6.10. [입장]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 수 없다
- 6.12. [입장]촛불집회 보장, 전의경제도 폐지 요구인권단체 기자회견
- 6.26. [운영]44차 정기회의. 인권교육센터 들 가입승인. 노동권팀 재구성.
- 6.29. [입장]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 7.3. [토론회]집시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전의경 제도에 대한 제언 토론회
- 7.5. [기획]시청광장에서 집시법개정 서명, 어청수 현상수배전단 배포
- 7.10. [기획]제1회 인권캠프. 활동가 포함 60명 참가. 7월 12일까지.
- 7.23. [입장]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엠네스티 촛불집회조사 핵심을 외면하는 정부가 부끄럽다

- 7.24. [운영]45차 정기회의. 12개 단체 참석.
- 7.25. [입장]제성호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에 인권은 없다
- 7.28. [입장]의도적인 인권침해감시단 연행을 규탄한다!-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7.30. [입장]백골단 부활, 경찰기동대 창설을 규탄한다!
- 7.30. [입장]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륭전자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단식 50일을 맞아
- 8.4. [입장]기륭문제해결과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8.5. [입장]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선보고 후조치 방침 철회 규탄 성명
- 8.5. [입장]인권위원 인선에 공개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라
- 8.5. [입장]비자면제 프로그램(WVP)은 인권포기 굴욕외교이다!
- 8.7. [입장]경찰기동대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 기자회견
- 8.11. [입장]농촌진흥청 퇴출제 관련 진상조사 발표 기자회견
- 8.14. [입장] 서울메트로는 인력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강제퇴출)을 전면 중단하라!!
- 8.16. [입장]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 8.17. [입장]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8.18. [입장]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의문사로 남겨서는 안된다
- 8.18. [입장]마포경찰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처우 규탄 기자회견
- 8.21. [입장]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이유로 누리꾼을 구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침해이다!
- 8.26. [기획]하는 사람, 막는 놈, 시키는 놈-2008version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상영회 및 Talk Show
- 8.26. [입장]기륭전자는 불법도청 사과하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 8.28. [운영]46차 정기회의. 10개단체 참석.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 ‘KANOS’(카노스) 가입승인. 시민인권선언-헌법1조에 인권의 댓가를 달자\_세계인권선언 60주년 사업 승인.
- 8.28. [입장]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한 최윤희씨의 비상임위원 선출을 반대한다
- 9.3. [입장] 촛불시위 네티즌 구속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것이다-아고라 권태로운창 구속과 네티즌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 9.3. [입장]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한나라당 규탄, 최윤희 교수 인권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9.10. [입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9.10. [입장]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 9.25. [운영]47차 정기회의. 11개단체 참석.
- 9.25. [기획]서울지하철 구조조정(조직개편) 인권침해 보고대회 진행.
- 9.30. [입장]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리콜하라
- 10.6. [입장]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정치적 속셈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정부여당과 일부언론
- 10.7. [입장]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 10.10. [기획] 내면의 촛불 빛내기.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 10.10. [입장] 직무범위 넘어서 시민사회 사찰하는 국정원부터 수사하라!
- 10.13. [입장]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 10.13. [입장] 집시법 10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하며,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10.21. [입장]기륭전자 앞 집단폭행 목인 방조 경찰 규탄
- 10.21. [입장]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상임,비상임 위원에게 촛불관련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입장 전달
- 10.22. [입장]반인권적 김양원 목사 국가인권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 10.23. [운영]48차 정기회의. 12개 단체 참석.
- 10.27. [입장]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인권침해 가해자 김양원 퇴진 촉구 농성을 시작하며
- 10.28. [입장]국가인권위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규탄한다-국가인권위는 무엇 때문에 김양원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가
- 10.31. [기획]달마다 촛불공감 집시법 토크쇼 진행

- 11.10. [입장]김양원 ‘인권’위원 사퇴촉구와 (가칭)“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제안 기자회견
- 11.17. [입장]미국 비자면제 시행에 대한 인권회의 논평
- 11.19. [입장]전용철 열사 사인 관련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 11.21. [입장]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행안부의 올해의 인권상 이정이 추천자 심사 제외에 대한 인권단체 규탄 성명
- 11.21. [입장]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과거사위 막무가내 통합법안, 과거청산 물타기하고 국가제도 무력화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 11.24. [입장]한나라당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
- 11.25. [입장]국가인권위원회, 7주년으로 끝낼 것인가!-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며\_국가인권위원회 7주년과 김양원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11.27. [운영]49차 정기회의. 12개 단체 참석.
- 12.10. [기획]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년 인권선언 선포
- 12.12. [입장]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시도 규탄 성명
- 12.17. [입장]반인권적 김태훈, 최윤희, 황덕남 위원을 강력 규탄한다!
- 12.18. [운영]50차 정기회의.
- 12.18. [입장]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현대미포조선의 실질적 사주로서 국민앞에 사죄하라\_현대미포조선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발표.
- 12.30. [입장]언론노조의 총파업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이다
- 12.30. [입장]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 2009

- 1.5. [입장]미포조선 하청업체 용인기업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1.12. [기획]국가인권위 김양원 비상임위원 관련 전원위원회 앞 피케팅
- 1.16. [입장]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 1.20. [입장]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_성명 발표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결함
- 1.21. [운영]51차 정기회의. 8개 단체 참가. 간담회 처리.
- 1.22. [입장]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 1.28. [입장]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2차 보고 및 경찰과 용역 고발 기자회견
- 2.4. [입장]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나-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 2.4. [입장]검찰은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편파-왜곡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당장 구속-수사하라!
- 2.10. [입장]검찰이 말한 독립성은 ‘민중으로부터의 독립성’인가!-검찰의 편파수사, 왜곡수사를 규탄한다
- 2.13. [입장]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국가인권위 조직축소는 이 땅의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는 것이다\_인권위 축소 철회 요구 기자회견 및 행안부에 의견서 제출.
- 2.18. [기획]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18일·19일 집/중/행/동
- 2.19. [입장]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30%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 2.20. [입장]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30%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 2.23. [기획]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 2.24. [입장]이명박 정권 1년,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보다.“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 2.25. [운영]52차 정기회의. 8개단체 참가. 간담회 처리.
- 2.27. [입장]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인권 최고대표(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국제사회의 망신살, 국가인권위 축소시도를 중단하라!
- 3.2. [입장]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 발족과 이달곤 장관 면담



- 요구 기자회견
- 3.10. [기획]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철회를 위한 시민인권사회단체 전국결의대회
- 3.10. [기획]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및 당사자 증언대회
- 3.10. [입장]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 촉구정당 및 인권시민단체 합동기자회견
- 3.17. [입장]행정안전부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_국가인권위 대응 전국동시다발 집중행동.
- 3.19. [입장]국민모두를 가두려는가!-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구속 규탄 성명
- 3.22. [기획]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아고라 서명 운동 진행
- 3.23. [입장]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 3.23. [입장]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석방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기자회견
- 3.24. [기획]인권위 조직 21% 축소 최종 통보한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노숙농성 및 행안부장관 그림자 투쟁 선포\_행안부 앞 농성
- 3.25. [입장]행정안전부는 ‘인권’을 잡아가두려는가!-인권위 축소 철회가 아닌, 인권활동가 연행이 웬말이냐! 반인권적 행안부를 규탄한다!
- 3.26. [입장]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차관회의 통과 규탄 기자회견-인권위 축소 철회를 위한 끝장 투쟁 선포 기자회견\_행안부 농성 정리. 규탄 기자회견.
- 3.30. [입장]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안 국무회의 통과시키지 말라-국가인권위 축소는 인권의 후퇴이다!\_국가인권위 조직축소 국무회의 상정 반대 기자회견.
- 3.30. [입장]국무회의의 통과는 이명박정권 하의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이다!-이명박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권을 사수하자
- 4.2. [기획]용산참사 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회
- 4.2. [운영]53차 정기회의의. 10개단체 참가.
- 4.7. [입장]GM대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무급순환휴직을 철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 4.9. [기획]용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 간담회
- 4.9. [기획]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반대 및 장기적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 1차 간담회
- 4.28. [기획]국가인권위원회 대응 관련 인권단체 3차 간담회
- 4.30. [입장]서산경찰서의 유치장내 구타사건에 관한 인권단체기자회견
- 4.30. [운영]54차 정기회의의.
- 5.4. [입장]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인권단체 기자회견 참석자를 연행한 폭력 경찰을 규탄한다!\_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
- 5.6. [입장]기자회견마저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_경찰의 기자회견 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5.8. [입장]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진실 왜곡과 은폐에 앞장서는 검찰과 이에 동조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 5.18. [입장]경찰의 무더기 ‘노동자 사망’을 규탄한다\_박종철열사 추모대회 참가자 연행 규탄 성명 발표.
- 5.19. [입장]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 5.20. [입장]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집회 금지의 나라’ 대한민국\_도심 집회 불허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 5.28. [운영]55차 정기회의의. 13개 단체 참가.
- 6.4. [기획]이명박 집권 이후 집시법 적용실태와 문제점 보고회
- 6.10. [인권침해감시단]610대회 인권감시단 활동 전개
- 6.13. [기획]국민들 때리지마!-살인미수, 경찰폭력 강희락 경찰청장 처벌하라\_경찰폭력 규탄 촛불문화제
- 6.22. [입장]쌍용자동차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도자료
- 6.25. [운영]56차 정기회의의.8개 단체 참가

- 6.30. [입장]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 7.2. [입장]해고는 살인 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_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보고대회
- 7.13. [입장]‘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7.11 범국민 추모의 날’ 집회에 대한경찰 대응의 문제점\_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 7.13. [기획]부적격 인권위원장 추천에 대한 항의 서한 및 공개 질의서
- 7.14. [입장]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의문사로 남기는 사법부는 개혁되어야 한다
- 7.15. [기획]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 7.20. [입장]쌍용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측과 정부를 규탄한다!
- 7.22. [입장]최소한의 인권의식도, 해결의지도 없는 이명박 정부와 쌍용자동차를 규탄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_공권력투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7.26. [기획]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_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 7.30. [기획]7월 29일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_인권침해 감시활동 보고서
- 7.30. [기획]쌍용차 농성장 물 의약품 반입 직접행동. 8월 3일 까지.
- 7.30. [운영]57차 정기회의의. 12개 단체 참가.
- 7.31. [입장]불법적인 공권력 사용과 식수, 음식물 반입과 의료적 접근 차단에 따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 8.3. [입장]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쌍용자동차관련 발표 기자회견-경찰은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_쌍용차에 대량 살포한 최루액성분 분석발표 기자회견.
- 8.3. [입장]표현의 자유가 없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정원일 뿐이다
- 8.4. [입장]광화문 광장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광화문 광장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하라!\_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강제 연행 규탄과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 기자회견.
- 8.5. [입장]살인무기 사용, 퇴로없는 살인진압을 중단하고 즉각 공권력을 철수하라-8월 5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조사\_인권침해조사 발표
- 8.6. [입장]쌍용차 살인적인 경찰폭력, 인권유린 보고 및 규탄 긴급 기자회견
- 8.13. [기획]쌍용자동차 파업 살인진압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대회
- 8.27. [운영]58차 정기회의의.10개단체 참가.
- 9.6. [입장]쌍용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권 파괴공작을 중단하라!
- 9.16. [입장]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군기무사 불법사찰 폭로 기자회견\_민주넷 주최.
- 9.24. [운영]59차 정기회의의. 6개단체 참가. 간담회 처리.
- 9.25. [입장]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르게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 단체연석회의 입장
- 10.7. [기획]이제는 끝나야 한다!\_공간기구 피해자 증언대회.
- 10.8. [입장]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국가인권위마저 그 독립성이 흔들려 역행하고 있다\_‘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알리기 위해 보낸 공동 서한
- 10.21. [입장]MB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로!시국치안이 아니라 민생치안으로!\_‘경찰의 날’에 즈음한 경찰개혁 촉구 시민 사회 기자회견
- 10.22. [운영]60차 정기회의의. 10개 단체 참가.
- 10.22. [입장]검찰은 무능하고 야비하다-용산참사 검찰구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 10.22. [입장]의문사는 민주화와 인권의 문제-모든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 한다
- 10.23. [입장]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과 구속자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10.28. [기획]집회시위자유를 위한 인권행동 “유령들의 집회”

- 10.29 [입장]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용산참사 1심 선고결과에 대한 성명
- 11.17. [입장]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11.26. [입장]정부와 발전회사는 발전노조의 적법한 파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_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인권침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 11.26. [운영]61차 정기회의. 10개 단체 참가.
- 12.1. [기획]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 발간
- 12.9. [기획]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_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서명운동.
- 12.10. [입장]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_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
- 12.17. [입장]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 12.23. [기획]MB정부 노사관계 선진화가 불러온 납치/감금이 난무하는 노동현장\_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의 파업파괴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대회.
- 12.23. [운영]62차 정기회의. 9개 단체 참가.

## 2010

- 1.8. [입장]용산참사 의견표명 ‘납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 국가인권위의 ‘독재자’로 군림하는 현병철은 사퇴하라!\_현병철 위원장 사퇴요구 기자회견.
- 1.14. [성명]이종희,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구속할 수 없다
- 1.28. [운영]63차 정기회의. 10개 단체 참석.
- 2.10. [입장]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 2.9. [기획]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대회 공동 주최.
- 2.10. [입장]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 2.17. [입장]“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야간집회 밤10시 제한 규탄 기자회견
- 2.25. [운영]64차 정기회의. 12개 단체 참석.
- 3.4. [기획]2010년 인권회의 분야별 간담회 소수자분야 1차.
- 3.18. [기획]2010년 인권회의 분야별 간담회 노동권분야 1차.
- 3.22. [입장]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사형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 3.23. [기획]2010년 인권회의 분야별 간담회 소수자분야 2차. 평화권 분야.
- 3.24. [입장]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_사형집행 재개 반대 긴급기자회견.
- 3.25. [운영]65차 정기회의. 11개 단체 참석.
- 4.2. [입장]삼성은 죽어간 삼성 노동자들 앞에 사과하고, 경찰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고 박지연씨 추모제에서 연행된 7명 석방하라
- 4.13. [입장]국가인권위,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4.15. [기획]2010년 인권회의 분야별 간담회 노동권분야 2차.
- 4.19. [입장]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4.20. [입장]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그간의 합의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뒤집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는 행정안전부의 밥그릇이 될 수 없다!
- 4.21. [기획]내 자유가 도대체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가\_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광화문 1인 시위 시작.
- 4.26. [기획]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_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 4.28. [기획]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4.28. [입장]건설노조 탄압규탄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쟁취-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기자회견
- 4.29. [입장]진실화해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적 진실규명 시도를 경고한다-철저한 진실규명만이 인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

- 음을 제대로 인식하라\_동의대 사건 기각 규탄.
- 5.4. [입장]2010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위태롭다\_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입국. 국내 인권사회단체 입장 발표.
- 5.9. [입장]프랭크 라 뤼 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NGO 단체 및 피해자 조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5.12. [입장]표현의 자유 억압, 무더기 소환장 남발, 강제 연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
- 5.17. [입장]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위태로워졌다-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 발표
- 5.19. [입장]집회를 막는데 군대를 동원하겠다? G20 경호안전 특별법 반대한다!
- 5.26. [운영]66차 정기회의. 14개 단체 참석.
- 6.14. [입장]경찰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개정안, 집시법10조개정안 철회하라!\_경찰관직무집행법안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전달.
- 6.17. [기획]‘독재감옥’이 되살아나고 있다!-감옥 환경개선과 재소자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노동·인권단체 공동행동의 날
- 6.17. [입장]다른 생각을 금하는 마녀사냥을 금하라-참여연대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논평
- 6.23. [입장]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수사를 중단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투명한 논의를 만들어야 한다!
- 6.23. [운영]67차 정기회의. 14개 단체 참석.
- 6.24. [입장]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 6.28. [입장]한나라당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 신설·강행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한나라당과 경찰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 7.1. [입장]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7.21. [운영]68차 정기회의. 9개 단체 참석.
- 7.23. [입장]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우리의 삶을 파괴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8.3. [입장]‘권력형 비리 범죄자’ 엄벌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_권력형 비리 범죄자 사면반대, 8.15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
- 8.12. [입장]강은 흐르게 하고, 사람은 살게 하라-경찰폭력 중단과 인권위 긴급구제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긴급성명
- 8.16. [입장]이포보 위 활동가 긴급구제 기각에 대한 항의서한 국가인권위에 전달
- 8.18. [입장]비정규직 탄압, 집회시위의 자유, 기본권 파괴하는 현대자동차그룹, 서초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 8.19. [입장]국회청문회도 필요없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즉각 사퇴 요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9.1. [입장]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_알몸 투시기 반대 기자회견.
- 9.9. [입장]한나라당은 철지난 야간집회금지법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정기국회에서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또 다른 입법은 필요 없다!
- 9.10. [입장]민주당의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우려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 9.17. [입장]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 출발이다\_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에 관한 논평.
- 9.18. [기획]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 돌입
- 9.27. [기획]집시법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 실태와 과제 토론회/야간집회 재심 청구인단 모집
- 9.30. [입장]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 9.30. [기획]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
- 9.30. [입장]야간집회금지법 강행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 9.30. [운영]69차 정기회의. 11개 단체 참석.
- 10.6. [입장]희망연대노조 C&M지부 파업을 지지하며 C&M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한다
- 10.8. [기획]경찰장비규정 개정안 왜 문제인가?\_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 10.13. [입장]진실화해위원회는 부당해임 철회하고 수집자료 적극 공개하라
- 10.19. [입장]G20을 빌미로 야간집회금지 강행하는 한나라당 규탄 제 사회 시민 인권단체 기자회견
- 10.21. [기획]집회금지가 집회를 부른다 야간집회금지법안 강행 통과 기도 한나라당 규탄 야간 촛불 집회
- 10.22. [입장]기류사태 해결과 파견노동,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 10.26. [운영]70차 정기회의. 13개 단체 참석.
  - 10.28. [입장]인권보호규정 강화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발의 기자회견
  - 10.29. [입장]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다\_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11.2. [입장]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 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 11.4. [기획]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_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시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과 농성.
  - 11.5. [기획]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토론회 개최.
  - 11.8. [입장]인권위 독립성 훼손,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
  - 11.8. [입장]경찰의 노동자대회 행진봉쇄와 시위참가자 체포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즉각 연행자를 석방하고 행진 불허 기조를 철회하라
  - 11.9. [입장]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촉구 정당-인권시민단체 공동 결의대회
  - 11.10. [입장]인권위원 인선시스템 도입 않고, 신임 상임위원 내정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사형선고다!\_청와대의 김영혜 변호사 상임위원 내정에 대한 성명 발표.
  - 11.10. [입장]뽀뽀하고 모르쇠, 가로채기로 일관한 현병철 사퇴만이 답이라는 걸 전 국민에게 알려준 국정감사
  - 11.11. [입장]국민과의 불통 선언, 반인권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현병철 위원장 사퇴 요구 전국 660개 단체 공동성명서
  - 11.12. [입장] 껌데기만 남는 자유가 아닌, 모든 시민.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 11.15. [입장]김영혜는 인권위 상임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을 거절하기를 요구합니다\_김영혜 변호사에게 보내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직 거절 요구 서한
  - 11.16. [입장]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 11.16. [입장]"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최근 논란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을 접하며
  - 11.17. [기획]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리로 돌아오라!\_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
  - 11.18. [기획]한국 인권단체, ICC에 한국 인권위에 진상조사단 파견 요구 서한 발송 및 국제사회 여론 형성을 위한 출국
  - 11.18. [입장]그 밥에 그 나물, 한나라당은 흥진표 인권위 상임위원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_한나라당의 흥진표 씨 상임위원 내정에 대한 성명 발표.
  - 11.19. [입장]현병철 사퇴·한나라당 흥진표 추천 철회 긴급기자회견
  - 11.20. [입장]현병철 인권위원장 국정감사 태도에 대한 비판 성명
  - 11.24. [운영]71차 정기회의. 10개 단체 참석.
  - 11.25. [기획]국가인권위 설립 9주년 맞이 고사 직전의 국가인권위를 "9"하라!!\_국가인권위 설립 9주년 토론회와 촛불문화제.
  - 12.1. [입장]빈곤해결의 출발이자 복지의 기초인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국회는 가난한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잊지 마십시오
  - 12.3. [입장]장애인 차별하고 경찰력 동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웬 말이나!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12.8. [입장]'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 12.10. [기획]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_12월 10일 인권상 거부 기자회견. 인권10대 뉴스 발표.
  - 12.17. [입장]인간답게 살기위해 올라갔다! GM대우는 인권탄압 중단하고 사태를 책임져라!\_GM대우 비정규직사태 해결을 위한 인권,법률단체 기자회견.
  - 12.22. [운영]72차 정기회의. 10개 단체 참석.
- 2011**
- 2.23. [운영]74차 정기회의.
  - 2.28. [기획]표현의 자유 1차 간담회

- 3.10. [입장]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해결을 위한 인권 법률단체 기자회견
- 3.11. [기획]표현의 자유 2차 간담회
- 3.23. [운영]75차 정기회의.
- 3.23. [기획]표현의 자유 3차 간담회
- 3.25. [연대활동]정리하고 철회 및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개최
- 4.1. [입장]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_구 군형법 92조에 대한 합헌결정 규탄 논평 발표.
- 4.5. [입장]군형법 제92조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_구 군형법 92조에 대한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
- 4.7. [입장]DNA이용법을 이용하여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의 DNA를 채취하는 검찰규탄 기자회견
- 4.13. [입장]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 · 노조탈퇴 강요 의혹에 대해 인권 · 법률단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4.14. [입장]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실질적인 검찰 권한견제 방안마련이 핵심이다
- 4.19. [입장]국민은 철저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_국회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공동주최.
- 4.20. [연대활동]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 4.20. [입장]국회 사법개혁 처리 지연 규탄 공동성명
- 4.22. [운영]운영진 회의
- 4.27. [운영]76차 정기회의.
- 4.28. [연대활동]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추모문화제
- 5.6. [입장]현대차 비정규직 대량징계, 노조탈퇴강요 진상조사 관련 피조사자들의 신상정보 언론 공개 문제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과 제안
- 5.## [입장]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부당징계 · 노조탈퇴강요 ·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사과의 글
- 5.12. [입장]교정시설 인권침해 규탄 및 양심수 집단소송 기자회견.
- 5.12. [입장]경찰의 자의적 총기사용 확대를 반대한다!
- 5.18. [기획]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검찰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 5.24. [운영]77차 정기회의.
- 5.25. [입장]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잠잘 권리마저 짓밟은 정부의 강제진압을 규탄한다!
- 5.27. [입장]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인권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5.30. [기획]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 촉구 결의대회
- 5.31. [기획]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참가단 파견 기자간담회
- 6.3. [입장]국회 상설특검제 논의는 생색내기식 꿈수일 뿐\_사법개혁공대위 성명 발표
- 6.5. [입장]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 6.7. [입장]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경찰의 무력행동을 규탄한다
- 6.9. [기획]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 6.10. [입장]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 6.10. [기획]국가인권기본정책계획 수립(NAP) 관련 간담회
- 6.14. [입장]검찰개혁 좌초 위기 규탄 긴급 기자회견
- 6.16. [입장]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 6.16. [입장]무차별적 DNA 채취, 디엔에이법은 위헌이다\_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헌법소원 기자회견
- 6.21. [기획]표현의 자유 침해 못참겠다! 연대하고, 연구하고, 행동하자!\_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 6.21. [기획]국가인권기본정책계획 수립(NAP) 관련 2차 간담회
- 6.24. [입장]벌금형 받은 이주노동자까지 연행해 간 인천 출입국을 규탄한다!\_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규탄 기자회견.

- 6.28. [운영]78차 정기회의.
- 6.28. [입장]국가인권위원회 형식적 NAP추진 비판과 민간위원 추천 거부 인권단체 기자회견\_56개 인권단체, 인권위 NAP 추진 민간위원 추천거부 기자회견.
- 6.28. [기획]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적법절차 준수하고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_베트남이주노동자 무죄석방대책위 출입국사무소 규탄집회
- 6.28. [기획]바람직한 대법관 · 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 6.29. [기획]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_국회의원 장세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주최.
- 6.30. [입장]사람을 보라! 노동자들을 더 이상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_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
- 7.9. [기획]2차 희망버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경찰감시 활동. 10일까지.
- 7.13. [입장]조현오 경찰청장 서천호 부산경찰청장 파면 기자회견-7월 9일 '2차 희망의 버스' 인권유린, 공권력남용 및 국가폭력 규탄
- 7.19. [입장]여기 사람이 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_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평화적 농성자들에 대한 인권탄압 규탄 및 생필품 전달 기자회견
- 7.19. [입장]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 파업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행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 7.20. [기획]공무원, 교사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허용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토론회
- 7.20. [입장]표현의 자유 억압 및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기자회견문
- 7.26. [입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행정집행 규탄기자회견
- 7.28. [기획]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 7.29. [입장]3차 '희망 버스'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경찰이 해서는 안 될 10가지, 경찰이 해야할 10가지\_경찰 모니터\_감시돌입 발표
- 7.30. [기획]3차 희망버스 경찰감시 활동 전개
- 8.4. [입장]공안탄압 중단과 8·15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 기자회견
- 8.11. [입장]인권 실종, 사건 조작...이른바'왕재산'사건 고발 기자회견
- 8.15. [입장]검찰은 공안통치보다는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_한상대 검찰총장 공안정국 조장하는 취임사관련 규탄성명.
- 8.17. [기획]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_17차 유엔인권이사회 후속토론회.
- 8.18. [입장]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하는 반인권적 신체검증 강제수사 규탄 기자회견
- 8.19. [입장]전면적 무상급식이 인권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인권단체 기자회견
- 8.## [기획]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 8.23. [운영]79차 정기회의.
- 8.26. [입장]'4차희망 버스'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_경찰 모니터\_감시 돌입 발표
- 8.26. [기획]4차 희망버스 경찰감시 활동 전개. 27일까지.
- 8.29. [입장]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 8.31. [입장]서울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방침
- 9.1. [입장]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_제주 해군기지 공사강행 규탄하고 강정마을 주민, 활동가 석방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9.2. [기획]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감시 활동 전개.
- 9.3. [연대활동]제주강정마을 희망비행기
- 9.6. [기획]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민주노총과 인권단체들, 노동감시 대응 방침 밝혀
- 9.9. [기획]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

- 9.22. [기획]검찰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곽노현 교육감 사건으로 본 검찰개혁 긴급 시민토론회
- 9.23. [기획]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 9.27. [운영]80차 정기회의.
- 9.28. [기획]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9.28. [기획]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_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보고서 발표.
- 9.29. [입장]금품수수의혹 김성영씨 인권위원 임명 반대한다\_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공동행동 공동성명 발표.
- 10.5. [입장]레프트21 판매자 6인 전원 무죄 판결 촉구·검찰 항소 규탄 기자회견
- 10.5. [입장]경기도는 1주년, 광주는 오늘! 서울도 서두르라!-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10.6. [연대활동]광주인화학교성폭력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
- 10.7. [입장]해군의 구럼비 파괴와 폭력행위 규탄 기자회견
- 10.17. [입장]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주민 정책 개선하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 10.21. [입장]경찰의 날에 물대포로 국민 협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10.21. [기획]유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평화인권 거창순례 후원.
- 10.23. [입장]사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 대법관 후보들인지 의문.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추천위 구성 바꾸고 공개적 후보선거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해야
- 10.25. [운영]81차 정기회의.
- 10.28. [입장]조현오 경찰청장은 물리력강화에 앞서 인권의식을 강화하라!!
- 10.28. [연대활동]도가니대책위 선전전
- 10.28. [기획]한국인권보고대회 3차 전체회의 참석
- 10.28. [연대활동]제1회 반도체노동자의 날 선언
- 11.4. [입장]국회는 즉각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해서 검찰개혁 추진해야
- 11.9. [입장]더 이상 경찰의 폭력을 지켜볼 수 없다! 경찰은 불법적 폭력행위를 책임져라!-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 11.13. [입장]폭력, 과잉 진압 경찰 당국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한미FTA저지 범국민행동 집회시 고막파열 물대포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
- 11.16. [입장]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참석 및 발언
- 11.18. [기획]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_국가인권위원회 10년 평가 대토론회 공동주최, 인권위 투쟁 10년 사진전 전시회. 19일까지
- 11.22. [입장]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즉각 처리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 11.25. [입장]국민의 인권위를 되찾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_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 11.28. [입장]"반노동정책과 무자비한 해고가 불러온 해고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사태해결 촉구" 인권단체·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11.29. [운영]82차 정기회의
- 12.5. [기획]201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12.6. [입장]KT 산재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촉구 기자회견
- 12.8. [입장]세계인권선언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및 인권옹호자 전국 동시다발 100인 1인시위 공동행동
- 12.9. [입장]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인권추락상 시상 기자회견
- 12.9. [기획]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광화문광장 1인 시위 인권회의 참여
- 12.10. [기획]No!국가보안법, Stop!국가보안법 집회
- 12.14. [입장]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농성 지지한다-서울시의회는 주민 뜻 받들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12.14. [입장]공항철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규탄 기자회견

- 12.15. [입장]서울시의회 점거농성 지지 및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 원안 촉구 성명서 발표
- 12.20. [운영]83차 정기회의

**2012**

- 1.31. [운영]84차 정기회의
- 2.14. [기획]인권회의 선거 대응 사전 간담회
- 2.21. [운영]85차 정기회의
- 2.22. [기획]DNA법 워크숍
- 2.29. [기획]인권운동, 선거에 어떻게 할 것인가\_인권단체 선거 대응 간담회.
- 3.10. [입장]강정마을 구럼비 발파 3일간의 인권유린 고발 기자회견
- 3.12. [입장]성직자까지 구속하며 제주해군기지 강행하려는가!-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3.13. [입장]경찰수사 「Best 10, Worst 10」 선정 발표 규탄 경찰청앞 긴급 기자회견
- 3.14. [입장]요식행위 2기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 3.15. [입장]명예훼손 소송? 이제 굳까지 나서는가?\_표현의 자유 연대 공동발표.
- 3.15. [입장]인터넷 행정심의회는 폐지되어야 한다\_표현의 자유 연대 공동발표.
- 3.16. [연대활동]구럼비를 죽이지 마라제주해군기지 강행 중단 광화문 촛불 집회\_인권회의 담당.
- 3.20. [운영]86차 정기회의
- 3.21. [입장]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19대 국회,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작이다\_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3.22. [입장]김석기-허준영은 제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 3.23. [입장]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평화집회 보호하라\_서울시청광장 봉쇄 규탄 성명.
- 4.5. [입장]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_성명 발표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와 정책 제안.
- 4.15. [연대활동]제주 강정마을 인권지킴이. 5월 15일까지 지킴이 모집.
- 4.21. [기획]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량 인사하기 “반가워, 표현의 자유”
- 4.25. [운영]87차 정기회의
- 5.1. [입장]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_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발송.
- 5.14. [운영]운영진 회의
- 5.17. [입장]성소수자 혐오는 폭력입니다!\_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맞이 기자회견
- 5.17. [연대활동]쌍용자동차 범국민추모위원 인권활동가 참여.
- 5.22. [운영]88차 정기회의
- 5.25. [입장]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_재판부에 제출.
- 6.12. [연대활동]미선호순 10주기 추모 문화제. 13일까지.
- 6.12. [기획]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기 위한 인권단체 긴급회의
- 6.13. [기획]‘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 6.14. [입장]이명박대통령은 국민과 인권을 모욕하지 말라!\_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 기자회견.
- 6.14. [입장]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하니까\_노숙소녀 사망사건 위증재판 결과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6.15. [입장]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_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무죄선고.
- 6.16. [연대활동]함께걷자! 함께 살자! 함께 웃자! 희망과 연대의 날
- 6.18. [운영]인권단체연석회의 조직발전 TF팀 회의
- 6.19. [운영]89차 정기회의
- 6.21. [입장]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출범 및 새누리당 연임반대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 6.21. [기획]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가, 제 19대 국회가 열려라-제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발표회

- 7.24. [운영]90차 정기회의
- 7.30. [입장]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_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출.
- 8.13. [입장]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이명박 정권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길이 남을 것
- 9.6. [입장](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9.14. [입장]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 9.18. [운영]91차 정기회의
- 9.19. [입장]강정에 평화와 인권을 돌려줘야 합니다!-강정인권침해조사단 조사 발표 기자회견
- 11.6. [입장]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_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경찰청 제출.
- 11.7. [기획]인권입법정책과제 대선캠프에 우편 발송
- 11.14. [입장]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공간기구를 용납하지 않는다!\_인권시민단체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공간기구 개혁과제 기자회견.
- 11.20. [운영]93차 정기회의
- 11.20. [입장]삼성앞 합법집회방해 검찰에서 먼저 용서한다-삼성앞 집회방해건 무혐의 검찰 규탄 및 항고 기자회견
- 12.1. [기획]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는 ‘인권 10대 뉴스’ 10개만 뽑아주세요
- 12.10. [입장]세계인권선언 64주년 기념 <뫼없는 자들의 목소리> 기자회견-2012년 대한민국 10대 인권뉴스 발표

**2013**

- 1.21. [입장]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 2.5. [입장]경찰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강제연행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를 석방하라!
- 2.27. [운영]96차 정기회의.
- 3.14. [입장]전 국민 뺑 뜯는 시대의 코미디 경범죄처벌법 폐지하라!\_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국가인권위 민원제기 기자회견.
- 3.20. [운영]97차 정기회의.
- 4.9. [기획]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 4.15. [기획]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 4.24. [운영]98차 정기회의
- 4.25. [입장]국회의 이석기 의원,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반대한다
- 5.23. [기획]남대문경찰서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집회권리, 인권탄압 현실 규탄 집회
- 5.29. [기획]꽃보다 집회-시민들의 ‘집회의 자유’찾기 프로젝트
- 5.30. [기획]집회 자유 말할하는 남대문 경찰서 규탄한다!\_릴레이 규탄 집회.
- 6.4. [운영]99차 정기회의.
- 6.12. [입장]용서는 없다\_경찰의 대한문 집회방해행위 규탄 및 법적 대응 기자회견.
- 6.14. [기획]꽃보다 집회-시민들의 ‘집회의 자유’찾기 프로젝트 2탄
- 7.3. [기획]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 보고회\_5월 20일 공권력 투입 인권침해조사단 보고서 발표
- 7.5. [입장]<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_공권력감시대응팀의 질의서와 의견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7.10. [입장]도를 넘은 민주주의 파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_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 7.17. [기획]꽃보다 사람-집회의 자유 찾기 프로젝트 꽃보다 집회 3탄
- 7.18. [입장]5.29 ‘꽃보다 집회’에서의 집회방해, 폭행,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남 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에 대한 고소 및 고발
- 8.6. [연대활동]쌍용자동차 노동자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 참여

- 8.27. [기획]종북담론의 실체를 밝힌다
- 9.30. [입장]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 중단하라-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_국정원 중심 공안정국 비판.
- 10.8. [운영]100차 정기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개편에 관한 워크숍.
- 10.14. [기획]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는 멈춘다\_대한문 앞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퍼포먼스
- 10.17. [입장]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서울시경찰청 국감, 남대문서장과 최성영 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 10.18. [입장]집회를 혐오하는 나라, 집회를 방해하는 사회\_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집회시위 방해 망언 종합, 국정감사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피감기관만 만나고, 피해자 면담 없이 집회 혐오 발언 규탄 보도자료.
- 10.28. [기획]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_밀양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 10.29. [입장]경상남도 경찰청 국정감사에 즈음한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 결과 발표 및 국정감사 요구 기자회견
- 11.12. [운영]인권회의 촉진모임
- 11.19. [입장]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새누리당, 소위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강행 규탄
- 11.22. [기획]2013년 프로젝트 <그날들> 제안
- 12.10. [입장]세계인권선언 제정 65주년 기자회견-2013 인권의 그날들, 그네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2013 프로젝트 그날들 발표
- 12.18. [입장]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_서울시에 제출
- 12.19. [입장]박근혜 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박근혜 정부 출범 1년 경찰폭력을 규탄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2014

- 1.10. [입장]"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_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 총경 승진 규탄.
- 1.20. [입장]철도파업 정당하다! 현장 탄압 중단하라!\_철도조합원 탄압 중단과 파업·단결할 권리 보장 촉구를 위한 인권노동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 2.11. [기획]인권회의 촉진모임
- 2.12. [기획]"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 2.13. [입장]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3.5. [입장]'예견된' 죽음이 존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음속 차별, 그리고 혐오-정부는 선원 이주노동자 인력도입과 관련된 공적 시스템을 도입하라!
- 3.11. [기획]인권회의 촉진모임
- 3.25. [기획]시민을 감시하는 제3의 눈, CCTV-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 4.2. [입장]기룡전자노조 여성조합원에 대한 동작경찰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_민사2심재판부에 전달.
- 4.8. [기획]인권회의 촉진모임
- 4.15. [입장]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반대한다!-국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의무화"와 "전화서비스 무단중지" 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 4.23. [입장]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_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성명.
- 5.4. [기획]인권회의 촉진모임. 세월호 사건 관련 인권단체 긴급간담회.
- 5.9. [입장]청와대로 와 주십시오-5월 8일 세월호 유가족 청운동 앞 밤샘 집회 참여 호소문 발표.
- 5.12. [입장]"가만히 있으라" 고...계속?\_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단체 공동 기자회견.
- 5.13. [기획]존엄과 안전을 위한 범인권단체 간담회
- 5.13. [입장]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제공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5.15. [입장]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경찰의 불법 시위 삼진 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경찰의 불법시위 삼진 아웃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5.20. [입장]대통령은 말만 하고 국민은 말 못하고-세월호 추모시민 폭력 연행 경찰규탄 기자회견
- 5.21. [입장]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연호석 열사 장례식장 공권력 난입\_유골함 탈취 관련 성명
- 5.27. [입장]2013년 5월 29일 '꽃보다 집회'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 및 최성영 당시 경비과장에 대한 소송
- 7.8. [기획]인권회의 촉진모임
- 7.9. [입장]교육부는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7.14. [입장]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 7.17. [기획]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_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 8.4. [연대활동]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광화문 국민휴가
- 8.27. [입장]인권운동사랑방, 노동자전선 자유게시판 게시물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_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대해 의견서 제출.
- 9.16. [기획]인권회의 촉진모임
- 10.14. [기획]인권회의 촉진모임
- 10.15. [기획]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10.16. [입장]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검찰의 해명: 박근혜 정부는 사이버 사찰 금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 10.27. [입장]노동자와 시민을 감시한 경찰을 규탄한다!-정부는 차량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하라
- 11.11. [기획]인권회의 촉진모임
- 11.17. [기획]사영제도 폐지와 그 대안-19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11.25. [기획]2014 프로젝트 그날들 제안
- 12.1. [입장]국가보안법 체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2014년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12.2. [입장]'촛불 시민의 진정성'을 기계적인 유죄로 단죄할 수 없습니다-2008년 촛불집회 1심 판결에 대한 인권·사회·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 12.10. [기획]2014 프로젝트 그날들 배포
- 12.10. [기획]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2.11. [연대활동]2014 인권콘서트 공동주최
- 12.21. [입장]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_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규탄.
- 12.22. [입장]고공농성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지원은 인권조치입니다-쌍용차의 인도적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12.30.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관련 인권단체 긴급 모임

## 2015

- 1.13. [기획]인권운동장 토론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의미와 인권운동의 과제.
- 2.4. [입장]기자회견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 2.4. [입장]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2.10. [기획]세월호참사를 마주한 인권운동이 튼튼 씩\_인권운동장 워크숍.
- 3.1. [기획]3.1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의 날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인터넷 이용자의 독립(獨立)된 주권자(主權者)임을 선언(宣言)하노라"\_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발표. 거리행진 금지한 종로경찰서 규탄 집회.
- 3.4. [입장]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3.5. [입장]소년법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 규탄한다
- 3.10. [기획]인권운동장. 장그래가 장그래에게 "장그래, 그린라이트를 켜줘!"

- 3.30. [입장]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표현의자유연대와 공동 발표
- 4.3. [기획]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숍
- 4.7. [기획]사이버사찰금지법 1만인 입법청원운동 기자회견 및 입법청원 서명운동 개시
- 4.8. [입장]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_4.16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 촉구 인권옹호자 기자회견.
- 4.18. [기획]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시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한 정부를 규탄합니다\_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
- 4.20. [입장]사이버사찰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법청원 기자회견
- 4.23. [입장]세월호 추모를 훑쳐보지 마라-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
- 4.30. [기획]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기자회견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
- 5.12. [기획]인권운동장.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즘 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들어보자!
- 5.20. [입장]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입니다!
- 5.21. [연대활동]촛불교회 최한국 목사, 검 경의 집회 탄압에 대한 항의로 벌금 거부 및 노역 출두 기자회견
- 5.25. [입장]정보·수사기관 통신수사 권한 오남용 심각한 수준-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해\_미래부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발표에 대한 논평
- 6.1. [입장]국정원의 사상검증·양심 표명 강요 규탄한다-국정원 경력판사지원자 불법적 신원조사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6.19. [입장]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공안 총리 황교안의 첫 임무는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인가!
- 7.7. [입장]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_사이버사찰금지법행동 논평.
- 7.12. [입장]국정원, 국민들을 속이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해 왔는가!\_사이버사찰금지법행동 성명
- 7.21. [기획]인권운동장 네트워크 파티. 두근두근사교파티+토닥토닥힐링파티
- 7.23. [입장]인권은 가둘 수 없다\_박래군 활동가 구속규탄 및 석방촉구를 위한 인권활동가 공동기자회견.
- 9.8. [기획]인권운동장. 인권운동과 풀뿌리 운동이 만날 때\_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과 공동기획.
- 9.14. [입장]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인권침해 관련 의견서 국가인권위 제출
- 9.22. [입장]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_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등 노사정 야합 규탄.
- 9.23. [기획]노동개혁에 맞서는 인권운동의 고민을 나누는 간담회
- 10.7. [입장]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_사이버사찰금지법행동 성명.
- 10.13. [기획]인권운동장 토론회. 인권의 눈으로 본 노동개혁 토론회
- 11.10. [기획]인권운동장. 인권활동가대회 참여와 준비 제안. 2015 프로젝트 그날들 기획.
- 11.11. [입장]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유엔, 한국의 통신수사와 감청 관행에 우려 표명\_사이버사찰금지법행동 성명 .
- 11.13. [입장]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_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앞서 경찰 차벽 규탄.
- 11.15. [입장]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_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폭력 규탄.
- 11.30. [입장]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_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12.2. [입장]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_노동개혁,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 합의한 국회 규탄.
- 12.9. [입장]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 12.10. [입장]위헌적인 직사살수 및 살수차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12.10. [기획]2015 인권의 그날들은 외친다!-못살겠다, 갈아보자 프로젝트\_프로젝트 그날들 발표.
- 12.21. [기획]노동관련 5개 법안에 대한 시민 전문가 공청회공동주최

## 2016

- 1.12. [기획]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 방한 기자간담회
- 1.19. [기획]인권운동장. 섬세하고 담대하게 “반차별의 시선으로 인권을 보다”, 굵고 부드럽게 “변혁의 시선으로 인권을 보다“
- 2.12. [기획]인권운동장. 2016 총선을 맞이하며 인권운동 고민나누기.
- 2.12. [입장]청주시장은 행정대집행을 당장 멈추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라
- 2.18. [기획]‘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보고서 발표
- 2.19. [기획]인권운동장 후속 총선 대응 모임. 인권 올리고 당\_인권 올리고 가이드 제작 기획.
- 2.23. [입장]‘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 2.25. [입장]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 2.25. [입장]테러방지법? 사이버사찰,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카카오톡 압수수색 취소 결정 환영! 옹혜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 3.3. [기획]총선 대응 인권 올리고 가이드 만들기 워크숍
- 3.8. [기획]인권운동장. 총선 대응 인권 올리고 가이드 워크숍 후 만들어진 초안으로 심화 토론.
- 3.18. [연대활동]416씨네토크: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월 22일까지.
- 3.22. [입장]인권 올리고, 차별 내리고\_4.13총선 인권올리고 가이드 발표 기자회견.
- 4.25. [입장]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4.25. [입장]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 기자회견
- 5.10. [기획]인권운동장. 한강호 열사 대응 논의. 아이다호데이 준비.
- 5.19. [기획]유성기업 노동조합 농성 관련 인권운동이 함께할 수 있는 일 찾기 간담회.
- 5.25. [입장]현대차와 경찰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현대차의 노동자 괴롭힘 중단과 경찰 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5.30. [입장]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 시위
- 6.4. [기획]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
- 6.13. [입장]장애인 이동권은 인권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인권에 응답하라!-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6.14. [기획]인권운동장 토론회. 평등해야 안전하다-중첩된 혐오를 넘어 안전할 권리를 말하기
- 7.19. [입장]사드가 ‘외부세력’이다!-사드 배치 반대하는 성주 주민에게 폭력과 인권침해 사과 없이 사법처리 운운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 7.22. [입장]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40여개 인권단체들, 세월호 특조위 응원,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 8.9. [기획]인권운동장 네트워크 파티. 또!뒤희영~으샤으샤 힘내보자 파티
- 8.24. [기획]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재를 진단한다
- 11.1. [기획]인권운동장 토론회. 두고볼 순 없다, 박근혜가 임기 마치는 꼴을
- 11.2. [기획]2016년 인권10대뉴스를 꼽아봐요!\_2016 프로젝트 그날들 제안.
- 11.12. [기획]#광장행\_버스를 타겠다\_한겨레 신문광고.
- 11.22. [입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의 2심 재판부에 드리는 인권단체 의견서
- 12.15. [기획]2016 한국 인권현실을 말하다 “기억하는 우리, 멈추지 않는 인권”\_인권 10대 뉴스 발표. 프로젝트 그날들 배포.

2017

- 2.7. [운영]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에 관한 소속단체 간담회
- 2.14. [기획]인권운동장 토론. 촛불과 인권운동.
- 3.3. [회의]인권단체연석회의 전체회의
- 3.16. [기획]인권단체연석회의 전체회의 후속논의를 위한 간담회
- 3.31. [입장]세월호 인양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4.26. [운영]인권단체연석회의 전체회의. 신입 인권활동가 공동교육기획단 회의.
- 4.27. [입장]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된다!
- 7.6. [입장]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
- 9.19. [입장]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인권,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지은이 | 미류 량희 안병주 이은정  
 역은이 | 대용 미류 이은정  
 디자인 | 언제나봄그대곁에  
 펴낸이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이메일 | hrcomm2017@gmail.com  
 펴낸날 | 2018년 2월 28일